

제 1 회

천하도의 비밀



서주대우명명문 (西周大盂鼎銘文)



西周大盂鼎銘文(前1003)

佳 (同唯, 发语词) 九月, 王才 (通在) 宗周, 令 (通命, 册命之命) 孟. 王若曰: “孟, 不 (通丕pī, 训为大) 显 (训为明) 玟王受天有 (通佑, 保佑) 大令 (命), 在 (载, 过去) 玟王嗣玟乍邦, 【外门内辟】 (通辟, 除去) 毕 (通厥, 代词, 指代殷商) 匿 (通慝, 训为恶), 匍有四方

2. 事大主義

— 그 現代的 解釋을 중심으로 —

對談者 李用熙·申一澈

申一澈: 오늘은 이 선생님을 모시고 事大主義에 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대주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념의 혼란을 일으켜 왔고, 또 사실상 우리 韓國史 인식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通念上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은, 事大는 무조건 나쁘다는 고정 관념도 문제려니와 그 對概念은 自主다, 그러니까 事大냐 自主냐 하는 너무 단순화한 대개념도 문제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事大라는 관념과 事大主義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結着되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朝鮮王朝 시대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우리의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크게 구조적으로 변할 때마다 그 挑戰에 대처하는 우리 내부의 자세 설정에 항상 主戰派냐 斥和派냐의 심각한 대립이 생기곤 했습니다.

조선왕조의 건국 과정에도, 明·淸이 交替되던 丙子胡亂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 역시 事大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사대의 개념 문제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用熙: 「事大主義」는 물론이고 「事大」라고 하는 말까지, 요새는 어감이 좋지 않은 모양이지요, 어떻세요?

申: 事大라고 하는 말 자체까지도 좋지 않은 말, 「事大」를 저지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反自主分子를 연상시키는 정도까지 그 개념이 評價切下된 느낌이 드는데요.

李: 그러니, 어감이 고약한 사대주의라는 말을 어설피 다루다가는 뉘집어쓰기 꼭 알맞겠군요!

요새는 「事大」라는 말에서 「죽대가 없다」는 뜻으로 「事大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사대주의」에서는 사대주의적 인간형, 곧 權力을 上典으로 우리러보고 따라 다니는 하잘것없는 인간의 型으로까지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한편 역사학계에서 보면 日帝 시대에는 韓國史의 특징을 사대주의로 보던 총독부 御用의 일본인 학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意圖야 명백한 것이 아니겠어요.

申: 「사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 우리가 나쁜 의미로 통념화해서 통용해 왔다기보다는 다만, 日帝官學者들이 韓國史를 사대주의적 성격을 가졌다고 왜곡하기 위해서 사용한 역사 해석상의 가장 대표적인 概念 규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네들 나름대로 植民地史觀的인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事大主義 위주의 한국사 해석의 틀을, 우리도 별로 반성이나 재검토 없이 踏襲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通說 중의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시원치 않은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씨 5백년간에 쓰인 「事大의 禮」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新舊 두 가지의 語義·어감을 동시에 채택하려면 딜레마에 빠지겠죠. 다음은 李成桂의 「四不可論」의 「以小逆大」인데……이 「以小逆大」라는 것이 당시 어떠한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장차 丙子胡亂 때의 例와 더불어 한 번은 언급해야 되겠지요. 「以小逆大」를 말한 李成桂는 事大主義, 王과 崔瑩 장군은 自主였다고 하는 식으로 소박하게 위화도 회군 전후를 해석한다면, 그건 이미 역사의 진정한 이해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고려의 對元과 對明의 二重外交 정책과 관련해서 對明 관계가 악화되고, 마침내 鐵嶺衛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 고려가 遼東討伐의 계획을 세우자 폐지했던 元나라 服飾을 다시 국민에게 입게 한 것으로도 自主對事大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戰略적으로 보면, 아마 四不可 중의 對明·對倭寇의 양면 작전의 위험이 있다고 한 대륙이 연구 거리가 되겠지요.

그것은 그렇고 사대주의를 역사의 문맥에서 보려면 우선 개념의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事大에는 현실적인 事大 관계라는 사실의 면이 있고, 또 사대의 제도라는 면도 있고, 또 끝으로 사대 관계를 정당화하는 思想과 理念의 면—곧 사대주의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日本 御用學者 중에는 사대주의를 한국 역사의 특정한 경향 또는 방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나는, 사대주의는 역사적 가치관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대주의의 밑바닥은 「事大」인데, 사대는 요컨대 나라 사이

의 관계를 上下의 序階의 관계로 놓고 그 관계를 朝貢·聘問의 禮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대의 현실적이며 역사적인 관계가 바로, 사대의 禮 혹은 사대주의 가치 관념과 그대로 부합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념과 현실은 서로 乖離되기 쉬운 법이죠. 몇해 전 하아버드 대학의 페어뱅크 교수가 편찬한 《中國의 世界秩序》라는 책에 여러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었던군요. 사대 관계라는 것은 현실에 그대로 타당한 例가 적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 많았습니다. 그야 그럴 것이고, 사대의 가치관은 본래 「字小事大」 곧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긴다」는 儒敎의 倫理觀·德治觀에서 이룩된 가치관인데, 이런 윤리 가치관이 현실에 그대로 타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애당초 사대니, 사대의 예니 하는 제도나 가치관은 출발서부터 유교적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면—秦始皇 이전, 곧 先秦 시대라는 까마득한 옛날 중국에 있었던 책에 이미 사대의 모델형이 나오는데, 다만 《墨子》《國語》나 《韓非子》 같은 儒敎 계통이 아닌 文獻에는 以小事大를 힘의 強弱에서 보고 있는 데에 反해 《春秋》의 《穀梁傳》《左傳》《孟子》《周禮》 같은 문헌에 보면 「事大의 禮」는 다시 말해 국제간의 法이며, 단순한 물리적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가치관이 나옵니다. 적어도 先秦 文獻을 참고하면 事大의 理念化 혹은 가치관은 유교 계통이고, 그것도 《左傳》같이 非유교적인 事大觀이 삽입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戰國 시대의 문헌들입니다. 《周禮》 같은 것은 朝覲·聘問에 대한 번거로운 儀式節次가 상세한데, 《周禮》도 현재로는 戰國 末에 생긴 책이라는 것이 대체로 통론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혹은 전국시대에서 평화로운 統一天下를 꿈꾼 유교 이데올로기 같은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群雄이 割據해서 매년 전쟁만 하고, 사회의 紀綱은 문란해지고, 전통적인 身分의 질서도 붕괴하던 시절에 儒敎徒들은 세상이 무질서할수록 더 강렬히, 天子를 중심해 諸侯의 나라가 서로 上下 序階의 禮로써 평화적으로 같이 사는 국제적인 평화 통일 세계를 꿈꾸었으니 말입니다. 이 경우 禮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公法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王道의 德治로써 이룩된 질서 있는 국제 사회의 法이라는 의미죠. 재미있는 것은—이 소위 事大의 禮, 곧 나라 사이의 법은 본래 좁은 의미의 천하, 다시 말해서 中國文化圈에만 적용되던 것이지, 夷狄 곧 오랑캐에게도 적용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春秋戰國 시대의 禮를 자세히 살펴보면 朝覲·聘問 등등의 예는 엄밀히, 天子와 諸侯間에 실시되는 것이며, 圈外の 소위 「야만인」 「오랑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을 다만 準用한 따름이지, 굳이 엄격하게 실시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韓中 관계도 宋朝까지는, 事大의 禮라는 것도 중국측이 엄격히 요구하기보다는 半島측에서 부지런히 지켜서 文化國다운 체모를 갖춘 편이 있습니다. 外國 異民族에 대하여도 事大의 禮를 昭詳히 규정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明나라 이후의 일이죠. 하여간 그 당시의 사대의 예라는 「禮」는 요새 의미와는 달라서 오늘의 國際公法 같은 의미였습니다.

② 傳統社會에서의 事大의 禮

申: 지금 禮는 일종의 우리 전통 사회, 특히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전통 사회에 있어서 국제 規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儒學이라든가 中國哲學 같은 데서 이해한다면, 인간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禮를 국제 관계로 확대시킬 때에도 禮가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禮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陳腐한 것으로 생각되고, 對人이나 나라간의 행위 규범으로서 「禮」의 규범이 지닌 중요성을, 오늘 우리로서는 잘 남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던 지난날의 東北亞文化圈 속에서 힘·폭력에 못지않게 「禮」가 큰 비중을 차지한 禮의 질서였다고 여기는 때에는 우리로서 무언가 앞서 전제해야 할 전통 사회 나라간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禮」를 否定하고 나면 폭력이 亂舞하는 사회, 또는 物理的 힘에 의한 弱肉強食하는 사회 집단, 또는 나라 간의 관계를 긍정하게 된다는 歸結로 말려들게 되는군요. 나라간의 관계를 규범하는 禮의 규범이 있으므로 東北亞 국제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본다면, 禮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그 논리가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인간 관계는 대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上下間에 있어서의 恭敬之禮라고 하는 것과 對等한 관계에 있어서 和

144 韓國民族主義

平之禮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君臣 관계라든가 父子 관계 같은 것은 上下의 恭敬之禮라 하고,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和平之禮로써 이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禮에 있어서 나라간의 힘의 관계의 大小가 뚜렷할 때에는 恭敬之禮로써 그 규범을 삼고, 그 힘의 규모가 균등할 때에는 和平之禮로써 그 관계가 規範化하는 듯싶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事大」와 「交隣」이라고 하는 對外 관계에 대한 二元的 규범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너무 우리 한국사의 해석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서, 넓은 「事大的」文化圈 자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무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李: 재미있는 생각이올시다만 너무 단순화한 느낌이 드는군요. 간단할까 좀 의문이 있어요.

애기가 좀 散漫해지겠습니다만 꼭 메인 애기가 아니니까 애기들 하면, 「禮」라고 하는 概念은 본래 사람 관계가 아니지요. 語源부터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이나 귀신을 섬기는 방식을 「리」(禮)라고 했지요. 그래서 「禮」를 履—곧 「밧을리(履)」와 연결시킵니다. 인간이 밧아야 되는 것, 따라서 禮의 原意味는 하늘이나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섬기고 舉動하는 방식이 「禮」라고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미쳐 가지고 사람 사이의 중요한 거동의 형식도 「禮」라고 하게 된 것이지요.

申: 祭祀로부터 유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李: 그러문요!

申: 그래서 禮樂과 일치하는…禮와 樂을 같이 얘기하는 것…

李: 그것이 原始的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禮는 그 당

시에 말하는 禮, 조그마한 禮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원 禮는 그런 禮가 아닌 것이, 지금 남아 있는 儒敎의 三禮(의 經典)를 보면 凶禮·吉禮서부터 聘禮 등등 별별 禮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吉禮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관한 것—嘉禮라는 것, 凶禮는 송장치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 갖가지 禮가 있는데, 그 「禮」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떠한 일에 꼭 맞추어서 해야 되는 행동의 방식이 포함됩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대도 禮다 하는 경우는 무엇이고 하면, 나라가 나라를 대하는 데 있어서 꼭 밧아야 되는 행위의 방식, 곧 규범이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式의 禮觀念으로 字小事大를 이데올로기化하는 경우, 事大는 단순히 大國에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禮다운 儀式·節次·規定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적어도 가치관으로 전개된 <事大的 禮> 혹은 역사적인 사대주의는, 특정한 형식·절차·규범과 가치관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간혹, 事大를 논하는 학자가 事大的 從屬 관계를 置重해서 말하고, 또 한편 朝貢은 조공대로의 기능을 논하곤 하는 것은 문제의 구조적 연관성을 보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기는 事大的 禮라는 관념이 유난히 유교적이고 그 派의 所産인 때문에, 소위 事大的 禮에 관한 여러 가지 자세한 규정—春秋·戰國 시대의 규정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나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아예 《周禮》나 《儀禮》나 하는 儒家의 經典이 대체로 戰國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더우기 그 자질한 규정은 儒家의 形式主義

146 韓國民族主義

를 반영한 면이 두드러지니까, 그것을 실제에 그대로 對應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있겠죠. 그러나 先秦 시대의 史籍을 勘案해 보면 「事大의 禮」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식·절차·규범이 이미 보입니다. 가령 朝覲—아랫나라가 天子 혹은 윗나라에 가서 뵈는 법, 賓禮—손님 다루는 절차·형식, 貢禮—토산물을 바치며 위를 섬기는 禮, 그러니까 以小事大는 身分社會에 알맞게 외교 관계의 절차와 방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외교적 성격이 강한 면은, 마치 오늘날 外交使節의 身分이 그 사절의 임무에 맞지 않으면 외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듯이, 《左傳》같은 데에 보이는 소위 會盟의 장면을 보면, 그 회맹에 알맞은 신분의 대표가 오지 않으면 事大의 禮에 어긋난다고 해서 懲罰의 대상이 되었죠. 말하자면 이 레벨에서는 외교의 方式인 면이 강하게 나옵니다.

③ 天下는 單元的이라는 思想

申: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인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용어를 빈다면, 外交 慣例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李: 그렇지…… 國際間的 關係니까…… 물론 「外交」라는 요새 말을 쓰는 경우, 현대의 외교와는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새 쓰는 「외교」라는 말은, 유럽의 사상과 나라 관념을 새로 받아들인 후에 나온 말입니다. 소위 主權國家로서의 나라는 평등하니까 평등한 나라끼리의 관계라는 데에서 「외교」라는 관념이 나오죠. 그런데 事大의 禮에서 주체가 되는 나라는, 이른바 근대국가로서의 주권 국가의 개념이 아니거든. 애당초

「외교」라는 말부터, 臣下가 君主 몰래 남나라와 통한다는 式의 나쁜 의미로 썼거든……나라라 하는 경우, 東北亞의 문화 관념에서는 소위 「天下」가 있고, 또 諸侯의 나라인 「國」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근대국가라는 의미의 「나라」 관념은 中國文化圈에선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天下」「國」의 두 개의 나라 관념도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 곧 「天下」 속에 「國」은 있어야만 된다는 식의, 包攝 關係에서만 이해되던 나라 관념이죠. 물론 「天下」 속에서 그 위치가 애매하여, 포섭되는 것도 같고 혹은 포섭되지 않는 것과는 같은, 소위 夷狄의 外國이 있죠. 중국의 史書를 보면, 이러한 외국을 표현하는 데에 별 수 없이 「나라(國)」 字를 援用 했어요. 자기네와는 다르지만 표현은 불가불 자기의 下位의 나라 관념을 빌어 썼던 것인데, 이 점은 古代 그리스인이 자기네의 독특한 都邑國家 관념인 「폴리스(나라)」라는 말을 東方의 非都邑國家에 대하여도 별 수 없이 원용한 것이나, 유럽인이 유럽의 아닌 아시아 사회의 나라를 자기네의 독특한 정치 관념인 「네이션(Nation)」「스테이트(State)」 등으로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이야 표현의 不可不得已한 것이지만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마치 나라의 성질이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같은 정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誤謬를 犯하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점이, 정치학도들이 따지기 쉬운 학문상의 陷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事大의 禮라는 경우, 그것에 앞서 前提되어 있는 나라 관념은 애당초 序階의 관념으로 그 위치가 규정된 그러한 나라이고, 따라서 「朝」나 「貢」이니 「聘」이니 하는 여러 가지 행위 방식

도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나라의 위치에 따른 尊卑의 관계가 있는 말이었죠. 물론 관념적이거나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평등한」 나라끼리 모여 구성되고 있다고 믿고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上下와 尊卑의 위치에서 서로 관계를 짓는 국제 사회라는 관념은 적이 저항을 느낄 대상일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나라가 下國인 것을 자인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나라와 국제 사회의 개념으로 분류적이라고 느낄 것이예요.

하여간에 事大의 禮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제도로나 또 가치관으로서나 나라 사이의 법이요, 동시에 「天下의 法」이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아예 「나라」라는 개념이 單一하지 않고 上下의 관념을 內包하고 있었고, 게다가 「天下」라는 관념은 理念에 있어서 單元的이어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천하」라는 것은 개념상 모순된다고 생각하였겠죠.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는 「천하」라는 단일한 文化圈의인 나라 관념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고, 또 單元的 天下로 모든 나라를 흡수하고 포함할 수도 없었지만, 理念으로서는 어디까지나 天下는 하나요 둘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가 분열한 소위 戰國 시대나 정권 교체기의 「천하」라는 관념은 결국 「나라」로부터 「文化社會」라는 정도로 개념이 바뀌게 되고, 또 「천하」 밖에서 雄據하던 다른 문화, 다른 민족에 대하여는 「蠻夷」라는 차별 관념을 내세워서 例外視하게 되었죠. 하기는 다른 문화, 다른 형식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蠻夷視는, 고대 그리스·유럽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말하자면 역사의 類型을 따랐을 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나라 관념 속에 상하의 두 단위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上位의 나라가 천하의 중심이며 천하는 단원적이라는 사상인데, 「事大의 禮」라는 독특한 국제 관계의 형식은 바로 이러한 나라 관념 위에 서 있던 것이죠.

申: 事大의 禮가 大小 나라간의 이른바 「外交上の 節次」 면에 잘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天下의 法으로서 「事大」에 어긋나는 절차, 행위 樣式에서 오히려 많은 나라간의 문제가 惹起되었다면, 그 史例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④ 價値基準으로서의 禮法觀念

李: 요컨대 事大의 禮라는 것은 儒家에 의해서 가치관으로까지 昂揚된 名分이고 理念이 되었을지언정, 명분이 되기 전에도 중국 文化圈에서는 慣例·규율로 있던 모양이예요. 先秦時代의 禮를 참고해 보면, 나라 사이의 外交的 規範으로서 事大의 절차를 밟는 데에, 소위 化外の 오랑캐라는—즉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非中國의인 주변의 나라가 제대로 事大의 형식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化外の 民, 곧 야만인이니까 약간 禮에 어긋나더라도 봐 주어야 된다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요컨대 事大의 禮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시 중국 나라들끼리의 예법이었던지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 문화권 밖에 있는 나라와도 사귀게 되니까, 상대가 事大의 예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文化」를 欽慕하는 限 그 예법을 準用하되, 자연 엄격한 적용을 피하였던 것이죠. 이런 先秦時代의 禮는 班固가 지은 《前漢書》匈奴傳에 명백히 政策視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蠻夷는 臣下國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政

150 韓國民族主義

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正朔을 加하지 말고 적당히 대우하
되, 大義를 흠모해서 貢物을 바치러 오거든 예의로써 대하라 하
는 것이죠. 말하자면 事大의 禮는 文明國 사이의 法이로되 蠻夷
에게도 때에 따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마치, 19세기까
지도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들의 國際公法은 基督敎의인 문명국
에만 限하는 것이지, 「야만국」 곧 아시아 등의 나라엔 適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럽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非유럽 나라에 대한 특
혜, 또는 그 나라의 문화 정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東北
亞 사회에서 事大의 禮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대가 文化圈에 들어
온 것을 의미하고, 또 문명국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明治 이래 유럽 기준의 문명국으로 점차
인정되고, 또 그래서 유럽 國際法 사회의 一員이 된 것을 得意揚
揚한 것과 똑같이, 事大의 禮라는 중국 국제법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면 주변 나라들은 意氣揚揚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어느 국
제정치 체제에 속하였었거나 하는 문제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좌우간 事大의 禮라는 것은 架空이든 實際이든간에 대체로
그 根幹은 이미 先秦 시대에 확립되고, 그 가치관은 漢나라 이래
儒家의 이데올로기로서 더욱 鞏固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
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事大의 관념에는 儒家式의
예법 관념 외에 《墨子》《韓非子》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 힘에
의한 관계로 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소위 霸道죠. 이런 힘의 강
약에서 오는 나라 사이의 관계는 물론 현실 관찰에서 오는 것이고,
이데올로기로서 昇化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儒家는,

이러한 현실을 자기들의 王道思想에 의해서 일단 否定하고, 그것
을 다시 高次的인 예법 관념으로 승화시켜 국제 질서의 가치 기
준으로 轉換시킨 것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사대 관념
은 예리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이 두 개의 사대
관념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名分으로서의 事大의 禮는 어디까지
나 가치관이며, 국제 질서 유지의 法概念인 데에 대해서, 실력 관
계로서의 事大는 어디까지나 강약 관계며 현실의 힘의 문제지 명
분은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중국의 南·北朝時代, 元·明 交替
期, 明·淸 교체기에 나타나는, 우리 나라의 중국 정권과의 事大
의 갈등이었죠. 명분으로서의 事大의 예법에 대하여는 先人들의
意識에 하등 굴욕감이나 열등 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
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유럽적인 국제법 사회
에 속해 있는 것에 조금도 굴욕감을 안 느껴듯이, 先人들도 그러
한 사대의 국제 질서는 당연하다고 의식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약 관계, 힘의 관계에서의 사대는 명분을 缺하는 것이
라고 해서 크게 고민하고,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가명 丙子胡亂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崔暹川 같은 主和派가
있었고, 三學士 같은 主戰派가 대립되었는데 얼핏 보면 主和派는
事大派 같고 主戰派는 自主派 같은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데,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三學士는 물론이요 金淸陰
같은 主戰派·斥和派의 의견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명분, 곧 明
나라를 섬기는 事大의 명분을 버리고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항복
하느냐 하는 것이며, 主和派의 이유는 현실적으로 抗戰할 수 없으
니 保國安民의 길을 취하자는 것이었죠. 그 主和派가 仁祖에게

여러 번 國防態勢의 조속한 확립을 재촉하고, 또 항복 후에도 明나라와 內通하여 형세를 뒤집으려 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요컨대 문제는 많습디다만 事大만 가지고 말한다면, 주전파는 사대의 禮라는 명분을 위하여 나라가 망하더라도 抗戰해야 된다는 것이 돼서, 철저한 사대주의의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힘에 의한 사대는 철저히 排擊한다는 것이 되니까 逆으로 이른바 명분으로서의 사대 관념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이 어지간히 이해됩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으로서의 事大의 禮는 오히려 固守할 만한 일 이요, 이에 反해 힘에 의한 事大는 굴욕이요 수치였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사대주의의 語感이 나쁜 것은, 명분으로서의 禮法 관념이 유교 문화권의 붕괴에 따라 사라지고, 오로지 힘에 의한 사대 관념만 현실로서 남게 된 결과일지도 모르죠.

물론 명분으로서 事大가 어느 정도로 역사의 실체에 타당하였느냐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의 정권이 사대를 요구할 때 그것이 예법과 명분에만 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역사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현실적으로 힘에 의해서 從屬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슴치 않았던 例로 明나라 때의 安南 관계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사대주의라는 가치관·명분·사상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달랐던 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申: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전통 사회에서 우리의 조 선왕조 시대에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이지만,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상의 절차나 또는 그 문서의 書式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서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사소한 것인데도) 그것이 아주 거창한 국가 관계의 악화를 가져 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戰亂을 야기시킨 일도 많이 보아 온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 이박사님께서 말씀하신, 天下의 법규의 原型을 유교의 경전에서 볼 수 있었다, 그 禮의 개념에 의한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中華文化圈의 理解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 온다는 말씀이 제쳤습니다. 그 문화의 큰 圈域 즉 「場」의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場」이란 것은, 중국 사람들이 「天下」 또는 「四海內」라고 불렀던 문화권 領域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교에서 대개 보면, 修身齊家治國平天下해서 修身에 그 「身」, 즉 우리 인간의 「個體」가 있고, 그 다음에 「齊家」 「집(家)」字, 그 다음에는 「治國」이니까 「나라국(國)」, 그보다 큰 영역으로 「天下」의 네 가지 집단의 단위가 과거 東아시아 文化面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집단 개념이라고 할까, 집단의 단위가 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단위 사이에는 엄연한 序位가 존재하고, 또 그러한 이데올로기하고 그 制度 자체에서 一絲不亂하게 「나라」, 즉 國으로서 국가간의 圈內 관계가 영위되어야 한다는 도리가 다름 아닌 禮였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는, 天下의 法에 해당하는 禮라고 하는 어떤 규범, 그 규범의 母體가 혹시 東北亞文化圈에서 序位集團의 단위에서 「집(家)」, 그 「집」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中國 倫理에 있어서 상하 관계라든가, 그 밖의 윤리적인 관계가 대개는 「父子有親」이어서, 오히려 부자

간의 관계들 기본으로 생각한 家父長的 성격의 모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대되어 나라 안의 上下 規範으로서 「忠」, 나라간의 규범으로서 「事大」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팎의 질서나 천하의 질서에 있어서 언제나 그 모델로서 父子之間의 상하관계, 그 「孝」의 규범이 모체가 되어 「忠」도 「事大」도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이 東北亞의 中華 문화권에 있어서의 나라간의 규범도 결국은 「집」, 즉 家父長的 질서의 확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⑤ 上下의 序階로 秩序 주는 事大의 禮

李: 집이라는 집단이 전통적인 동양 사회의 中樞였던 것은 틀림이 없죠. 물론 이 경우 집·家族은 요새 있는 核家族이 아니라, 大家族으로 형성되는 집이죠. 이 대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는 非但 동양 사회뿐 아니라 農耕 사회의 어느 단계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유럽 中世도 그랬고…… 또 上下관계, 序階 관계를 父子와 같은 인륜관계로 표현하는 것도 농경 사회를 토대로한 국제 관계의 類型이 아니겠어요? 아마 이 문제는 노동력을 集約적으로 投入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農耕生産 방식을 중심한 사회 구조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事大의 禮가 가족 제도의 확대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하고 말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군요. 우선 이 事大의 禮라는 것을 담고 있는 國際政治 질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내 책에서도 잠깐 언급한 일입니다만, 사대주의에는 여러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等閑視된 면에 국제 정치적

질서의 면이 있습니다. 본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는 달라서 일종의 아나키다, 無秩序·無政府의 상태다 하는 것이 유럽 학자의 통행설인데, 이것이 바로 근대 유럽의 국제 정치를 말한 것은 될 수 있긴 하지만 국제정치 일반의 형태는 아닙니다. 대개 국제 정치를 秩序 주는 경우를, 그 구성 요소인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치의 頂點이 같은 上位體를 두고, 그 아래 나라를 두어서 질서를 주느냐, 아니면 모두 평등한 일장에서 질서를 형성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또 上位體를 두는 경우도, 나라 중의 한 나라에 上位權을 주느냐, 아니면 非國家體에 상위권을 주느냐, 또 細分하면, 상위권은 물리적 힘으로 強制力이나, 아니면 복종을 받게 되는 權威에 의한 것이냐. 권위에 의한 상위체로서의 예는 아마, 中世의 로마 法王 廳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국제 정치에 있어서 사대주의는—한 나라에 상위권을 주어 그 나라의 圈域과 위치를 다른 나라와 구별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위체, 혹은 上位國을 선정한 예도 있습니다. 가령 앞서 든 中世—로마 法王 廳, 東로마 帝王, 이슬람 世界의 칼리프(일종의 法王) 制…… 이러한 상위체 설치에 대립되는 것이 근대 유럽史에서부터 시작되는 주권국가 사이의 세력 균형의 원칙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세계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平等國家」간의 세력 균형의 원칙은 아주 새로운 것이죠. 그런데 상위체를 설정해서 국제 질서를 도모하는 국제 사회에서는 상하의 관계를 父子로 표현하는 예가 아주 흔합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가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잔틴 帝國 중심의 국제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156 韓國民族主義

자기 文明圈 밖의 다른 나라, 소위 「야만인」에 대하여 그것이 강대할 경우에는, 「형제」라고 칭한 것도 東北亞 사회나 비잔틴 사회가 서로 같습니다. 또 야만하고 미개한 나라의 國書에 대하여, 化外の 민족에 대하여 그들의 칭호를 그대로 불러 주는 例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事大의 禮가 통용하던 東北亞 사회에서 상하 관계들 父子 관계로 표시하던 것이 實은 국제적인 例中の 하나였을 뿐 아니라, 애당초 事大之禮의 骨子인 上下 序階에 의한 국제 질서의 절차·형식은 이상스럽게도 중세 유럽·이슬람사회·東로마敎 사회가 모두 그랬습니다. 事大의 禮는 이렇게 보면 국제 정치 질서의 한 역사적 類型인 면이 있죠.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신 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말하자면, 집이 대가족일 뿐 아니라 「國」「天下」가 모두 나라이되 그 의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새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先秦 시대로 보면, 「國」이 諸侯의 나라인 것에 대하여 「天下」는 天子의 나라이죠. 이 경우 「國」과 「天下」의 관계는 단순한 上下라기보다 포섭 관계인데, 그렇게 된 이유의 하나로서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西周王國의 성립을 보면, 殷나라를 이긴 후에 자지에 功臣·親戚을 보내어 소위 「封建」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諸侯의 나라는 그 탄생서부터 周나라 속에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성립된 셈입니다. 이것이 소위 「邦國」이니까, 周나라 같은 優位의 나라가 그 세력을 미치는 곳이 천하가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中國史의 형성에 있어서의 상황이 上下·序階的인 나라 개념을 가능하게 하고, 나라 개념의 이중성을 결

정한 셈이죠. 뿐만 아니라 周나라의 諸侯國을 보면, 姬姓의 親族 諸侯 아니면 周나라 宗廟에 참배해야 되는 功臣諸侯였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가족 관계가 天下와 邦國의 핵심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기는 애당초 事大의 禮는 그것을 구성하는 나라는 물론이요, 그 국가 형태를 버티고 있는 사회 제도 곧 신분 제도의 縝密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신분 사회의 가족 개념이 확대됐다는 면도 있겠죠. 天子는, 《左傳》에 보면 天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天王」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린다는 뜻이겠고, 「皇帝」의 「帝」도 본시는 上天에 있는 祖上神을 가리킨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天命에 의한 天子의 통치라는 것도 祖上神 곧 가족 개념에서 볼 수 있는 면도 있죠. 하여간 戰國 시대에 오면 정치에서 上下의 序階가 깨질 뿐 아니라 사회 각층의 대변동이 생기는데, 이때 往古의 질서 있는 국제 정치를 되돌아보고 숭상해서 마지않는 유교의 무리가, 상하의 序階로 질서 주는 事大의 禮를 구상한 것은 알 만하지 않겠습니까?

申: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天子라든가 帝와 諸侯와의 관계, 또는 그러한 王들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대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華大가, 현대적인 관념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날 세력 균형이라는 權力政治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지만, 小側에서 보면 언제나 大를 섬기는 측면만이 일방 통행적으로 중요되어 온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개념이 評價切下되는 것 같습니다.

李: 그것은 韓國史的인 입장에서 보아서 그렇지요.

申: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以小事大〉라고 할 때에, 弱小者가 强者에 대드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라는 면 이외에, 事大의 禮를 갖추므로써 약소한 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父子間의 윤리적 관계를 확대시켜서 大·小國간의 윤리 규범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켜야 할 도리는 다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것이 전통적 文化觀念上 大·小나라 간에 지켜야 할 當爲요, 外交規範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小側에서 事大의 禮를 지키므로써 이득이 무엇이었을까에 관심이 갑니다. 제가 上下關係에서 아래 쪽이었던 한국사예의 입장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를 我田引水格으로 해석할 실마리를 얻는 데에 너무 골몰한 것 같습니다만…….

※: 지금 나는 가능한 한 事大主義를 그 역사의 문맥에서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참이니까, 그 功過를 따지는 것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事大에는 名分으로의 事大가 있고, 명분 없는 힘에 의한 事大의 현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치 관념 혹은 이해올로기고, 또 하나는 단순한 힘의 부족, 힘의 위협 아래에 생기는 현실과 그 적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명분으로서의 「事大의 禮」는 우리 王朝 變에 깊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러한 명분으로서의 가치관에는 事大의 禮로써 무엇을 얻느냐, 實利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명분이요 이해올로기요.

또, 이런 명분으로서의 事大는 남만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씨왕조의 至重한 명분의 하나가 事大였던 것은 李成桂의 不可論도 있어서 남득이 가는데, 梁誠之의 세조에게 바친 건의문

에 보면, 꼭 지켜야 될 것으로서 事大의 명분과 더불어 朝鮮 古俗을 따라야 한다는 조목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事大와 자기 고유의 전통의 유지는 서로 상치될 것 같은데, 이왕조 초의 사람들은 사대의 명분과 전통의 固守는 공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왕조 초에 高麗野史의 전통을 받아 우리 역사를 檀君時代로부터 이해한다는 풍조도 재미있는 일이지요. 물론 단군 이야기는 一然 스님의 문적에도 나오고, 아마 항간에는 그 전부터로 당겼을지 모르지만, 事大의 명분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단군시대로부터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 전통의 고수를 주장한다는 점이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事大가 굴욕적인 것은 명분이 아니라 힘으로 강요된 事大의 현실인데, 이러한 명분과 현실은 고려와 遼·金·元, 朝鮮과 淸 사이에 여러 번 나타났죠.

이렇게 보면 事大의 명분 의식이라는 古人들의 의식 구조를 생각지 않으면 그 實利論의 의미를 전개하기 어려운 것이요. 명분을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강경한 斥和派에게 실리론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결과로 보아서 事大의 禮가 무슨 이득을 나라에 가지고 왔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볼 만한 일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느니보다—좋아서 자진해서 朝貢을 바치고 事大의 비굴한 儀禮를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으니, 무슨 실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 많죠. 요컨대 사대의 명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요. 마치 新·舊教로 인한 프랑스 內亂 때, 설마 하니 信教 문제로 목숨을 걸고 나라가 양분돼서 싸울 리 없으니, 필시 감추고 말하지 않는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따위요. 하여간 결과로 보면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본래 字小事大의

「字」는 사랑「慈」입니다. 그런데 事大의 禮의 모델이 형성된 先秦시대 儒家의 설을 따르면 事大는 信이요, 字小는 仁이라고 했어요. 大國은 仁으로 관후하게 小國에 접하고, 소국은 信으로 대국을 대하여 배반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간의 信義로 해석한 셈입니다.

《孟子》에 보면 事大는 畏天이요, 字小는 樂天이라 했는데, 事大의 禮를 上天의 뜻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죠. 마치 三綱五倫이 上天의 뜻이고 君臣父子의 관계가 역시 하늘의 뜻이듯이 事大의 禮를 天命思想에 붙인 것이죠. 이 결과로 국제 정치 질서의 권위면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한 질서의 유지가 아니라 권위에 의한 면이 강해서, 이런 점은 국제 평화의 유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실효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事大의 禮에 참가함으로써 中國天子의 冊封을 받고, 王權이 공인됨으로써 다른 나라에 대한 위신을 높인다고 하죠. 또 한참 유행한 설로는, 自由交易이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서 朝貢을 통해 국가 무역이 가능하고, 조그만 나라는 무역의 實利도 본다는 것이 있으며, 그렇다 는 의미의 문헌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예도 있겠죠.

宋나라 蘇東坡가 이 점에서 고려를 헐뜯은 것은 모두 아는 일이지요. 또 《明史》에도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李氏王朝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가령, 仁祖의 《對清答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全海宗 교수는 對清關係에서 朝貢이 경제로도 불리했다는 논문을 냈더군요. 힘에 의한 事大의 경우, 朝貢은 그야말로 착취이거나 가혹한 貢賦요, 한편 명분 관제인 경우 여러 가지 이익이 小國에 있었던 게

대체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政權과의 관련이죠.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약간의 정리를 해가면서 말할 필요가 있군…….

보통 우리는, 나라라고 할 때 나라와 정부, 혹은 정권을 구별하는 것을 잊기 쉽죠. 하기는 나라와 정권을 구별하는 건 近代民主主義 이론에서 확립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이론을 적용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론 나라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론 그 당시의 정권이 해석한 식의 이익이죠. 나라의 유지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정권의 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事大의 禮라 하여도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보면 정권간의 상하 관계며, 또 그런 관계의 국제적 실정에 따른 정권의 공동 유지의 면이 강합니다. 실제의 예에서 보면, 중국은 上國의 자격으로 藩國의 정치 질서를 감독하고 간여하는 면이 있었어요. 소위 王位의 찬탈이 있는 경우 그것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무력을 발동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安南史의 경우죠. 고려 말에 왕위의 불법 제승을 明나라가 여러 번 따진 것은 모두 아는 일이지요. 天子의 冊命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보면 王權의 正統性의 인정이며, 동시에 干涉權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치 사상으로 보면 內政干涉이니까 그것을 받는다 것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대주의 국제정치론의 문맥에서는 오히려 王朝의 유지를 밑받치는 支柱의 역할이 있어서, 왕조로는 일단 책명을 받으면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간섭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實力이 따르지 않으면 찬탈을 해도 결국

새 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시다만, 하여간 미묘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事大의 禮는, 신분 사회의 上部權力構造로서의 王朝政治의 현상 유지를 꾀하는 명분인 면도 있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의 上國과 그 상국의 책봉을 받은 小國사이의 관계로 나옵시다만, 事大의 禮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분 사회의 王朝類型이라는 정권 형태를 유지하는 구실도 합니다. 하기가 北朝·遼·金·元·清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 上國의 행세를 하는 경우, 그 出자가 儒敎的인 명분으로 粉飾하기 어려워 급기야 事大의 명분은 힘에 의한 사대 문제로 바뀌고 따라서 국제정치적 긴장 상태가 발생합니다만, 그것도 中原의 정권이 안정되면 다시 事大의 禮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王朝政權의 유지에 서로 이해가 같은 면이 있는 탓이죠. 물론 天子國도 朝貢國이 많이 있다는 것은 명분은 帝德이 높다는 것이 되고, 또 위신을 내외에 앙양하는 것이 되니까 싫지 않았겠죠. 歷代의 중국이 職貢圖를 만드는 것도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면 사대주의는 王朝時代의 현상 유지의 방책인 면도 있어요. 마치 19세기 유럽에서 유럽 協調體制라고 하여 몇 개의 強國이 上國 노릇을 하면서 小國에 간섭하고 保守政權의 현상 유지를 꾀한 것과 결과로는 비슷한 면이 있었습시다. 소위 벅델릿히 시대입니다. 아마 사대주의의 역사적 성격과 명분을 이렇게 보아야 그 역사성도 이해되고, 또 먼 나라의 小國들이 오지 말래도 열심히 朝貢을 바치느라 중국에 간 이유도 알게 되죠. 아시다시피 지금의 자바·스마트라 등지에서 죽을 육을 겪어 가면서 어

려운 旅程을 밟아 중국에 옵니다. 물론 힘의 압박을 받을 하등의 위험도 없는 경우에 말이죠. 현실적인 사대 관계는, 그때그때에 따라 현실적인 交易의 利, 援軍의 필요, 仲裁要請, 威信獲得, 명분 등 여러 가지의 면이 있습시다만, 국제정치 질서의 유지라는 巨視的 안목에서 보면 이러한 王朝政權의 유지 체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이 점은 오늘날 自由陣營·共產陣營 할 때의 명분과 政權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수궁이 가지 않겠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정권에 욕심이 있었던 李成桂가 고려와 事大의 복수 관계가 있는 元을 버리고 새로운 上國으로 나온 明에 대해 事大의 명분을 세운 것은 알 만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있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事大의 禮를 名分이라는 이데올로기 면에 치중해서 말하고 있습시다만, 본래 事大의 禮는 명분 외에 국제정치 체제로도, 또 외교 정책으로도 기능하는 면이 있는 법입니다. 마치 유럽의 세력 균형이 명분으로도, 국제정치 체제로도, 그리고 외교 정책으로도 기능하는 면이 있듯이, 李太祖의 경우는 事大의 禮를 외교 정책으로 이용한 면이 강하죠.

申: 과거 韓國史 이해에 있어서, 이조 건국시의 「册封」의 예나, 「封王」에 그치고 「稱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볼 필요가 없게 되겠습시다. 東北亞中華文化圈에 대한 소속감에서 보면, 「稱帝」란 禮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종의 불법이 되겠지요. 오히려 우리 나라가 중화 문화권에서 「小中華」를 자처하

164 韓國民族主義

는 데에서, 전혀 華外에 속해 무시되었던, 가령 日本 같은 나라에 비해 볼 때 文化的 優越感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冊封을 받았다는가 事大의 文化圈 序階는, 君臣 관계 · 父子 관계 · 兄弟 관계에서 「以小事大」의 명분에 만족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대적 관계에서 疎外되었던 나라들에 비하면 羞恥感 같은 것이 없었으리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⑥ 事大政治圈의 歷史

李 : 일본 사람 중에는 日本國書에 대하여 中國國書에 일본을 日出處의 天子라고 하였다고 해서 신이 나 있는 사람이 있죠. 소위 聖德太子 시대의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華外의 나라에 대하는 방식이죠. 가령 匈奴의 可汗이라는 칭호를 중국에서 그대로 써 주는 式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경우, 韓中 관계를 先人들이 이해했느냐 하는 例로, 앞서 梁賊之의 글을 다시 들면, 以小事大는 禮의 常道라고 하면서, 한편 우리 나라는 東方의 변두리로 자처하고, 隋唐의 盛으로도 우리를 臣下로 삼지 못했고, 遼나라는 이웃 나라의 禮로 대하고, 金나라는 우리를 父母의 나라라고 불렀고, 宋나라는 우리를 賓禮로 대하였고, 元나라는 수십 년 동안 武力을 써서 우리를 臣服케 하였으니, 조카·장인이라 칭해서 半島 사정이 옛과 다르다고 하여 무력 이외로는 臣事한 일이 없는 것을 밝혔죠. 明에 이르러 혹은 外交使節을 拘禁하고 또 歲幣를 늘려서 우리를 어렵게 한 일이 있으나 及其也 오해가 풀려 藩國으로 封했으니, 事大의 禮를 안할 수 없다고 하여, 事大가 힘의 관계가

아닌 점을 暗示하였죠. 그러나 요컨대 사대가 진정으로 시작된 것은 明나라 때부터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의 王權의 근거는 국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래서 代天理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로 말하자면 天子가 바로 그 아래라고 관념했으니까, 자연 王權의 근거도 천자의 책봉에 있다는 이론 역시 나올 만했습니다. 王權의 정당성·권위를 事大의 禮를 媒介해서 天子에 연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天子의 지위가 위태로와서 易姓革命이 일어나는 때는 자연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점에서 事大의 禮는 王朝의 정권 유지의 기능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明나라가 조선을 가리켜 願知禮樂이라고 해서 朝貢의 度數를 남나라보다 많이 해주는 「特典」을 가해 주니 그 당시의 名分主義者들은 그 얼마나 得意였겠어요. 王朝政權의 현상 유지에 공헌이 큰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나라에는 上下의 두 가지가 있고, 諸侯 레벨의 나라는 天下라는 큰 나라 관념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王國의 山川은 바로 天子의 것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왕국의 산천은 천자의 것이라는 사대적인 표현은 요새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히고 더러운 아첨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별로 이상스럽지도 않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애당초 문화와 정치의 발상이 전연 달랐던 탓이죠. 事大의 禮에서 보면 上國의 기능에는 마치 國際機構의 기능 같은 禮가 제법 있었죠. 一國의 정치 질서의 파괴에 대하여 간여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읍니다. 仲裁·調停도 上國의 입장에서 하였죠. 지금의 印度支那에 있던 安南과 占城, 眞臘과는 자주 다투었는데, 明나라에 심판을 요구한 例도 있습니다. 이

점도 事大의 禮가 국제 질서—아니 유교적으로 말하면 國內外를 막론한 정치 질서의 가치관인 또 하나의 증거죠.

甲: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대주의적인 질서—中華文化圈이라 할까, 그 圈內의 구조나 성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와 判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의 近代國家간의 세력 균형에 의한 세계 질서와 다른 점은? 事大主義의 名分社會에서는 힘보다 권위에 의존해서 평화가 보장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曆亡幽燕」이라 해서 상호 의존적 連帶感도 깊어서 集團 安保 같은 구실도 한 것 같습니다.

李: 앞서 말씀드렸듯이 天下라는 관념은 單元的 政治社會觀이죠. 그리고 事大의 禮는 身分的 社會에 대응하는 上下의 序階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가치관이었죠. 그것이 힘보다 권위에 의존하는 면이 강해서, 事大政治圈內에 평화를 유지하는 경향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권력은 그 구성 요소로 봐서 強制力과 權威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구성 요소 즉, 강제력·권위는 서로 反比例의 관계에 섭니다. 가령 나라의 통치가 強力, 곧 武力에 크게 의존하는 때는 「권위」라는 요소는 줄어들고, 逆으로 권위에 대한 歸依心이 높은 사회에 있어서는 武力의 발휘가 필요 없고, 따라서 武備가 약해집니다. 권력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령 유럽 中世에서, 法王의 권위가 가장 높았을 때는 아무 武力 없이 王國의 군주를 僭伏시킬 수가 있었죠. 반대로, 마키아벨리의 시대같이 혹은 戰國 시대같이, 권위가 무너진 마당에서는 무력이 제일이죠. 무력이 곧 지배력이었습니다. 유교적인 事大의 禮는 결국 권위 위에서는 가치관이니까 사대의 예가 비교

적 잘 준수되던 때는 대체로 평화적이고, 권위가 권력의 큰 비중을 차지할 때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가 곧 평화주의는 아닙니다만, 대개는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는 平和의 가능성이 더 크죠. 이런 의미에서 전쟁 상태 아닌 것은 평화라는 통속적 개념을 채택한다면, 事大 政治圈의 역사가 端的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사대 정치권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武力으로 결말을 내는 일이 누차 있었던 것은 모두 아는 일이지만, 유럽 국제 사회의 戰爭回數에 비하면 그것은 거의 문제도 아니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 정치권에서 권위에 의존하는 나머지 武備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 하는 것은 丙子年 南漢山城에서 淸軍에게 항복하기 직전에 보낸 國王의 回書에서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지금 기억으론—以小事大는 常理고 世世 明의 厚恩을 받았으며 詩書를 하되 兵事를 일삼지 않았다고 吐露하였는데, 하기는 평화가 길면 武備는 게을리하는 법이죠. 얼마나 大國에 의지하면저 以小事大로 족하다고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만 가지고 말하면, 사대의 예는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는 상당히 공헌했다고 볼 만합니다. 신선생 말씀대로 이러한 사대 체제에 대한 근대 유럽의 체제는 세력 균형에서 있습니다. 세력 균형은 그 전제부터 사대 체제와는 다르죠. 첫째로 單元的 天下觀이 아니라 多元的 國家觀입니다. 둘째, 사대 체제가 나라 사이의 上下의 序階를 설치하는 데에 대하여, 적어도 명분으로는 주권국가는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평등주의에서 있습니다. 물론, 실지로는 強弱을 구별했습니다만 명분으로 평등이죠. 세제, 사대 체제는 항상

單一上國의 天下, 다시 말해서 단일 세력을 中軸으로 해서 小國과 周邊國이 붙어 있는 국제 정치를 정상적으로 보고 상위 세력의 분열, 列國의 쟁탈을 예외로 보았는데, 반대로 세력 균형 체제는 평등한 강대국의 競合的 共存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小國을 點綴하는 式의 국제 정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죠. 이 점이 바로 20세기 초기까지의 國際法 책에서 세력 균형을 규정해서, 단일한 強大勢力이 유럽을 制覇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원칙이 있다는 의미로 적은 이유이죠. 따라서 세력 균형 자체가 평화주의거나 전쟁 방지 수단은 아닙니다. 현실의 역사에서 보면 세력 균형을 채택한 유럽의 전쟁 度數는, 내 책에서도 적었습니다만(一般國際政治學) 엄청난 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요한 차이가 있죠.

앞서도 말했습니지만, 원래 사대 체제는 단순한 국제 정치 체제일 뿐 아니라 一國의 국내 정치, 왕권의 계승에까지 미치는 정치 체제 일반과 관계되어 있고, 또 그것은 신분적인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反映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사회 구조 위에 선 天命을 받은 君主간의 禮法이었죠. 이렇게 보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儒家의 保守主義가 국제 정치의 명분으로 표시되었다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력 균형 체제는 유교와 같은 식으로 세계관·윤리관과 연결해서 출현한 것은 아니었어요.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 점차로 민족국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絶對主權論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複數國家의 공존을 정당화하는 政策觀으로 나온 것뿐이죠. 그런데 이 복수적인 정치 집단, 곧 나라들의 평등한 공존이라는 것은 유럽 사회의 구조 변화, 다시 말해서 내소널리즘에 의한 國民概念의 전개, 나라 단위의 國民經濟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죠. 하기는 사대 체제에서 말하는 天子의 권위, 상국의 우위론도 虛構입니다만, 또 세력 균형의 국가 평등실도 현실에 비춰 보면 허구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대 체제가 禮法의 권위와 명분을 중심한 데에 反해서 세력 균형은 무력에 의한 상호 牽制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요컨대 사대 체제가 신분적 王朝의 禮教觀念 위에 서 있는 데에 대하여, 세력 균형은 근대 국가의 軍事主義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사대 체제가 유독 東아시아에만 존재하던 특정한 국제 정치 체제였느냐 하는 점에는 의심이 잡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지만, 중세 유럽·東로마 政治圈·이슬람 정치권의 比喩史의 입장에서 類型化해 보면 놀랄 정도로 사대 체제와 같은 면이 나온다는 인상이 듭니다. 물론 事大라는 말도 쓸 리 없고 儒家의 政治觀이 나올 리도 없습니지만, 그 국제 정치 질서의 上下觀, 국가 개념의 二重性, 父子로 圈內는 호칭하고 強大한 蠻夷에 대해서는 兄弟로 부르는 禮, 朝貢의 제도와 冊封의 儀式 등등이 너무나 유사한 데가 있어서, 사대 체제는 혹 어떤 커다란 역사적 유형의 한 특수 例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세력 균형은 앞서 들었듯이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의 원칙인데, 무력 중심이고 군사주의적이죠. 전쟁 回數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傭兵制에서 國民皆兵制로 옮겨 가면서 국민의 參政權 획득에 이바지하게 되고, 한편 軍事財政의 급속한 需要는 擔稅層의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요컨대 세력 균형은 내소널리즘과 보조를 같이하며 발달한 強國主義의 국제 정치 원칙이고, 이에 대해서 사대 체제는 序階的 國際主義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⑦ 事大主義의 現代的 理解

申: 그런데 오늘 우리는, 開化 이후 근대적인 主權國家의 觀念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사대적인 명분 질서 속에 살았고, 西歐 세계도 근대 민족주의 형성 이전에는 결국 우리와 다른 것은 이른바 「事大的 秩序」, 中世的 권위주의, 諸侯간의 位階 秩序 속에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질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世界史의 보편적 현상으로 일단 看做해야 하겠지요.

李: 대체로 그런 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 균형이 前提하는 국가 평등만 하여도 그것은 法的인 힘의 평등은 아니고, 따라서 18세기부터 一流國, 二流·三流·四流國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그 등급에 따라 外交使節의 級도 결정하는 것이 通例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평등은 虛構죠. 마찬가지로 事大의 명분이라고 하여도 과연 信과 仁의 字小事大로서 上下의 兩極이 서로 대하게 되느냐 하면, 실지에는 강약 관계와 상하의 명분 관계가 어긋나는 수가 있어서 事大의 禮와는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원칙이고 또 가치관으로서, 그 당시 사태를 평가하는 기준의 구실은 할지언정, 그대로 현실인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원칙이 오래 명분으로 사람의 意識을 지배해 왔죠. 세력 균형만 하더라도 요새 國際法 教科書에는 빈 개념이 아니라고 해서 뱉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의 기본 개념으로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혹은 요새 교과서에서 채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국제 정치의 원칙으로 集團安全保障制가 채택된 결과인지 모르죠. 集團安保 체제라는 것도 요새 유엔을 보면 이념일 따름이지 虛構고, 실지는 아직도 세력 균형이 기능을 발휘하는 인상입니다. 그런데 세력 균형의 強國主義에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유엔 관계를 요새 기본법에 삽입하는 例는 얼마간 있습니다만 몇 줄에 그치죠. 이에 대하여 사대 체제 아래서는 조선 시대의 《經國大典》 등에서 보듯이 事大의 절차를 국내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대 체제의 국제주의·협조주의가 엿보이지 않아요? 세력 균형은 근대 국가의 軍事主義와 관련이 있어서 협조보다도 對立·牽制主義에 서죠. 이 점만 들어 말하면 中國의 戰國 시대의 樣相과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앞서 발표한 「韓國認識의 方法論」에서도 언급되었읍니다만, 왕왕, 우리는 과거의 先人の 行跡을 自主적으로 비판한다 하면서, 과거의 체제와는 水火의 관계에 있는 유럽의 가치관과 입장에서 보는 일이 많지 않을까……. 얼핏 생각하면 과거 身分社會와 王朝封建 시대의 사대 체제는 그 시대의 역사 상황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그것을 깨끗이 버리고 세력 균형이 지배하는 유럽 체제를 택할 것이 아닌가, 얼핏 생각됩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도 그 모체는 유럽 근대 국가의 類型과 密着되어 있으니, 어차피 그 방향으로 부지런히 갈 것이 아닐까. 그런데, 富國強兵을 목표로 하는 근대 국가의 理念과 그 단계의 내소널리즘을 志向하는 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력 균형은 오늘날도 사실상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데, 그 세력 균형의 끝

172 韓國民族主義

자는 몇 개의 강대국간의 軍事力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군사력의 수준으로 봐서 까마득한 앞을 낙관적으로 내다보아도 強國의 색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은 흔히, 이 事大體制에서 字小하는 上國이 못 되고, 事大하는 小國이며 東瀛이 된 것을 분해하는데, 사대 체제에 對峙되는 세력 균형 체제에 있어서도 현재와 장래를 내다보면 역시 小國이지 중심 강대 세력이 되기 어렵다면 결국 어디가 다른 것일까? 그나마 사대 체제에서 「小華」라 자처하고 「頗知禮樂」 한다는 中國 天子의 評을 듣고 意氣가 자못 올랐으니, 세력 균형 체제에서 頗有軍力이란 말을 들도록 노력하면 될 것인가? 사대 체제 아래서 오래 평화를 누리고 文弱에 흐르다가 몇 번 큰 봉변을 당했으니, 오늘은 세력 균형의 前提를 따라 부지런히 武備를 닦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事大가 비굴하였다면, 사대의 비굴한 것과 강국 정치 체제 아래 발생하는 경제·정치·문화의 식민지적 양상은 과연 사대의 비굴보다는 나은 것일까? 아뵤든 생각하면 끝이 없이 의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만하죠. 여하튼 사대주의 문제는 역사적 개념으로도 그리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해 두죠.

甲: 그러면 그러한 事大의 禮가 행해지던 과거의 명분이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별로 중국에 대해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고, 韓國史 理解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대주의적 思考가 지나치게 온당치 못한 사고 방식이었다고 여긴 필요가 없게 되었으면요.

乙: 그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그렇게 되죠. 만약에 힘의 事大가 아니라 명분으로서의 「事大의 禮」에도 굴욕감을 그들이 느꼈다면, 다른 체제, 다른 時代狀況에서이긴 하지만 오늘같이 거

의 全的으로 外來의 가치관, 의존 관계에 있으면서도 古俗을 따른다는 自主的 傳統感마저 없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보통 事大를 논할 때 天下는 곧 中國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사고 방식이며 非傳統的인 생각이죠. 천하를 중국으로 해석하고, 천하의 예법은 중국이란 나라의 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럽의 이죠. 先人들의 머리속에 있던 「中國」「大國」「天下」라는 관념에는 그런 것을 넘는, 閉鎖的 國家概念을 넘어 한 문화 세계, 자기도 포함되는 어떤 국제 사회 관념이 나라 관념에 묻어 있죠. 아주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근대국가적인 개념으로서 바꾸어 놓고 그렇지 않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벌써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 그렇게 해석 안할 수가 없지……

甲: 그러나 오늘날 사대 관제를 이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事大들 한 쪽이……우리의 韓國史에 있어서 우리 쪽이 굴욕적이었다—라고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이해해 온 것은 사실인데, 현재에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對外 認識이나 強國에 대한 자세지요.

乙: 누가, 굴욕을 느꼈다는 것이요?

甲: 굴욕을 느꼈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傾向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乙: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事大의 禮라는 名分에 굴욕을 느낀 예는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힘에 의해 강요당한 사대의 형식에는 굴욕과 수치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淸明 交替期의 사대가 전형적인 예죠. 그러나 명분으로서의 사대의 경우는 오히려 반

대였어요.

申: 좀 典型的인 例를 든다면 19세기 開港 때 일본 세력이, 우리 李朝의 朝廷으로 하여금 淸나라와의 사대적 관계를 끊고 「獨立」을 선포하라, 다시 말해서 「자주독립의 주권국가가 되라」고 권하는 것을 굳이 반대한 것을 들어, 그 당시 지도층들이 얼마나 의존적이고 이른바 나쁜 의미로 事大主義的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通念이거든요. 그 당시 일본의 주장은, 韓·淸간의 사대적 관계에서 떼어져 李朝를 고립시키려는 意圖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근대국가간의 세력 균형의 관념에서는 과거의 事大的 外交를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겠지요.

李: 그뿐인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敦化門 옆자리에 동상으로 서 있는 閔泳煥 선생은 歐美를 여행하고 나서 時務策을 진의하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東藩이요 以小事大는 고유한 명분이라고 하셨으니, 그 양반은 아주 우명한 분이 되게! 또 병자호란 때의 例를 들었습니다만,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主戰派의 論據는 나라의 독립이 위태롭다는 式的 主權理論이 아니라, 事大的 명분에서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三學士나 仙源이나 淸陰이 모두 얼빠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先人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韓日修好條約도 그렇죠. 그때는 이미 開化期였으며 守舊派의 항거도 있었읍니다만, 도대체 銃砲로써 위협하고 맺는 조약에서 自主獨立國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한다고 귀에 쑥 들어오겠습니까?

申: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앞에 몇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대 관계가, 말하자면 한국사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貿易의 利를 보았다는 한 면과, 그보다 더 큰 것은 오히려, 中華文化圈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華外에 있으면서 用兵에 의한 군사주의적 힘의 대결이 아닌 어떤 명분적인, 또는 뭐라고 할까, 윤리적 규범에 기초해서 살 수 있다는 利點이 있겠지요.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평화요 安全保障의 방법인 동시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武力에 의한 침략이라든가 또는 힘에 의한 強壓을 피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길도 되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得이라고 오늘날 볼 수 있겠지요?

李: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대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권위가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우세할 가능성이 많았던 사회라는 점에서 평화가 오래 유지되었다고 하는 점을 본다면 그것이 유리한 것이고, 그대실 그런 사회적 질서의 기반에는 바로 제급 사회적인 농촌 구조를 基底로 하는 王朝 체제의 현상 유지책이 숨겨 있었다면, 우리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은 결과가 되죠. 또 逆으로, 그런 국제 정치적인 각도에서 보아 그 국가 형태가 세력 균형적인 그런 나라 형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大小相抱의 독특한 형태라고 하는 점을 얘기한다면, 현재 우리가 韓末 이전의 우리 사회에 대한 근대 주의적인 모든 판단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잘못이요. 逆으로, 그런 것을 가졌었기 때문에 따라서 戰爭度數가 적고 따라서 전쟁을 위한 兵備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 에 이런 근대 사상이 들어올 때 兵力으로 대항을 못하게 했다는 점

에서는 약점이 아니냐고 본다면 그것은 약점이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가 문제인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우리 先人들이 한 행적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보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文脈과 조건 아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틀을 알아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럽적인 세력 균형의 원칙이 통용되는 근대 국가 체제내에 산다 하는 경우에, 마치 사대주의적 인 세계에 살면서 완전히 藩國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면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근대 국가적인 것으로 산다 하면서 근대 국가적으로 완전히 못 되는 점이 너무나 두드러지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나……이런 경우에, 만일에 근대국가적인 기준으로 선인들의 행적을 평가하려 드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도 제대로 適應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인이 남겨 놓은 것을 모조리 棄으로 돌리고 無로 만들어서 다시 霧에서 출발하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實은, 현대의 최대의 문제는 세력 균형이 작용한 強國政治·軍事主義가 드디어 오늘같이 제 武器에 자기도 꿈쩍 못하고, 또 잘못하면 地球上의 모든 인류가 손상을 입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대에서 사람은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이런 강국 정치·군사주의로 해서 여러 나라의 정치 형태가 왜곡되고, 국민의 福祉와 平和經濟의 기틀이 阻害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민의 기본권도 때로는 무시되고, 국가라는 한 개의 체제가 점차로 怪物化되는 면이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치 先人들이, 事大의 禮와 사대의 명분에 때로는 목

숨을 걸고 노력했지만, 결국 頗知禮樂이라는 말은 들었을 뿐 藩國이라는 카테고리는 면치 못했듯이, 지금 強國政治的인 국제정치 아래서 부지런히 경제 성장을 꾀하고 소위 선진국의 뒤를 밟으려 해도 그 방향에서는 그 한도가 거의 명백한 형편이죠. 核武器를 가진 강대국으로서의 여러 조건이 우리에게 모두 힘겨워요. 앞서도 의문을 發했읍니다만, 사대 체제가 오늘날 채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이미 역사적 조건이 다들 뿐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王朝政權의 현상 유지, 정권의 국제적 連帶保障, 序階主義가 封建身分체제의 반영인 면 등 그 시대에서도 벌써 역사의 발전을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면이 점차로 노출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小들 大 속에 흡수시켜서 국제 질서의 유지를 꾀했다는 방식은 적지 아니 흥미가 나는군요. 너·나를 그 개별성에서 초월해서 포섭하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관념에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 관념과 類를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장차 到來할 세계 평화를 志向하는 국제주의 사회를 상정하는 경우에 암시하는 바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의 집단안보 체제는 이론으로도 강대국의 협력 없이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최종의 기본 형태는 國際機構에 강제력, 곧 우세한 兵力을 保有하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上位의 軍事機構를 국제 기구로서 설정하는 것이죠. 권위주의이기보다는 強力主義입니다. 현재의 유엔 체제는 집단안보로서는 이미 실패한 지 오래니까 문제 아니 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국제 정치의 기본 단위인 近代國家型의 국가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이 자체의 모순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죠. 이런 상황 아래 작은 나라가 갈 권의 하나

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政治正義를 위한 국제 체제를 추진하는 데에 힘쓰면서 나라와 국제 체제 사이의 齟齬를 벗겨 버리고, 個別이면서도 일체가 돼서 작은 나라대로 진정 自主的이 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우리는 事大의 禮라는 가치관의 의미를 그냥 과거의 것, 현대의 시각에서 보아 케케묵고 굴욕적인 것으로만 성급히 돌리지 말고, 거기서 건질 것은 건지면서 事大의 케이스들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하여간 다시 韓國史의 史例로 돌아가 보죠.

⑨ 韓國史 認識上의 事大主義의 問題

甲: 역시 한국사의 인식에 있어 사대주의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丙子胡亂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본다면 明과 교체되어 後金을 제승한 清이 우리에게 대해서 과거의 對明事大關係를 단절할 것을 강요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나라 사정에서 본다면 나라 안의 輿論이 둘로 갈라졌지요. 主戰派와 主和派로 갈라져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主戰派는, 말하자면 中華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여 명분론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또한 崔鳴吉一派가 주장한, 말하자면 和平派의 입장도 그것 나름대로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翻扶해서 인식해야 되겠느냐……

李: 어떻게 착결하다니?

甲: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單一中心的인, 또는 對明一邊倒의인 그런 단일중심적 권위를 인정하기만 고집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의 事大

秩序에서 새로운 어떤 권위 또는 새로운 힘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적응력을 잃거나 약화시키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事大의 禮가 통용될 수 없는 새로운 濟과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主戰派的인 대응책이 그 당시로 보아서 옳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그 이후 대원군 시대에 있어서도 거의 그와 類似한 상황을 造成하여 斥邪派와 開港派의 대립을 낳기도 했지요.

李: 내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서로 아주 다른 것 같은데…… 丙子胡亂 때의 주전파와 주화파는 서로 淸軍에 대한 대책을 달리 했지만, 주화파라고 해서 주전파의 명분에 異論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명분은 그렇지만 保國安民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병력이 모자라니 화평하자는 것뿐이죠. 그 시대의 조건으로 보아서 사대의 명분을 가지고 시비한다는 것은 생각이 안 되죠. 다음 滿清이 入關 후에 생긴 事大의 禮라는 국제 질서의 문제인데, 이 점도 大院君 때와는 아주 다르죠. 애당초 胡亂 때에 名分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滿清 같은 야만이, 化外の 세력이 어찌 사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그 자격과 正統의 문제였죠. 따라서 滿清이 중국 땅을 점령한 후에 宇小事大의 禮法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淸朝는 오히려 전통적 宇小事大의 禮만 아니라 다른 유교적인 政教과 문화를 철저히 장려하고 자기도 익혔으니까, 국제 질서 그 자체의 성격에는 변화가 오지 않았죠. 淸朝에서는 洪武年間에 明朝가 제정한 외국과의 事大의 例規를 고쳐서 더 철저히 자세히 규정하였죠. 말하자면 淸朝 초의 그 出自가 夷狄이라고 해서 그 자격이 문제되었지, 국제 질서나 국가 체제에

180 韓國民族主義

는 하등의 변화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事大의 禮가 다시 케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대원군 시대나 그 이후의 衛正斥邪를 들고 나온 斥和는 그 대상이 사대 체제와는 전연 다른 국제 정치 체제와 국가 체제였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대 체제의 否定을 의미하고, 사대 체제의 固守는 사실상 새로 들어오는 세력 균형의 유럽 체제에 대한 抗拒를 의미했죠. 이 두 가지는 전연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甲: 그런데 특히 丙子胡亂 때 관심을 끄는 점은, 名分論上으로는 확실히 主戰派 쪽이 옳았지만, 그 주전파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평가 중에 지나친 명분주의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 이전에 壬辰倭亂에서 연유한 「再造本邦」이라고 하는 義理 관계가 깊이 작용했다는 것은 通說로서 주장해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淸이 擡頭했다는 현실 자체를 보는데, 사대주의적인, 명분적인 이해올로기가 상당히 阻害要因이 되었다는 것도 한쪽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그 당시 당면했던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明과의 用兵에 의한 힘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講和交涉을 나갈 때에는 과거에 對明事大儀禮라는 것을 外的 강요에 의해서나마 탈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비토소 어느 정도, 말하자면 평화라고 할까 講和를 획득했다—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李: 그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申선생의 焦點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델 概念이 文化圈 내의 것이고,

문화권 외에 대해서는 그저 그것에 準할 뿐이라고 하는 모델 개념을 세웠어요. 따라서 對淸 관계라는 것도 韓國의 입장에서 그 모델 개념에 안 들어맞거든. 따라서 賚質, 그 자격이 문제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梁誠之가, 蒙古가 用兵을 해서, 兵을 써 가지고 고려를 굴복시켜 朝貢 관계에 들어간 것은 사대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명분에서 보면 그래요. 그 점은 결정적이지.

또 明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런 事大에 대한 禮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념보다도 의리 때문에 더 그랬다—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판단 안해요. 마치 우리 나라가 어디에 대해서 派兵한다고 그럴 적에 의리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듯이 말이에요.

⑨ 事大와 對概念으로서의 自主

甲: 그 다음에 이 事大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가 이런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통념상으로 얘기할 때 事大와 對概念으로서 自主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국 인식에 있어서 사대적인 中華文化圈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방 전제하고라도,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보아서 중국 문화에 대해 우리의 고유한, 또는 주체적인 정신 領域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李: 요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던 문제군요……. 통속적인 의미에서 事大와 自主를 대립시키는 것은 아예, 事大는 他力依存의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자주독립이다, 하는 식의 發想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취급한 事大의 名分은 그러한 對峙를 무의미하게 하는, 말하자면 전연 다른 카테고리인 얘기죠. 앞서도 여러 번 들었읍니다만 梁誠之에 보던, 古俗을 따르자는 자기 전통에의 執着이 사대들 각듯이 해야 된다는 意識과 조금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고유의 전통과 사대주의가 併存합니다. 그런 마당에서 事大와 自主라는 대립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甲: 지금까지 韓國史의 인식에 있어서 民族史學이 시작을 했다는 丹齋史學의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丹齋가 한국사를 인식할 때에 그러한 사대주의적인 중화문화권이라고 하는 揚보다는 근대적인 自主라는 개념에 기초한 한국사 인식을 새로이 하려 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국사의 출발점은 <朝鮮史一千上年에 最大事件>이란 논문에서 강조된 妙淸과 金富軾간의 한국사 인식의 차이로부터 출발했다고 丹齋는 보지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사 인식에 있어서의 하나로 계속되어 내려온 그 문제를 계승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줄거리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丹齋는 그 당시에 중화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인식보다는 독특한 우리의 仙史의 문제라든가, 花郎道·渤海 문제, 이런 것을 통한 民族史學의 출발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의 사대주의 문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⑩ 民族史學의 出發과 限界

李: 역시 이것도 어렴풋이나마 전번에 취급했던 것이군요. 문

제는 들인데, 하나는 丹齋史學의 성격이고, 또 하나는 妙淸亂을 계기로 한국 固有한 仙道 혹은 郎道가 끊기고 사상·학술·관습·정치가 모두 사대주의로 몰렸다는 史觀이 있습니다. 전번 대담 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만—우리의 國學 운동, 또 민족사학은 비록 의형으로는 國粹的이고 한국사의 민족적인 고유 성격을 摸索해서 크게 사회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발상은 근대 유럽의 내쇼날리즘이죠. 또 그래서 큰 영향을 우리 사회에 준 것입니다. 단재 선생은 英文學도 하시고 外國物情도 잘 아시고, 또 독립 운동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애국심이 학문에서는 國史로 향했지만, 그 發動은 그 당시로는 새로운 관점이었던 근대유럽의 내쇼날리즘이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유럽 내쇼날리즘은 民族의 固有性·고유 문화·고유 성격을 찾습니다. 민족사학이 이러한 각도에서 한국사를 다시 보고, 우리들 다시 보려고 한 점은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민족사학의 한계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분들의 사대주의에 대한 해석은 그야말로 근대 유럽적이어서, 이 對談 서두에 전제한 대로 語感이 나쁜, 고약한 權力에 아첨하는 他力依存의 뜻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단재 선생뿐 아니라 國學에서 사대주의를 모지게 때리는 것은 그 각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까요……

다음은 妙淸亂의 해석인데, 丹齋 선생은 이 사건을 郎佛對儒의… 그러니까 民族固有文化 對 中國依存의 대결로 보았죠. 묘청 때는 아시다시피, 중국은 遼·金の 세력이 北部를 점령해서 천자의 위세가 형편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대의 體를 갖추려도 반반한

대상이 없을 때고, 遼나라는 그대로 上國의 노릇을 할려고 들던 때죠. 妙淸이 西京遷都를 王에게 권하고 稱帝建元을 力說한 것은 그 당시의 세태로 보아서 있음직하였을지 모르나, 아마 요새 우리가 당시 사람보다 더 통쾌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留意할 점은 稱帝建元해서 사대 체제를 벗어나고 北伐이 성공하면 天下에 호명할 수 있었다고 假定하는 경우, 새로이 上國에 위치했을 때 국제 정치 질서로 무슨 체제를 채택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불행히 妙淸黨이 폐배해서 칭제건원하고 복벌하는 통쾌사를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아시다시피 遼·金·元·淸은 모두 성공해서 상국의 황제 노릇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의 정신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고유 문화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보아야겠죠. 하기는 蒙古·滿淸 할 것 없이 建國의 地를 封禁해서 聖域으로 삼고, 자기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遼·金·元·淸이 하나같이 政局이 안정되자 국제 정치 질서로는 사대의 禮를 채택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사회 조건·계급 구조·왕조 체제에서는 저절로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마치 中世 유럽·이슬람·비잔틴 정치권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와 성격이 흡사하지요. 국제 정치 체제도 비슷하듯이.

그러니까 사대주의의 문제들; 우리가 小國이 되어 事大했으니 분하고 슬프다는 式으로 한국사에 너무 집착해서 보면 그 전모가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하고 슬픈 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정치 구조가 왜 먼저 王朝的이고 봉건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점이겠죠. 더구나 기억할 것은, 묘청

란을 계기로 해서 고유의 것은 망했다고 본 것과는 좀 달리 梁誠之는 古俗을 따라야 되는 것을 力說하고, 단군 시대 같은 역사관이 조선 초에는 士人의 상식이 되었어요. 이런 점도 우리는 아울러 생각해야겠죠.

申: 國學 운동과 관련해서, 國史의 上限線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國史」란 개념을 근대적인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이해할 때, 근대적인 國家史는 사회주의 질서 내지는 中華文化圈으로부터 脫圈하려는 노력에서 시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李 박사께서 이미 〈韓國의 民族主義〉란 심포지움의 基調 논문에서 王朝史와 民族史를 구분한 그 구분에서 민족사적 측면에 관심한다면, 근대적 민족 자립의 命脈을 고려사까지는 펼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중화문화권 내에서의 사대주의적 王朝史 시대를 일단 구분해 놓고, 우리 한국사의 「國史」 개념을 근대 이후로 한정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합니다.

李: 신선생의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 생각나는 것은—우리 역사를 古人이 중국 역사에 맞추어서 쓰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역사를 유럽 역사의 기준과 개념 도구를 사용해서 정리하려는 것도 위험천만이죠. 또 사대주의에 깊게 빠졌다 하여도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죠. 「顏知禮樂」의 칭찬은 받았지만 藩國은 번국이 아니었어요? 요컨대 正會員은 못 되고 결국 準會員 노릇만 한 것이죠.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나라다 하지만 실지의 담방자는 王朝的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드높이던 士人들은 좀 語感이 나빠서, 미안하지만 정권의 正當化에 관여된 御用士人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사의 사대주의라는 명분이라고 해도 정권

에 관여된 왕조적인 것이고, 또 그런 까닭에 정권 유지의 국제 보장 같은 면이 사대 체제에는 있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事大로 인한 문화라고 해도 上層인 지배층에 집중하지 일반 대중은 대체로 疎外되게 되고, 따라서 身分社會의 下層에 존재하던 大衆은 불가부득이 土產的인 固有性, 고유 문화에 집착하게 되기 마련이죠. 이 점이 王朝史의 한계점이며 또 事大名分의 한계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上流의 士人·文人 중에는 자기 전통에 집착하느니보다는 중국 士人과 문물에 더 애착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 점은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9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貴人·文士들은 나라를 넘어서 국제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면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事大가 가진 先進文化에의 志向은 기실 그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사회의 상층과 문화인의 歐美 선진 사회에의 지향이 조선왕조 시대 때보다 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이 조선왕조 때보다도 몇 배 더 사대적이 아니겠어요?

다시 문제에 되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事大體制에 잘 적응한 셈이지만 결국 정회원은 뜻 되고 준회원인, 禮樂을 아는 藩國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適應도 나라와 사회의 성격과 구조 때문에 上層에 그친 감이 있어요. 이렇게 번두리의 번국으로 남았다는 것이 實은 오늘 보면 民族史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인지 모르죠. —아이러니하지만…… 先蔡의 楚나라, 吳·越은 물론이요, 遼·金·元·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중국을 지배하

면서 逆으로 자기의 固有性, 자기의 역사는 잃게 되고 중국 역사로만 남게 되었죠.

하얏든간에 사대 체제는 나라의 정권 중심의 체제이지 대중에게 無緣한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王朝 체제를 연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 셈이죠. 따라서 사대의 이러한 측면은 엄밀히 검토를 해서 그 정치적 기능과 시대적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사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類型의 성격도 留意해서, 그것이 지닌 시대적 특징만을 버린다면, 혹은 근대 국가 체제와 그것을 구성 要素로 하는 세력 균형의 국제 정치에로부터 小國이 強國政治에 휘말리지 않고, 따라서 「나라」라는 명목 아래 정권이 대중의 희생 위에 재미를 보는 일이 없는 본래의 政治像을 그리려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申: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면에 門外漢인 저로서는 오늘날의 근대 국가간의 세력 균형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自主」 개념으로, 지난날의 中華主義的인 事大나 사대주의에 대한 一義的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韓國史의 민족주의적 명백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한국 인식의 방법론이란 틀에서, 달리 民族史에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돌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제 2 회

청대(清代) 천하질서의 세 얼굴: 준가르 · 티베트 · 조선



"中, 日 제치고 美와 新질서 재건축... 한국, '딱지'라도 사 놔야

한 달 넘은 中·日 충돌, 동북아 격랑 속으로... 한국의 길을 말하다

[1]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EAI) 이사장

[中·日 충돌, '동아시아 新질서' 측면서 봐야]

- 中, 동북아 상황을 中·日 아닌 中·美간 게임으로 생각
- 美와 정면충돌 직전까지 다표위다오 사태 키울 것
- 美·中간 초보적이지만 게임의 원칙 만들어지는 중

[한국,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전략 필요]

- 中과 甲乙이라는 게임 대신 丙이라는 제3의 길 가야
- 21세기에는 경제력·군사력만으론 대응하기 역부족
- 정보·지식이 바탕된 '다보탑式 복합 국력' 필요

"중국은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신질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자 정교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사태를 상승시켜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까지 이번 사태를 상승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EAI) 이사장은 23일 최근 센카쿠를 둘러싸고 빚어진 중·일 간 갈등을 미·중 간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구축되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현재 동아시아 신질서는 재건축되는 단계"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국제적인 신질서를 만드는데, 우리는 '딱지'라도 사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센카쿠를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지속된 중·일 갈등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신질서 '재건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각 국가의 국내 정치 리더십 변화에서 오는 혼란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다."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둔 중국의 대일(對日) 전략은 무엇이었나.

"미·중(美中) 간에는 초보적이지만, 게임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게임 원칙하에서 작은

그들이 치고받는 게임이 바로 영토 분쟁이다. 중국은 현재 상황을 중·미 간 게임으로 보고 있지, 중·일 간 게임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닌자오씨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지만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동아시아의 신질서' 개념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이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성 권력(Established Power)'과 '부상(浮上)하는 권력(Rising Power)'이 만나는 경우에 항상 갈등하고 충돌했지만, 미·중 간에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지난 5월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간 '신형(新型) 대국 관계' 구성이 신질서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이 일본에 강력 대응한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핵심 이익은 중요성 순으로 볼 때 ①국내 안보 ②국제 안보(영토·한반도 등) ③국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이다. 핵심 이익 3가지에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강된 국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닌자오 사태에서 드러났다."



—중국은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10월에 확정될 시진핑 체제의 기본 원칙은 '선(先)경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 상태대로 10년만 더 가면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경제 우선 정책을 펴면서 꼭 필요한 일은 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논의되지 않고 있는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신질서 문제는 신정부 출범 후 불현듯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이사장은 동아시아 신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복합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일본이 이번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1894년의 청·일 전쟁 당시에는 부상하던 일본이 대국(大國)인 청나라에 승리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일본이 빨리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일본은 어떤 면에서 실책을 했다.

"현재는 동아시아가 미·중 중심으로 판이 짜이고 있다. 일본은 여기서 새롭게 자신을 설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이 너무 단순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동맹을 잘 관리하되, 주권(主權)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벌이는 게임을 '넌-제로섬(Non-Zero Sum)'으로 보려고 한다. 이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주의 형태로 변형하면서 새롭게 판을 짜려고 한다."

—이번 중·일 충돌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우리는 일본보다 더 규모가 작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갑(甲)이고 우리가 을(乙)'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중 관계를 갑과 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19세기적인 시각이다. 한중 간 갑을(甲乙) 게임에서 '병(丙)'이라는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 눈으로 동아시아에서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경쟁할 때 19세기 방식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아직 21세기적인 복합 국력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착안해야 한다."

—중·일 간 충돌이 우리나라로 전이(轉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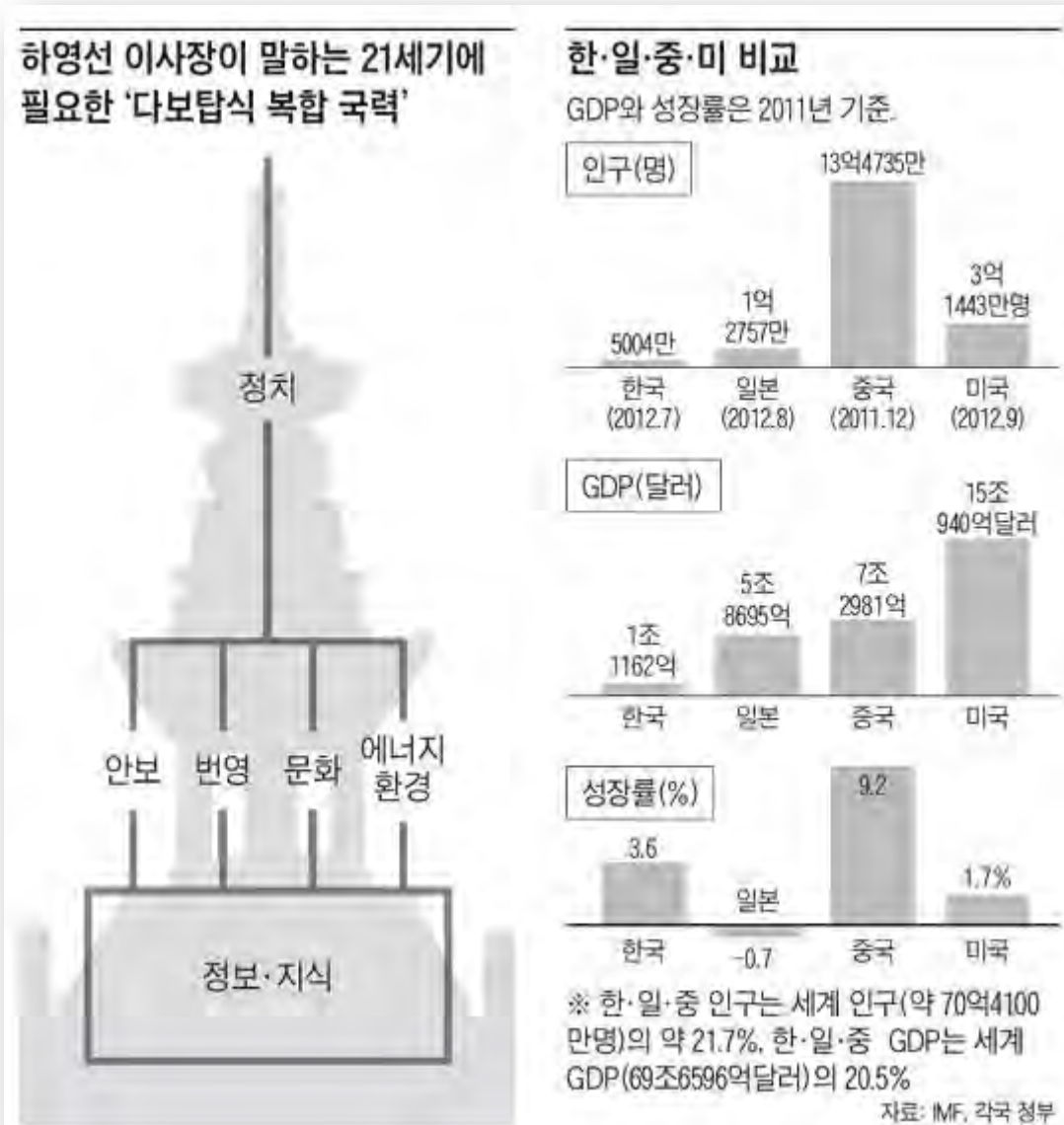
"중국에는 티베트 문제가 북한보다 더 중요하다. 티베트 문제는 국내 안보 사안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에게는 최우선의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핵과 통일은 중국에게 티베트보다 낮은 순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북아에서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와신상담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21세기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모델로 가야 한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야다. 19세기에 경제력과 군사력은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 역할을 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규모를 생각할 때 복합 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 국력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일·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바탕이 되어 한다. <'다보탐식 복합 국력' 그림 참조> 그 바탕 위에서 문화·에너지·환경은 물론 안보를 강화한 후에야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독도는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외치기보다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엔 훨씬 복잡한 힘을 장악해 나가는 쪽이 승리한다."

—최근 소장파 학자들이 쓴 '아직도 민족주의인가'라는 책은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그런 주장은 아직 위험하다고 본다. 상대방이 민족주의를 갖고 나오는데 민족주의를 없애서는 곤란하다. 지금 동아시아엔 팽배한 민족주의 갈등이 있는데, 이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는 정체성을 공유할수록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한·중·일 3국이 19세기처럼 '각생(各生)'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중장기적으로 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이슈들을 가급적 정치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일 각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개별 국가가 특정 사안을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이것을 국내 정치가 촉발해서는 곤란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외교 안보 이슈는 거론도 안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순전히 경제 민주화, 복지 등의 국내 이슈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경제 민주화 외에도 남북 문제,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경제 중심으로 뽑는데, 실제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신질서 문제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내년에 집권할 정치 세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신질서 문제는 불현듯 우리 앞에 다가올 주제다. 밖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 지는데, 우리는 경제 민주화 문제로만 논쟁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새롭게 신질서를 짜 나갈 때, 그들이 청사진을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하다못해 '딱지'라도 사 놓아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조언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갔으니,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든지 배제하는 'ABL(anything but Lee)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영선 EAI 이사장은...

지난 8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년퇴임한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중진. 9·11 테러 이후의 국제사회를 '복합 변환의 세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복합 그물망(네트워크) 정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책을 통해 한중일 3국과 미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 및 편저로 '21세기 신동맹:냉전에서 복합으로' '국제화와 세계화'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하영선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급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전략'



하영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장기적으로 30년 단위의 밑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신세대들의 긴밀한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모두와 동맹을 강화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을 제안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일 과거사 문제는 양국 정상의 임기 내에 조속히 해결하기 어렵다. 양국이 장기적으로 향후 30년의 ‘손익계산서’를 짜야 한다.”

국제정치학계에 ‘복합(複合)’ ‘용미(用美)’ ‘공진(共進)’ 등 다양한 화두를 던져온 하영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65·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가 최근 정년퇴임했다. 이에 맞춰 그가 편저자로

나선 '복합세계정치론'(한울)과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전 3권·한울)이 잇따라 출간됐다. 하 교수는 20일부터 두 달간 연세대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과 한반도'를 주제로 8회에 걸쳐 특별강좌를 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부정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그를 만나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이 택해야 할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나.

“독도 이슈는 한일 양국에서 국내정치화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상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너무 이슈화했다. 가뜰이나 중국의 부상으로 초조해진 일본이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는 고자세, 중국에는 저자세로 나오는데 이는 일본의 전형적인 19세기 제국주의식 태도다.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현실적 힘을 가진 자에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는 2008년 4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바람직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2009년 2월 출범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한국 측 공동위원장으로 이끌었다. 양국에서 각각 13명의 학자로 짜인 공동연구팀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회의했고, 2010년 10월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양국에서 공동 발간된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결실이다.

“다음 달 서울에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2기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될지 모르겠다. 애초에 양국 정부의 합의로 시작한 만남이어서 민감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렵더라도 학자들 간의 대화 채널이라도 있는 게 좋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국 신세대들이 19세기적 부국강병의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젊은이들의 교류를 늘리는 등 노력해야 한다. 한국 기성세대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맺힌 원혼을 풀기 어렵고, 일본 기성세대는 진심에서 우리나라에 사과를 할 DNA를 갖고 있지 않다. 30년이라는 세대 단위로 풀어야 할 숙제를 한국 대통령 임기(5년)나 일본 총리 재직

기간(근래 약 1년) 안에 풀려고 하니 쉽지 않다. 양국이 앞으로 30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한일 문제를 동아시아 전체의 바둑판 안에서 크게 봐야 한다. 19세기의 작동원리는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부국강병을 모색한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공생을 위해 적절히 협력도 해야 한다. 각생과 공생을 적절히 구사해야 21세기 스타 국가가 된다. 국제정치는 불평등한 현실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경제선진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세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상당 부분 해소될 문제다.”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치질서에서 한국의 전략은....

“21세기 최대 이슈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신질서의 건축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탄탄한 ‘건축학 개론’을 짜느냐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차기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더라도 지난 10년처럼 경제 우선 정책을 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길 원치 않는다. 새로운 동아시아 건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큰방을 차지할 텐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기만 하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 할 수 있다.

20세기가 한미동맹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미국 중국 모두와 동맹을 강화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복합세계정치론이다. 미국과 친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친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를 품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동아시아는 망한다. 미국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면서도 중국을 왕따시키지 않고 적절한 위치를 설정해주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 건축의 최대 숙제다. 많은 일본 학자들은 중국이 커지니까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에는 장래가 없다. 중국을 품어 동아시아의 일원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로 바뀐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선군(先軍)정치를 벗어나 선경(先經·경제 우선)정치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북한이 중환자실(선군)에서 일반병실(선경)로 옮기게 하려면 의료진이 생명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즉 북한이 핵을 중심으로 한 선군을 포기하고 서서히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북한의 개혁 개방과 성장을 돕느냐가 숙제다. 그게 내가 주장하는 공진(共進·coevolution)이다. 반면 북한이 선경이 아닌 제2의 선군으로 갈 경우 중환자실에서 회복은커녕 식물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은 국내 이슈 위주로 치러지는 양상이다. 대선 후보로 나설 주요 인물들 중 아무도 남북관계나 국제정치에 대한 그림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퇴임 후 연구 계획은....

“나는 뒤를 돌아보는 마라토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 뛰고 있는 마라토너에게 지난 33년을 돌아보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그 대신 앞으로 뿔 코스는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난 250년간의 국제정치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천하(天下)를 연구하려 한다. 천하라는 말이 본격 사용된 중국 서주(西周)시대부터 시작해 3000년 역사의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정치를 연구할 것이다. 무모한 실험이지만 사회과학계와 사학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시공 전체를 꿰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하영선칼럼] 아시아의 다음 천년 수도는?

골프 정국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내년 말 대선을 위한 본격적 선거전이 예정보다 당겨진 느낌이다. 그럴수록 하루 하루의 시국 변화를 넘어선 멀고 넓은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 공부모임과 함께 중국의 고도들인 시안(西安, 옛 장안), 베이징, 열하(熱河), 선양(瀋陽)의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시안의 야시장은 세월의 흐름을 잊게 했다. 어디선가 금방 혜초나 의상 같은 구법승이나 조기 유학생의 원조인 최치원이 눈앞에 금방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야시장의 이국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신라에서 여기까지 험한 바닷길을 넘어서 찾아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당나라 장안은 바그다드와 함께 인구 100 만을 육박하는 천하 제일의 도시였다. 실크로드의 출발지로서 동과 서의 물품, 문화, 종교가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중국이 제국의 모습을 처음 갖춘 진나라의 시황제 시절부터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아시아 천년사를 대표할 만한 도시는 역시 장안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래의 시안보다는 과거의 장안을 보러 모인다. 1000 년 전의 장안이 오늘의 시안보다 더 세계화된 도시였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답사의 꽃은 열하였다. 티베트의 세계적인 절 포탈라궁을 산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은 작은 포탈라궁에서 바라다보는 경치는 장관이었다. 푸른 하늘은 유난하게 가까이 눈 안으로 들어왔다.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속세의 청조(淸朝) 여름궁전 피서산장(避暑山莊)은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18 세기 조선조의 이단아 연암 박지원은 남다른 여행기록인 '열하일기'에서 8 월의 더운 날씨에 베이징부터 5 일 밤낮의 힘든 여정 끝에 열하에 도착해 인상 깊은 글을 남겨 놓고 있다. 연암은 청조가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1 년의 몇 개월씩을 지내면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을 단순히 휴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요한 위협의 대상이었던 북쪽의 몽골에 대한 고도의 천하질서 유지용 억지(抑止) 전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산장이 뻘히 내려다보이는 산정에 그렇게 거대한 포탈라궁을 짓게 하고, 유교 국가인 조선 연행사들에게 티베트 불교의 2 인자인 판첸(班禪) 라마를 만나 보도록 강요할 정도로 신경 썼던 것도 잠재적 위협의 주변 민족들을 달래기 위한 천하질서 유지 행위라는 것을 잘 읽고 있었다. 당의 멸망과 함께 쇠락한 장안에 이어 금.원.명.청의 수도로서 아시아의 천년사를 대표한 베이징은 열하의 피서산장 같은 노력 없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청조의 첫 도읍지로서 만주족의 모습을 이제는 옛 궁전과 묘, 그리고 박물관에서밖에 찾아 보기 어려운 선양을 돌아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호란(胡亂) 이후 끌려와 온갖 고초를 겪었던 소현세자를 비롯한 우리 선조들의 애환과 청의 강요로 추운 겨울 불필요하게 선양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산해관으로 내려가야 했던 연행사들의 힘든 여정도 떠올랐지만 더 큰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시안과 베이징에 이어 다음 천년 아시아의 수도는 어디로 옮겨 갈 것이며 21 세기 풍수지리의 요건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열흘간의 중국 천년 고도의 주마간산 답사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뒤늦게

토리노 겨울올림픽의 쇼트 트랙 금메달 획득의 감격적 장면을 녹화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목소리를 죽이고 화면을 보면서 뒤늦게 감격을 함께했다. 타자(他者)를 품는 여유 없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설명과 해설은 화면의 감동을 살리기보다 죽이고 있었다.

월드컵의 계절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붉은 악마의 응원도 4년 전보다는 한 단계 승화된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 타자를 품으면서 스스로를 응원할 줄 아는 격조를 찾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붉은 악마가 돼 보자. 아시아 천년대계의 첫걸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

하영선 서울대·국제정치학

[하영선 칼럼] 짝퉁 세상과 맑은 인연

하영선 서울대 교수 2009/12/17

허생은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

소프트파워 외교론으로 북벌론 대신 북학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2010년엔 무슨 뜻인가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와 함께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문다. 추웠던 한 해를 떠나보내기 위한 크고 작은 송년회 모임에 모두들 분주하다. 쌓이는 모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술 깨는 술모임의 작은 얘기를 하나 할까 한다.

1768년 어느 날 초정 박제가가 연암 박지원을 찾아간다. 첫 만남이었다. 초정은 평소 "뜻이 높고 고독한 사람만을 남달리 친하게 사귀고 변화한 사람과는 스스로 멀리하니 뜻에 맞는 이가 없어 늘 가난하게" 살았다. 서얼 출신의 젊은 수재인 박제가가 당시 노론 명문가의 이단아로서 이미 문명이 나 있던 연암과 만난 소감을 '백탑청연집(白塔淸緣集)'에서 흥분된 기분으로 전하고 있다.

열세 살 연상인 천하의 연암이 웃도 채 입지 못한 채 나와 옛 친구처럼 맞이하면서 자신의 글도 읽어 보라 하고 손수 지은 밥을 함께 먹고 술잔을 나눴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연암이 채 스물도 되지 않은 초정을 이렇게 환대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암은 초정 나이에 심한 우울증인 심병(心病)에 시달렸다. 가까운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향원(鄕原)에서 찾았다. 향원은 원래 공·맹자 이래의 표현이나 요즈음 말로 사이비 또는 짝퉁을 말한다. 연암은 권력, 이익, 그리고 허명만을 좇는 양반들이 판치는 짝퉁 세상을 못 견뎠던 것이다. 결국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서 짝퉁 세상의 혐오와 맑은 인연의 갈구가 잘 어우러졌던 것이다.

첫 만남은 백탑파 모임으로 이어진다. 연암을 위시해서 박제가를 비롯한 북학파 젊은이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오늘의 탑골공원 백탑 근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짝퉁 세상을 희화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 걱정엔 열정을 불태웠다. 연암은 박제가가 쓴 '북학의'에 붙인 서문에서 명분론에 치우친 북벌 대신에 이용후생론에 따라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북학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두 사람이 중국을 직접 본 뒤에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비 오는 지붕, 눈 뿌리는 처마 밑에서 연구하고 또 술을 데우고 등잔 불뿔을 따면서 손바닥을 치며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암을 중심으로 하는 백탑파 모임과 같은 시절의 다산 정약용이 최연소자로 참여했던 경기도 광주의 천진암 모임은 모두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원했던 실학의 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허학의 비극적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오늘과 내일의 한국을 지탱해 나갈 지적 상상력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를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찾아보자. 요즈음 국제정치 시각에서 보면 당시 필수품이었던 과일과 말총의 매점매석 등으로 짧은 시간에 변 부자에게 빌린 돈 만 냥으로 백만 냥을 만

들어 국내 복지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앞의 얘기보다 뒤에 나오는 대(對)중국 그물망 외교론이 훨씬 흥미롭다. 변 부자와 함께 찾아온 어영대장 이완이 허생에게 북벌 계획을 물으니 허생은 의외의 세 묘책을 제시한다.

첫째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를 삼고초려하여 지식외교를 하고, 둘째 명나라가 망한 후 조선으로 온 명의 병사들을 혼맥과 금맥의 그물망으로 엮고, 셋째 젊은이들을 가려뽑아 번복·번발시켜 대거 중국으로 유학보내서 벼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서민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청의 승낙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과 장사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천하를 호령하거나 최소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허생은 당시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북벌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인 북학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힘들었던 2009년은 가고 기대하는 2010년은 다가온다. 세계경제위기에서 모범 탈출국으로 부상하고, G20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외교에 성공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내정치도 난장판을 졸업하고 논의판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취만이 남는 모임이 아니라 21세기 백담파 모임, 천진암 모임을 키워야 한다.

[하영선 칼럼] 21세기 허생의 중국 문제 풀기

2010.08.19

중국 GDP 일본 추월... 급변 정세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박지원이 생각했던 네트워크 강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드디어 일본을 앞섰다. 예상했던 일이라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아시아 세력망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21세기 최대의 숙제가 한 발자국 더 성큼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1년 전 일이다. 중국의 중견 국제정치학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수모를 겪은 지 100여년 만에 5조달러의 일본 국내총생산을 드디어 넘어서는 소감을 물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이제 5조달러를 넘어섰더라도 14억 인구를 생각하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가 안 되니까 일본의 4만달러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앞으로 5년 정도는 일본이 당황하겠지만 10년 내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우리 국내와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문제는 동아시아 정세다.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변화를 제대로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새롭게 짤 때다. 우선 국내총생산을 빌려 경제력을 보면 전 세계 62조달러의 24%인 15조달러의 미국, 이어 5조달러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1.5조달러, 한국 1조달러와 북한 100억달러다. 여기에 군사비를 덧붙이면 그림은 훨씬 선명해진다. 전 세계 군사비 1.5조달러의 44%인 6600억달러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공식 군사비가 1000억달러(비공식 1500억~2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러시아와 일본 군사비도 500억달러 규모다. 한국은 240억달러, 북한은 60억달러다.

21세기 국력의 새로운 꽃인 지식력(知識力)을 더해 보기 위해 전 세계 최고 싱크탱크 25개의 순위를 훑어보면 최상위 5개 연구소는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60%를 넘는 16개가 미국 연구소인 것에 반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하나도 없다. 결국 동아시아 세력망을 가시적인 자원력(資源力)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선두인 가오리연 모습이고, 앞으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방패연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암 박지원은 18세기 당시 조선이 직면하고 있었던 청나라 다루기의 어려운 숙제를 새로운 해법으로 풀고 있다. 허생전을 통해서 북벌론이 아닌 대(對)중국 그물망 외교를 역설하고 있다(2009년 12월 18일자 하영선 칼럼). 21세기 중국 문제 풀기는 훨씬 복잡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자원력만으로 해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보조 해법으로 중요한 것은 연암이 강조했던 네트워크력이다. 그러나 21세기 허생이 고민해야 할 네트워크력 강화방안은 동아시아 세력망의 3중 복합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서 18세기처럼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세 거미줄을 동시에 치는 것이다.

우선 '연결 그물망'이다. 냉전 시기에 형성된 한·미동맹이나 한·일 동반자관계를 21세기 신시대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제까지 국가 간의 2차원적 단일 그물 연결을 양국의 안과 밖을 3차원적 복합 그물 연결로 대폭 보완하고 주먹과 돈의 단순 무대를 지식과 가슴의 무대로 복합화함으로써 사고와 행동의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심화시키는 공동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접 그물망'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냉전적 적대관계에서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로의 준(準)혁명적 변화를 겪어 왔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중 관계는 21세기적 신동맹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그물망과 연결 그물망의 성공적 결합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중개 그물망'이다. 동아시아의 세력망 구조를 유심히 보면 유난히 빈 구멍이 많다. 북한은 한국·미국·일본과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지역 내 국가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물망 짜기를 눈부시게 진행하여 왔으나 그물망의 넓이와 깊이는 아직 초보적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세력망 구조에서 자기 위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빈 공간을 중개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3대 네트워크 역량 강화가 한국의 전통적 자강력(自彊力) 강화를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21세기 중국 문제 풀기의 핵심이다.

제 3 회

“금수(禽獸)” 문명과의 만남



[중앙 시평] 國難의 정치를 극복하라

하영선 서울대 교수 · 국제정치학

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가 지난 주말 TV토론에서 북핵 위기와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엉뚱하게도 2003년의 미래가 아닌 1903년의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꼭 1백년 전인 1903년. 청조 말 대표적 개혁 지식인으로서 무술변법운동(1898)에 실패하고 망명생활을 하던 량치차오(梁啓超)는 중국의 국난극복을 위해 썼던 글들을 모은 '음빙실문집(飲室文集)'을 출판한다.

이 문집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전통 유학지식인들에게도 필독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말로만 얻어지지 않는 自主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조선의 전통 유학지식인들이 梁의 글을 징검다리삼아 이제까지 인간이 아닌 금수 같이 취급했던 구미 제국들을 드디어 국민경쟁의 세기에 앞서 가는 국가들로 보고 이를 하루빨리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AD

이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19세기 중반 이래 거대한 외세의 도전 앞에서 보여 온 보수와 진보의 외세관의 국론분열이 통합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뒤늦은 이러한 변화는 고종의 마지막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운동(1905~10)의 수준에 머무른 채 국난극복을 이루지 못하고 국망의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2003년의 현실은 어떤가. 한반도에 1백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적 구분 아래 외세관.대미관.통일관의 국론분열을 뒤늦게 겪고 있다.

북핵 위기나 한.미 위기는 국론분열의 위기에 비교한다면 훨씬 작은 것이다. 그렇다면 盧당선자가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북핵 위기의 시시콜콜한 해법 마련이나, 한.미 간의 수평적 협력을 위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의 첫번째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첫째 과제는 국론분열의 극복이다. 그 속에 북핵 위기와 한.미 위기, 더 나아가서는 국난의 해법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盧당선자는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선 외세와 자주 19세기 이분법적 사고를 하루빨리 졸업해야 한다. 21세기의 제국은 더 이상 19세기의 제국이 아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자주는 19세기의 자주와 다르게 이해하고 추구해야 한다. 더구나 폭력과 금력이 아직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현실의 국제정치 공간에서 자주는 말로만 얻어지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자주를 가장 많이 주장해 온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를 가장 비자주적으로 외세에 의존해야 하는 비극을 주목해야 한다. 21세기의 자주는 대외적인 외침의 국제정치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19세기의 구시대적 이분법에 안주하고 있는 오늘의 보수와 진보세력들에게 '자주적 세계화'라는 21세기 진보의 구호 아래 국론통합을 이루자는 대내적 외침의 국내정치에서 첫 출발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친미와 반미라는 20세기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친미는 보수이고 반미는 진보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는 없다. 21세기의 시각에서 본다면 친미가 보수인 것만큼이나 반미도 보수다.

따라서 대통령당선자가 한.미의 수평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미나 반미를 넘어선 21세기 용미(用美)의 시각에서 미국의 활용이 국내.한반도.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손익계산을 철저히 한 다음 이에 대한 국론통합을 우선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19세기 서세동점의 통일론과 20세기 동서냉전의 통일론과 같을 수 없다.

21세기는 역설적으로 반통일의 시대다. 왜냐하면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하나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지역.국가.지방.사회.개인 모두가 서로 자율성을 가지고 통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韓·美간 수평 협력관계를

21세기의 앞서가는 세력들은 이미 복합의 효율성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통(一統)의 꿈만으로 21세기에 살아 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국론통합을 이뤄야 한다.

盧당선자가 21세기의 첫번째 대통령답게 국론통합에 성공한다면 21세기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국난은 국망이 아닌 국흥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5년의 최대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국론통합이다.

하영선<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약력=1947년 서울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중앙 시평] 역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영선 서울대 교수 · 국제정치학

새해가 밝았다.

덕담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오늘, 나는 꼭 100년 전의 오늘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있다.

1905년 1월 1일.

100년 전의 신년 새해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운명의 한 해로 밝아 왔다. 1904년 2월 초 일본해군이 인천과 여순 앞바다에서 러시아해군을 기습함으로써 20세기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한 러·일 전쟁은 시작됐다. 1905년 1월 1일 여순항의 러시아 수비대가 항복함으로써 전 세는 일본으로 기울어진다. 일본은 3월의 봉천대회전과 5월의 대한해협 해전에서 승리하고 9월 초에는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메이지유신(1868) 이래 새로운 문명표준인 부강국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일본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드디어 20세기 국제무대의 떠오르는 별로 등장한다. 반면 영국과 함께 동아시아 무대의 주역이었던 러시아는 무대 뒤로 물러서야 했다. 한국은 나라의 죽음을 피해보려는 국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일본의 강요된 을사조약을 통해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2005년 1월 1일.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한심하다. 안에서 과거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세계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다시 한번 역사의 선택 앞에 서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무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지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세계질서를 소련과 함께 주도했던 미국은 21세기에 도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서 동아시아 무대에 서고 있다. 그러나 연기의 내용은 바뀌고 있다. 냉전의 동맹 대신 반테러와 변환(transformation)의 신동맹질서를 동아시아에서도 짜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환의 신동맹이다. 미국은 시공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물망(ubiquitous network)을 짜기 시작했다.

일본은 21세기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u-그물망 짜기를 시작한 것이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걱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한 21세기 신방위력대강은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일본은 19세기 못지않게 한반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의 배용준 신드롬도 이런 국제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선택을 끝냈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솔직하게 밝힌 것처럼 2020년까지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 개인소득 1000달러, 국민총생산 1조3000억달러 수준의 국민경제를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하여 개인소득 4000달러, 국민총생산 6조억달러 규모의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20세기 선(先)경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1세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9세기 부강국가론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선택은 어렵다. 미국.일본과 함께 21세기 동아시아 u-그물망 짜기 동맹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국의 부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20세기 경제대국 중국을 선택하면, 미.일 주도의 신동맹질서의 주변을 서성거리게 될 것이다. 그 여파는 우리의 삶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만약 두 갈림길 대신에 북한과 함께 자주의 왕국을 한반도에 건설하려 한다면, 우리의 21세기는 고난의 장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정의 끝은 강성대국이 아니라 약쇠소국(弱衰小國)이다.

21세기 한반도의 살길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가가 아니라 매력국가의 건설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제국들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소극적인 자주의 길 대신 적극적인 매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형 u-그물망 짜기와 7000만의 배용준화에 우리의 살길은 숨겨져 있다.

[하영선칼럼] 김옥균 묘 앞에서

죽은 사람과의 만남은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오래간만에 한말 우리 역사의 슬픈 주인공인 김옥균(1851~1894)의 도쿄 아오야마 묘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조금 특별했다. 혼자가 아니라 21세기의 김옥균 20여 명과 함께 한 답사여행이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嗚呼 抱非常之才 遇非常之時 無非常之功 有非常之死(아 슬프다.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비상한 시국을 만나 비상한 공이 없이 비상한 죽음만 있었으니)"라는 묘비문의 시작은 오늘따라 유난히 애절하게 가슴에 다가왔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묘 앞에서 21세기의 젊은 주인공들과 함께 19세기 조선과 21세기 한반도의 비상시국을 함께 고민하는 묘지 세미나를 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남 김옥균은 실패한 19세기 386정치인들의 중심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년이 지난 오늘 그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21세기 386정치인들이 과거의 시각에 붙잡혀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김옥균은 예(禮) 중심의 천하질서가 부국강병 중심의 국민국가질서로 대변환을 겪고 있는 비상시국의 긴박함을 제대로 읽고 있었다. 그런데 왜 비상한 공을 이루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은 시체마저 갈거리 찢기는 비상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한마디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국내외 역량 동원에 실패한 것이다. 바깥으로는 아편전쟁(1840) 이래 비교우위를 상실한 천하국가 중국 대신에 화려하게 등장한 새로운 주인공인 구미 열강의 근대국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재빨리 아류 근대국가로 성장한 일본의 도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했으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됐다. 안으로는 당시 민영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주도 세력과의 협력에 실패하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결국 역량 면에서 설익은 갑신정변(1884)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개혁세력의 약화와 죽음을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해양경찰관 격려 오찬에서 동해 EEZ 해양주권과 관련해 "동해에서 돌발사태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전투력을 갖추고 그 이상은 정치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정면 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적으로 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고 부산하다. 그 답은 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군 주요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전략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선택하고 있는 용어의 세련도나 논리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나 강연은 대통령의 비전과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중.러 같은 대륙세력과 미.일 또는 미.일.영의 해양세력이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경계로 해서 대립해 왔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력을 키워야 하며, 다음으로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비전과 전략은 특히 역사적 안목에 기반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속의 미래'와 '미래 속의 과거'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역사공부의 진도가 더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통의 천하질서, 근대의 국제질서, 그리고 21세기의 복합질서는 동일한 사고와 행동의 원칙 위에 움직이고 있지 않다. 전통, 근대, 그리고 복합시기의 전쟁은 통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전쟁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21세기 비전과 전략은 과거사의 통찰 못지않게 미래사의 전망 위에서 가능하다. 국력을 키워 21세기 국력을 키워야 한다. 19세기형 근대국력에 기반을 둔 '호통 외교'로 21세기의 발 빠른 제국들의 '복합외교'를 제압하기는 어렵다. 비분강개를 넘어선 와신상담 외교가 필요하다. 21세기 복합국력 양성에 전력하면서 의존적 사고 탈피라는 변방적 사고를 넘어서서 주변 세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자. 그때 비로소 김옥균은 편안히 잠들 것이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하영선칼럼] 연작처당(燕雀處堂)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여섯 번째인 두 정상 만남을 굳이 역사적이라고 부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의 중심 연결 고리 역할을 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조정은 단순한 한.미 양국 간 군사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21세기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생존 전략의 역사적 선택이다.

역사적 선택의 만남을 앞두고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답답한 표현이 쉽게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1880년 여름 당시 주일 청국 외교관이었던 황준헌(黃遵憲)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에게 조선의 생존 전략이라고 전해 준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현실을 이 네 자로 축약해 표현하고 있다. 외교관의 표현으로서는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황준헌이 김홍집을 만난 첫날 나눈 필담의 분위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당면한 세계 대세를 지난 4000년 동안의 천하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옛사람의 약방문으로 오늘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집의 답변은 답답하다. 조선은 전통적 군사력으로 서양의 근대 군사력을 막아 보려는 해방론(海防論)의 노력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황준헌의 표현은 현실이 됐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는 말의 성찬에 머물 위험성이 높다. 노무현식 자주동맹론과 부시식 변환동맹론은 전혀 다른 눈으로 21세기의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동맹론은 20세기의 눈으로 21세기를 보고 있다. 세계질서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냉전의 한.미동맹을 탈냉전의 한.미동맹으로 전환시키고 싶어한다. 생존보다도 우선 자주.통일.협력을 위한 동맹으로 재구축하고 싶어한다. 생존을 위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시의 변환동맹론은 전혀 다르게 21세기를 바라다보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아니라 더 복잡한 전쟁이 시작된 변환의 세기가 찾아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구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폭정과 싸우고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같이 이념과 제도를 달리하는 세력들과 주도권 경쟁을 위해 새로운 동맹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의 한국은 미국의 변환동맹 질서에서 더 이상 과거 냉전동맹 질서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두 동맹론은 역설적으로 전시작통권 문제 조정에 일단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대미 자주를 위해 전시작통권 '환수'를 원했고, 미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이양'에 동의했다. 동상이몽의 합의다. 그러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한국은 합의 이후 삼면초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철폐 없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장난이라고 꾸짖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자주 대신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유사시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설득하고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정치적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표의 획득보다는 자주국방을 위한 천문학적 경비지출로 인한 '생계'표의 대량 이탈을 경계 될 것이다. 미국도 한국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동아시아에서 미.일.호주 중심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는 한계를 겪게 될 것이다.

늦지 않았다. 새집마저 다 타버리기 전에 정상회담의 적절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회담의 초점을 한국의 변환론과 미국의 변환론이 쌍방의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공간에서 추진할 권리와 의무에 맞추고 그 각도에서 전시작통권을 단독, 공동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복합동맹 구상 검토에 합의하는 것이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하영선 칼럼] ‘選舉外之選舉(선거 밖의 선거)’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학기 말이다. 한국근대국제정치론 대학원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100년 전 청나라의 대표적 지식인인 량치차오(梁啟超)의 글을 함께 읽었다. 그의 글들은 당시 우리 지식인들에게도 베스트셀러였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시 동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는가를 꼼꼼히 따져 보려고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한국의 유길준(兪吉濬)에 이어 중국의 량치차오를 만난 것이다.

량치차오는 ‘世界外之世界(세계 밖의 세계)’라는 짧은 글에서 제갈공명의 말을 빌려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할 기본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제갈공명은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세계가 어려울수록 세계 안의 세계에 머물러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계 밖의 세계에서 서서 시세(時勢)와 처지(處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세계 속의 바람직한 자기 위치를 찾으라는 것이다. 친구들의 작은 공부가 시세를 따를(隨) 뿐이라면 자기의 큰 공부는 시세를 만들(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었다. 선거가 혼탁해질수록 눈앞의 승패에 눈이 어두워 후보와 유권자 모두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놓치기 쉽다. 이번 선거는 세기의 결전이다. 한반도의 21세기 국운이 달렸다는 얘기가. 우리가 서 있는 동아시아 무대에서도 ‘선거 밖의 선거’가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선거는 투표용지가 아닌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지식력으로 승패가 갈라진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2012년의 동아시아를 그려 보면 선거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경제력부터 보자. 일본과 중국 경제 사이에 끼었다는 ‘샌드위치론’은 사치스러운 표현이 될 위험성이 높다. 5조 달러 클럽의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1조 달러 클럽의 한국은 더 이상 샌드위치의 가운데 고기나 야채의 위치를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5조 달러 클럽(일본, 중국)과 1조 달러 클럽(한국, 아세안, 호주, 인도)으로 구성된 동아시아경제는 미국, 유럽연합과 세계경제를 삼분하는 크기로 뚝뚝해질 것이다.

군사력을 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의 금년 공식 발표 군사비가 일본에 이어 500억 달러 클럽에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한국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군사비 증액을 계속한다면 2012년에는 700억~800억 달러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국의 비공식 군사비를 공식 군사비의 두 배로 추정한다면 중국은 1000억 달러 클럽으로 격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군사비가 1조 달러이고 그중의 반 가까운 규모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이 200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에 300억 달러 클럽의 우리가 어떤 군사무대에 서 있을 것인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국력의 꽃인 지식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보자면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이 모두 국내총생산의 5~6%를 쓰고 있어서 경제력과 비슷한 추세 변화를 보여 줄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교육비 2조 달러의 30%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규모의 위치를 차지하고, 한국은 한참 뒤떨어져서 2012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한국은 세계 4강이 모두 모여 각축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2012년 무대에서 오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바람직한 배역을 마련하기 위해 힘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선거 안의 선거'다.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첫 번째 TV 토론은 실망이었다. 질문도 진부하기는 했으나 21세기 시세와 처지를 읽고 대처하는 안목의 수준은 100년 전의 유길준, 량치차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훨씬 못 미치는 안타까움을 보여 주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도자 복이 있으려나.

[하영선 칼럼] 120년 전 유길준(兪吉濬)의 꿈

하영선 서울대 교수 · 국제정치학

5월의 신록이 유난히 푸르다. 자연의 계절 변화는 어김이 없다. 그러나 정치의 계절은 좀처럼 봄을 맞이하지 못한 채 꽃샘추위를 겪고 있다. 청와대는 재산 공개문제로 어수선하고 여의도는 여야 모두 내부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정치 진용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국제 정치의 계절은 기다려 주지 않고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중국 방문과 부시 미 대통령의 7월 한국 답방은 단순한 정상들의 만남이 아니다. 짧게는 이명박 정부 5년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길게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만남이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20년 전 개화 지식인 관료였던 유길준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국 최초의 문명 개화서인 '서유견문'을 집필했다. 유길준이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국제 정치의 이중 압력이었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고종 폐위론'을 주장할 정도로 당시 조선을 수중에 장악하고 속국 다루듯 했다. 한편 일본과 구미 국가들은 새로운 문명 표준인 근대 국제체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두 세력에 끼인 조선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궁리 끝에 유길준은 이중 생존전략인 '양절체제(兩截體制)'라는 어려운 해답을 제시한다. 중국과는 억압적인 지배 종속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한 전통 조공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는 근대 국제관계를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고 조선은 결국 국제 정치의 격랑 속에 침몰했다.

21세기 한국은 다시 한 번 국제 정치적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라는 답안을 마련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오답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방한 때 발표할 '21세기 전략동맹 비전'에서 그리고 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사태로 시끄러운 속에 치를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정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비전은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갈 길을 보여주는 예지를 담아야 한다. 그러자면 짧은 선언 속에 21세기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는 기본 공식이 들어 있어야 한다.

첫째, 복합외교 원년의 중요성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21세기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라는 복합공간에서 새롭게 만나는 세기적 정치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경기 운동장의 구조가 바뀐 것을 양국 모두 명심해야 한다. 둘째, 양국의 새로운 지구적 역할이다. 세계 10위권의 중진국가로서 한국은 필요한 지구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역할은 우선 비군사 차원의 경제 무대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 이익과 지구 이익을 보다 조심스럽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양국의 동아시아적 역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친미와 반미의 편 가르기를 넘어서서 '열린 동아시아'의 터 닦기를 위해서 두 나라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 · 중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문제는 우리 문제이자 동시에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문제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적 역할은 단순히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지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1세기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사태는 동아시아의 지역화 수준을 잘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신화에서 깨어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 중 정상회담도 솔직하게 '단일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은

21세기 유길준형의 동아시아 복합화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중국은 철 늦은 이분법적 편 가르기 국제 정치관을 하루빨리 졸업해야 한다. 동아시아가 또 한 번 닫힌 민족주의의 각축장이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의 공연장이 되기 위한 리허설 시간은 촉박하다. 위기를 피하려면 치열하고 신속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영선 칼럼] 짝퉁 세상과 맑은 인연

하영선 서울대 교수 2009/12/17

허생은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

소프트파워 외교론으로 북벌론 대신 북학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2010년엔 무슨 뜻인가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와 함께 시작했던 한 해가 저문다. 추웠던 한 해를 떠나보내기 위한 크고 작은 송년회 모임에 모두들 분주하다. 쌓이는 모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술 깨는 술모임의 작은 얘기를 하나 할까 한다.

1768년 어느 날 초정 박제가가 연암 박지원을 찾아간다. 첫 만남이었다. 초정은 평소 "뜻이 높고 고독한 사람만을 남달리 친하게 사귀고 변화한 사람과는 스스로 멀리하니 뜻에 맞는 이가 없어 늘 가난하게" 살았다. 서얼 출신의 젊은 수재인 박제가가 당시 노론 명문가의 이단아로서 이미 문명이 나 있던 연암과 만난 소감을 '백탑청연집(白塔淸緣集)'에서 흥분된 기분으로 전하고 있다.

열세 살 연상인 천하의 연암이 웃도 채 입지 못한 채 나와 옛 친구처럼 맞이하면서 자신의 글도 읽어 보라 하고 손수 지은 밥을 함께 먹고 술잔을 나눴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연암이 채 스물도 되지 않은 초정을 이렇게 환대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암은 초정 나이에 심한 우울증인 심병(心病)에 시달렸다. 가까운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향원(鄕原)에서 찾았다. 향원은 원래 공·맹자 이래의 표현이나 요즈음 말로 사이비 또는 짝퉁을 말한다. 연암은 권력, 이익, 그리고 허명만을 좇는 양반들이 판치는 짝퉁 세상을 못 견뎠던 것이다. 결국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서 짝퉁 세상의 혐오와 맑은 인연의 갈구가 잘 어우러졌던 것이다.

첫 만남은 백탑파 모임으로 이어진다. 연암을 위시해서 박제가를 비롯한 북학파 젊은이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오늘의 탑골공원 백탑 근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짝퉁 세상을 희화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 걱정엔 열정을 불태웠다. 연암은 박제가가 쓴 '북학의'에 붙인 서문에서 명분론에 치우친 북벌 대신에 이용후생론에 따라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북학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두 사람이 중국을 직접 본 뒤에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비 오는 지붕, 눈 뿌리는 처마 밑에서 연구하고 또 술을 데우고 등잔 불뿔을 따면서 손바닥을 치며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암을 중심으로 하는 백탑파 모임과 같은 시절의 다산 정약용이 최연소자로 참여했던 경기도 광주의 천진암 모임은 모두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원했던 실학의 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허학의 비극적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오늘과 내일의 한국을 지탱해 나갈 지적 상상력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를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찾아보자. 요즈음 국제정치 시각에서 보면 당시 필수품이었던 과일과 말총의 매점매석 등으로 짧은 시간에 변 부자에게 빌린 돈 만 냥으로 백만 냥을 만

들어 국내 복지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앞의 얘기보다 뒤에 나오는 대(對)중국 그물망 외교론이 훨씬 흥미롭다. 변 부자와 함께 찾아온 어영대장 이완이 허생에게 북벌 계획을 물으니 허생은 의외의 세 묘책을 제시한다.

첫째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를 삼고초려하여 지식외교를 하고, 둘째 명나라가 망한 후 조선으로 온 명의 병사들을 혼맥과 금맥의 그물망으로 엮고, 셋째 젊은이들을 가려뽑아 번복·번발시켜 대거 중국으로 유학보내서 벼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서민들은 중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청의 승낙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과 장사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청의 중심 세력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사실상 천하를 호령하거나 최소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허생은 당시 힘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북벌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프트 파워 외교론인 북학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힘들었던 2009년은 가고 기대하는 2010년은 다가온다. 세계경제위기에서 모범 탈출국으로 부상하고, G20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외교에 성공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내정치도 난장판을 졸업하고 논의판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취만이 남는 모임이 아니라 21세기 백탑파 모임, 천진암 모임을 키워야 한다.

[하영선 칼럼] 21세기 허생의 중국 문제 풀기

2010.08.19

중국 GDP 일본 추월... 급변 정세 속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박지원이 생각했던 네트워크 강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드디어 일본을 앞섰다. 예상했던 일이라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아시아 세력망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21세기 최대의 숙제가 한 발자국 더 성큼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1년 전 일이다. 중국의 중견 국제정치학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수모를 겪은 지 100여년 만에 5조달러의 일본 국내총생산을 드디어 넘어서는 소감을 물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이제 5조달러를 넘어섰더라도 14억 인구를 생각하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가 안 되니까 일본의 4만달러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앞으로 5년 정도는 일본이 당황하겠지만 10년 내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우리 국내와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문제는 동아시아 정세다.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변화를 제대로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새롭게 짤 때다. 우선 국내총생산을 빌려 경제력을 보면 전 세계 62조달러의 24%인 15조달러의 미국, 이어 5조달러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1.5조달러, 한국 1조달러와 북한 100억달러다. 여기에 군사비를 덧붙이면 그림은 훨씬 선명해진다. 전 세계 군사비 1.5조달러의 44%인 6600억달러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공식 군사비가 1000억달러(비공식 1500억~2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러시아와 일본 군사비도 500억달러 규모다. 한국은 240억달러, 북한은 60억달러다.

21세기 국력의 새로운 꽃인 지식력(知識力)을 더해 보기 위해 전 세계 최고 싱크탱크 25개의 순위를 훑어보면 최상위 5개 연구소는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60%를 넘는 16개가 미국 연구소인 것에 반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하나도 없다. 결국 동아시아 세력망을 가시적인 자원력(資源力)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선두인 가오리연 모습이고, 앞으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방패연 모습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암 박지원은 18세기 당시 조선이 직면하고 있었던 청나라 다루기의 어려운 숙제를 새로운 해법으로 풀고 있다. 허생전을 통해서 북벌론이 아닌 대(對)중국 그물망 외교를 역설하고 있다(2009년 12월 18일자 하영선 칼럼). 21세기 중국 문제 풀기는 훨씬 복잡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자원력만으로 해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보조 해법으로 중요한 것은 연암이 강조했던 네트워크력이다. 그러나 21세기 허생이 고민해야 할 네트워크력 강화방안은 동아시아 세력망의 3중 복합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서 18세기처럼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세 거미줄을 동시에 치는 것이다.

우선 '연결 그물망'이다. 냉전 시기에 형성된 한·미동맹이나 한·일 동반자관계를 21세기 신시대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제까지 국가 간의 2차원적 단일 그물 연결을 양국의 안과 밖을 3차원적 복합 그물 연결로 대폭 보완하고 주먹과 돈의 단순 무대를 지식과 가슴의 무대로 복합화함으로써 사고와 행동의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심화시키는 공동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접 그물망'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냉전적 적대관계에서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로의 준(準)혁명적 변화를 겪어 왔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중 관계는 21세기적 신동맹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그물망과 연결 그물망의 성공적 결합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중개 그물망'이다. 동아시아의 세력망 구조를 유심히 보면 유난히 빈 구멍이 많다. 북한은 한국·미국·일본과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지역 내 국가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물망 짜기를 눈부시게 진행하여 왔으나 그물망의 넓이와 깊이는 아직 초보적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세력망 구조에서 자기 위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빈 공간을 중개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3대 네트워크 역량 강화가 한국의 전통적 자강력(自彊力) 강화를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21세기 중국 문제 풀기의 핵심이다.

제 4 회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신화



東亞協同體와 朝鮮

金明植 印貞植 車載貞

建設意識과 大陸進出

金明植

帝國의 주도하에 新東亞建設問題는 벌써 이론의 시기를 지나서 실현의 第1段階에 이르렀다. 물론 이제 오히려 第3國의 방해가 있고 또 상대방의 抗戰이 끈치지 아니하여 新東亞 建設에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또 정치적으로 支那의 면목을 一變케하여 경제적 基礎工作이 전개됨과 함께 문화적으로 新生活의 협동이 실현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느 상대방에서 질겨하지 아니 하여도 또는 어느 第3國에서 陰으로 陽으로 阻止하여도 帝國의 既定方針과 같이 실현될 것은 煩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帝國의 既定方針이 支那本部로 하여금 第2滿洲國을 만듬에 있지 아니한 것은 帝國정부의 累累聲明한 바와 갓거니와 만일 前世紀에 있어서 英國이 埃及에 對함과 같은 정책을 취한다면 新東亞協同體의 건설문제는 생길 수 없고 支那의 영토의 대부분이 帝國의 殖民地가 되는 것 뿐이다. 즉 <48>前世紀에 있어서 英國은 埃及에 침입하여 埃及보다 광대한 埃及領土인스탄은 저의 殖民地를 만들고 埃及은 보호국을 만들었다가 大戰 後에 형식상의 독립을 許하였는데 이때에 있어서는 征服被征服關係가 있었을 뿐이오 互相協同의 자주성은 전혀 拒否되었다. 그런데 帝國政府에서는 支那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을 몇번이나 聲明하고 또 실제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을 永久占有하여 일종의 殖民地를 만들려 함과 같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帝國의 指導下에 支那의 新政權을 조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新東亞의 協同體問題가 나온 것이오 또 이 協同體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帝國의 對支政策이 前世紀의 英國의 對 埃及政策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것이다.

그리고 新支那建設問題에 있어서는 聯邦說이 유력한 모양인데 이것은 英國의 對印政策과 같이 分治方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하는 一派의 의심도 없지 아니 하겠지마는 國土가 廣*하고 또 교통기관이 발달되지 아니한 것과 그우에 역사적의 自治制度 및 思想을 상고할 것 같으면 혹은 과도기적 형태로 해서 聯邦組織이 현실에 흡한 것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발전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單一國家로 개조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 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부리안의 有爲한 歐洲聯邦案은 하나의 공상에 끈치고 말았지마는 以上과 같이 되면 新東亞의 聯邦問題는 人類史에 있어서 新紀元을 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新東亞協同體의 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新運命의 第一歩를 開拓치 안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新東亞를 건설함에 當하여 第一 緊急한 것은 新建設의 指針이 되고 圖案이 될만한 의식의 확립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정치가, 학자, 논객, 실재가 등의 건설의식은 물론 議論이 區區할 뿐이오 수궁할만한 세계관의 체계하에 확립한 의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一大遺憾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소위 孫文의 三民主義를 揚棄할 수 없고 또 그것이 揚棄되지 않는 한에는 新東亞建設은 中途半斷이 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 新建設을 위하여 朝鮮民衆 먼저 건설의식으로써 공헌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것이다. 첫째 朝鮮民衆은 日支兩民族間에서 調和役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임무를 다함에 있어서 兩民族의 오해를 사는 일이 있는 것은 종래의 사실이 입증하는 바이오 또 그 까닭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활동이 蹣跚하여 노상 蝙蝠生活을 일삼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 정세의 피할 수 없는 <49> 일이라 할는지 모르나 만일 그와 같은 현실이 앞으로도 解消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은 從來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新東亞建設에 기여함이 있지 못할 것이니 그리되면 다음 新東亞聯邦問題가 생긴다하여도 우리의 처지는 얼마나 好轉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新東亞建設意識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함에는 먼저 三民主義를 검토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이 小論에서 그는 가능한 일이 아니니 그의 개념만 論難하겠다. 그런데 三民主義의 民族, 民權은 近代國家意識이오 民生은 社會主義意識이니 이 兩個意識이 單一觀念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近代國家의 民族思想과 民權觀念은 이제 어느 國家社會에 있어서도 (그것은 英米佛 등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變改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過去思想이 新東亞의 의식이 될 수 없는 것은 또 되어서는 아니될 것은 알기 쉬운 일이다. 그러면 파시즘이 新建設의 圖案이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은 파시즘의 國國家意識을 이해하는 者로서는 누구나 肯定치 아니 할 것이다.

물론 最近 獨伊兩國이 歐洲의 沈滯한 현상을 打破함에 있어서 그 國家意識이 원동력이 될 것은 누구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新歐洲의 建設意識이 될 수 없는 것은 國家的 獨裁思想과 民族的 排他觀念이 입증하는 바이오. 더구나 東亞의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國家思想이나 民族觀念으로 新建設의 圖案을 삼는다하면 그것은 孫文의 三民主義가 新建設의 장애물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新建設에 대한 관심을 가진 者는 특히 이러한 의식을 경계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에서도 말하였거니와 支那事變이 發勃한 후 정치가, 實際家 學者 등의 이 新建設에 대한 이론이 만이 論難되었으나 이제 오히려 일정한 의식이 확립되지 못하여 한갓 政府宣言의 몇 가지 방침으로 建設方略을 삼고 나가는 모양이니 이 政府宣言은 현장을 수습하는 便法이 될 것 뿐이오 新建設意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자의 論策 중에는 日本評論 11월호 소재 杉森孝次郎의 文化정책의 확립에」라는 논문이 新建設에 대한 세계관의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오즉 三民主義를 배격함에 끈치고 新建設의 구체적 의식을 提示치 못한 것은 龍頭蛇尾의 憾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제 나는 遠方에서 시급한 주문을 바다 내의 생각한 바 新建設意識을 兩論할 시간의 餘裕가 없으나 그 대략을 <50>말하면 理想主義의 新形態인데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와 경제적으로 고렉티브와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을 集結調和하여 單一 觀念으로 조직한 것이니 理想主義는 新東亞를 건설함에 완전무결한 의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레오구라시를 실현하여 박그로 獨裁意識을 排斥함과 함께 앞으로 孫文의 民族主義와 民權主義를 揚棄하고 또 경제적으로 크레티브를 실현하여 民主主義의 조잡한 견해를 指彈하는 동시에 資本主義의 식욕을 견제하고 共產主義의 공상을 수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을 실현함으로써 人文의 발전을 기도하여 萬邦이 協和하는 端緒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 理想主義가 우리로 하여금 日支兩民族間에서 調和役의 임무를 수행케 함에 좋은 의식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먼저 이 理想主義에 대한 깊은 造階를 가지고 新東亞의 建設運動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러하여 정치적으로는 레오구라시를 兩民族에게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코렉티브를 사회적으로는 휴머니즘을 주장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로써 協和萬邦하는 意識을삼게하면 우리의 진로는 스스로 열릴 것이오. 그와 동시에 우리의 新東亞 그리고 新世界建設에 대한 貢獻은 史上에 赫赫할 것이다.

「우리는 일즉 서구의 사상에 질서에 배우고 이미 그것을 우리의 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이호로부터 배웠으나 우리는 서구에서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다뭇 서구문화를 戰取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流儀로 바다드러 東方化하고 또 東方化함에 의하여 하나의 새것을 창조하려한다」 (日本評論 12월호 社說) 원래 西歐文化와 東方文化를 대립시킬 필요도 없거니와 그리함으로써 新建設의 의식이 나오지 않는 것은 以上の 言論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新建設意識은 東方的의 것이 되여도 아니될 것이오. 서구적의 것이 되여도 아니될 것은 세계성을 가진 新建設의 本質로 보아 단언할 수 있다. 그림으로 그것은 東方的인 동시에 西歐的이오 그리하여 世界的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以上の 言論이 너무도 抽象的인 것은 엇지 되었든지 그로써 孫文의 三民主義를 揚棄할 수 없는 것은 觀念哲學이 실제사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므로 新東亞建設의 의식을 論함에 當하여 지역적으로 東方的의 것과 西歐的의 것과는 분별하는 것보다 시대적으로 超地域的의 의식을 발견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西歐的의 것을 東方化한다고 西歐意識이 揚棄되지 아니할 것은 무엇보다도 <51> 東方文化의 後進性이 입증하는 바이어니와 지역적으로 西歐的인 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오 時代意識으로해서 그의 超時代性을 부정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그것은 超地域的의 時代意識을 闡明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써 新東亞建設의 의식을 삼는 동시에 나가서 世界建設의 首途에 서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으로 해서 위에서 말한 理想主義는 원래 西歐와 東方을 초월한 時代意識이 될 수 있으니 新東亞의 協同體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현될 계기가 전개될 것은 필연한 理勢이다.

東亞의 再編成과 朝鮮人

印貞植

中國共產黨의 最高領袖 毛澤東은 『持久戰을 論한다』는 장편의 논문에 있어서 日支戰爭의 全展望을 3개의 계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第一을 階段인 適의 戰略이 進攻이고 我的 戰略이 방어의 시기이며 第二의 階段은 適의 戰略이 수세이고 我的 戰略이 반공준비의 시기이며 第三의 階段은 我的 戰略이 반공이고 適의 戰略이 퇴각시기』(改造 10월 특대호 참조)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毛澤東은 이 第一階段에 있어서의 『適의 企圖는 廣東, 武漢, 蘭州의 三地點을 占據한 후 이 三地點을 연계하는데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主觀과 希望을 떠나서 객관적 정세를 냉정히 파악하려는 如何한 支那人도 毛澤東의 처방한 日支戰爭의 運勢判斷書에 대해서 최대의 疑訝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京과 天津 上海와 廣東, 蘇州와 杭州 등, 해안선에 沿한 중요도시가 皇軍의 손에 모조리 陷落되고 黃河流域과 長江一帶의 制霸가 帝國의 지배 하에 완전히 거두어진 今日廣東, 武漢, 蘭州의 三地點이 <52> 다시 완전히 占據되고 말었으니 이로서 帝國은 全支那의 中原에 霸를 부르게된 것이다.

中原에 霸를 制하는 者, 全中華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반만년간의 全支那 정치사를 통해서 一貫되어온 기본원칙이었다. 無常하게 轉變하여온 王道와 霸道の 全系列도 모다 이 기본원칙에 순응해서만 起伏될 수 있었다. 아무리 현대의 支那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統一된 집권적인 근대적 기구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皇軍의 손에 점령된 지역은 실로 現代支那의 心臟部를 구성하는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中原의 地帶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毛澤東 등 中國共產黨의 이론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현대 支那에는 아직도 自作自給의 半封建的인 경제요소가 多分히 殘存하고 있다. 『아미-바』와 한 모양으로 어느 부분을 절단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半封建的인 경제관계의 傳統的인 執着力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결코 中原의 地帶를 빼앗긴 것이 抗日支那의 今後的 抗戰力에 대한 치명적일 타격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武漢이 함락된 직후 毛澤東은 亡命途上, 外人記者와의 「일터-뷰」에 있어서 『日本軍이 점거한 지역은 아직 全支那의 3분의 1도 못된다. 남은 3분의 2는 抗日政權의 지배하에 있다. 이것은 今後的 抗戰의 築源地이며 根據地이다... 최후의 승리는 中國의 側에 빛나고 있다』라고 敗戰의 醜態를 교묘하게 辯護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皇軍의 손에 거두어진 지역이 全支那의 3분의 1을 점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占據된 지역의 廣狹性 如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

如何에 있는 것이다. 漢口를 『마드-리드』로 化하려든 그들 抗日首領들이 이 武漢조차 상실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그들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重慶으로 昆明으로 오직 逃避와 退却의 길을 고집비였을 뿐일 今日的 抗日政權은 그들의 豪言大語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地方政權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否認할 수가 없을 것이다.

蔣介石은 최근 『中國國民에 告하는 書』(改造 12월호)라는 宣傳文에 있어서 今後的 抗日戰의 主要 전략은 內線作戰이다」라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위, 유격전이란 것이 如何히 巧妙한 戰法이라 할지라도 의기를 상실한 아무 聯絡도 없는 敗殘兵의 蠢動을 가지고서 失地를 回收할 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게 大膽한 論理가 아니면 안된다. <53>

그러므로 要件대 武漢의 함락은 그들 抗日政權에 대한 最後의 결정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로서 전쟁은 支那側으로 보아서나 帝國의 便으로 보아서나 확실히 새로운 階段으로 轉入하고 있다.

爲先 支那側으로 살펴보자.

毛澤東은 다시 武漢 陷落 直後의 前記 「인터-뷰」에 있어서 『전쟁은 지금에야 第1階段에서 第2階段으로 다시 말하면 防禦의 시기에서 反攻準備의 시기로 전입하고 있다』라고 聲明하였다. 그러나 이 豪語를 신용할만한 우둔한 두뇌의 소유자가 과연 한 사람일들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지가 의문이다.

전쟁이 支那側으로 보아서도 새로운 階段으로 드러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敗戰에서 勝戰으로 防禦에서 反攻으로 나가는 階段이 아니고 漸次的 退却에서 決定的 敗戰으로 轉落되는 階段이며 全國의 統一政權에서 한 개의 地方政權으로 失墮되는 致命的인 階段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 同一한 과정을 다시 帝國의 側에서 考察하여보자.

武漢이 함락된 직후 蔣介石과 毛澤東이 前記와 같은 抑制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 池田藏相은 明治節의 담화에 있어서 『武漢攻略은 今次事變所期의 目的達成上 중요한 一階段을 劃한다』라고 말하였다. 과연 新階段이란 무엇이나. 다시 同聲明에 의하면 『日滿支3國의 相携에 정치, 경제, 문화 등 各般에 亘하여 互相連環의 關係를 수립하는 것으로 根幹을 삼는다』라고 설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從來의 長期戰爭에서 今後的 長期建設에로의 移行이 곧 新階段의 特徵을 형성한다. 池田藏相의 이 聲明과 同日에 近衛首相도 또한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同様の 의미를 말하여 今後的 長期建設에 관해서 全國民의 留意를 족한 일이 있다. 물론 今後的 長期建設에로의 이행이란 것은 抗日政權에 대한 應戰의 終熄을 의미하는 바는 절대로 아니다.

『蔣政權을 상대로 안한다』는 근본방침과, 抗日政權의 根絶을 期한다』는 國策的 目標은 곳까지 달성되고야 말 것이며 또 이것이 달성되기까지는 *懲戰은 그대로 계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長期建設에로의 移行이란 것은 應戰의 持續과 아울러 武漢이 함락된 今後的 全國策이 새로운 건설으로 다시 말하면 東亞의 新秩序의 建設-東亞協同體의 結成으로 보담 무거운 重점을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에 불과하다. <54>

요컨대 長期建設이란 것은 日本帝國을 唯一絕對의 盟主로 하는 東亞의 再編成을 말하는 것이다. 東亞의 再編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 경제적 의미의 東亞再編成이란 것은 東亞 各 民族의 共存共榮을 基調로 하는 日滿支 『뿌럭』 경제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로 정치적일 의미의 東亞再編成이란 것은 이러한 경제적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東亞協同體 혹은 東亞聯邦體의 結成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東亞協同體란 것은 白人的 帝國主義에 의한 東亞의 침략을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그것은 白人的 帝國主義的 침략을 배제하는 것이며 白人 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또 東亞協同體의 사상은 抗日支那의 『내쇼날리즘을 超克하는 계기를 포함하는 동시에 추상적일 『터인*쇼날리즘』과도 대립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타고 해서 全東亞를 들어

東亞孤立主義 東亞μον로-主義 지방적 閉鎖主義 지방적 便宜主義에 封鎖해 버리려는 것도 아니다. 全東亞를 들어 한 개의 경제적, 정치적 단위로 결성하려는 것은 한 개의 협동체로의 全東亞가 한 개의 단위로서 全世界史의 前進에 향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다시 이를 문화적으로 고찰한다면 歐羅巴의 문명에 대해서 全傳統과 全成長을 달리하는 東亞民族共通의 문화를 확보하며 또 발전성장케 하려는데 있다. 東亞協同體에 賦與된 이러한 문화적 사명은 결코 歐羅巴文明의 도입을 無條件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東亞의 고유한 문화를 基抵로 해서만 歐羅巴의 文明을 선택하고 또 攝取하려는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歐羅巴文明의 無批判的 模倣을 배제할뿐 아니라 다시 歐羅巴文明에 대립하는 東亞的 封鎖主義에도 대립된다.

要컨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러한 空前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려는 것이 今後의 長期建設의 과제가 아니면 안된다. 또 今의 支那事變이 帝國의 側으로 보아서 한 개의 역사적인 聖戰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黃河와 長江의 유역에는 幾萬의 英靈이 光榮에 싸히여 고요히 잠들고 있다. 그들은 결코 침략의 병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피는 오직 東亞의 행복과 繁榮을 위해서만 흘려진 것이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오직 東亞新秩序의 확립에 의해서만 代償될 <55>수 있을 것이다.

『동방의 새로운 戰場을 향해서 炎天에 짝이면서 黃塵에 싸히여 진군하여 나아간다. 나는 이 풍경을 비할데 없이 아름답게 느꼈다. 나는 이 進軍에서 타올르는 위대한 힘을 느꼈다. 脉脉이 흘러넘치는 힘찬 波潮를 느꼈다』라고 戰場에선 火野軍曹는 『麥과兵隊』에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脉脉이 흘러넘치는 힘찬 波潮 속에서 日本民族의 위대하기 짝이 없는 莊嚴한 創造力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위대하기 짝이 없는 역사적 창조력이 今後의 長期建設의 과제로서 前記와 같은 東亞新秩序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亞細亞의 모든 民族과 같이 우리 朝鮮의 民衆도 이처럼 새로이 결성될 東亞의 新秩序 다시 말하면 東亞協同體의 완성을 전제로 하고서만 今後의 民族적 운명을 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今의 朝鮮人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로서 이 東亞協同體의 題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구현될 이 東亞協同體의 理想을 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여 마지 않는 朝鮮民衆의 今後의 방향을 如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첫째로 東亞協同體의 理想은 民族主義 또는 謨스主義에 입각한 朝鮮의 장래관을 철저히 거부한다.

이 東亞協同體의 理想은 日本帝國의 臣民으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다할때에만 朝鮮民衆에게 생존과 繁榮과 행복을 약속하려 한다. 여기에 朝鮮人의 운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한계는 명백히 是認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東亞協同體의 理想은 今의 朝鮮人의 운명에 관해서 심각한 關聯性을 가진다. 이 심각한 관련은 우리들 朝鮮人의 나아갈 唯一의 政治的 路線으로서 內鮮一體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감히 斷言할 수가 있다. 今의 朝鮮人 問題는 곧 內鮮一體 問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워 그러냐하면 內鮮一體 이외의 一切의 路線이 한 것 迷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노선 이외에 아무 길도 남겨진 길이 없기 때문이다. <56>

나는 以下에 있어서 이 內鮮一體에 관한 나의 所信을 披瀝하여보고저 한다.

첫째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懷疑하는 바 內鮮一體의 가능성 如何의 문제이다. 그런데 가능성 如何의 문제란 것은 적어도 한 개의 역사적 운동에 관한한 사회적 필연성의 如何의 문제로 歸着되고 만다. 워 그러냐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반다시 사회적 필연성을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또 필연적이란 것은 가능성이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內鮮一體의 필연성을 논증함에 있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契機에서 究明하려 한다.

첫째는 日本帝國의 東亞制霸 上 朝鮮이 占한 바 大陸兵站基地로서의 특수적 지위에서 抽出되는 契機이며 둘째는 事變의 進展과 東亞協同體形成過程의 進展에 따라 加速度的으로 促成되는 朝鮮民衆의 國民적 자각과 大陸政策에로의 자발적, 적극적 협동의 契機이며 셋째는 明日의 政권을 「리드」하려는 國內의 革新勢力의 大膽하고 또 革新的인 國策에 대한 당연한 기대로부터 오는 契機이다.

이 세 가지의 契機는 서로 作用하고 또 서로 浸透하여 內鮮一體에 대한 民衆의 깊은 要望과 아울러 朝鮮民衆生活의 역사적인 變形을 齎來할 것이라고 나는 確信하여 마지 않는다.

첫째의 契機부터 考察하여 보자.

滿洲事變이래, 朝鮮에 課與된 경제적 사명은 「日滿경제협력의 紐帶」로서의 지위이었다. 그러나 支那事變의 發勃을 계기로 하여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전日本의 통제가 강렬히 요구됨에 따라 이 『日滿經濟협력의 紐帶』라는 經濟指導原理가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架空的이란 것이 점차로 폭로되기 비롯하였다. 대체 어떠한 나라 어떠한 지역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관계가 단순히 유대적 역할에만 중시하고 또 그것만을 主要使命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支那事變을 계기로 朝鮮에 대한 『日滿經濟협력의 紐帶』라는 표어는 大陸兵站基地라는 보담 구체적이고 統制經濟의이고 大陸政策의인 새로운 표어에로 변형되었다. 朝鮮이 日本帝國의 大陸政策에 있어서의 兵站基地라는 이유는 물론, 朝鮮이 占한 바 특수한 지리적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는 바이지만 이 개념의 내용을 보담 詳細히 究明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諸點이 列擧된다. <57>

(1) 朝鮮海峽 혹은 支那海를 건너서 軍수품을 전선에 수송한다는 것은 將來戰의 규모가 클 것을 상상하여 尙大한 船*을 要하며 技術的으로도 多大한 困難을 伴한다. 支那事變에 있어서도 이미 어느 정도까지 이 사실이 입증되었다.

(2) 設使 船*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潛水艦, 비행기 등의 장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서 將來戰에 있어서의 兵站的 역할을 內地에만 기대한다는 것은 適宜의 策이라고 할 수가 없다. 朝鮮, 滿洲, 北支 등을 비교하여 兵站基地로서의 優劣을 고려하여 볼 때 近代工業을 부식함에 있어서도 朝鮮이 기초적 조건이 가장 整備하고 있다. 滿洲國에는 重工業의 기초가 될만한 下請工業이 今日까지 발전된 바가 없지만 朝鮮에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었다. 勞働者供給의 點으로도 朝鮮은 이미 教育制度가 滿洲國에 비해서 수십년을 前進하였음으로 훨씬 優良하다... (鈴木正文 著 『朝鮮經濟의 現段階』)

이러한 兵站基地로서의 역할은 다시 朝鮮의 一般民衆生活에 대해서 莫大한 影響을 齎來한다.

첫째로 重工業 특히 軍需工業이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朝鮮社會의 내부적 모순이 완화된다. 朝鮮經濟機構의 기본적인 특징은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半封建的인 경제관계가 아직도 뿌리깊게 殘存하고 있음에 反하여 公業생산에 있어서는 內地에 비해서도 오히려 高度構成을 가진 獨占資本이 지배적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高度構成을 가진 工業資本이라 할지라도 重工業 특히 軍需工業의 莫大한 발전의 傾向은 朝鮮의 農村過剩人口을 도시에서 공장에로 충분히 흡수하기에 足하다.

近年 咸南地方의 重工業地帶에 있어서 노동자의 부족이 絶실히 哀訴되고 있는 奇現象은 這間의 사정을 반영하는 반가운 일이다. 要컨대 重工業의 급격한 발전은 滿洲, 北支에로의 대량적 진출과 아울러 도시의 失業群像과 농촌의 과잉인구에 대해서 광대한 활로를 開拓한다.

둘째로 兵站基地로서의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近代的으로 또 日本的으로 조직되고 훈련되고 교육받은 産業豫備軍의 대량적 존재가 필수조건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朝鮮은 滿洲國이나 北支에 비해서 약 20년이 앞섰다고 朝한다. 이러한 관계가 滿洲國이나 北支가 大陸戰線에 보담 近在함에도 불구하고 朝鮮을 當面의

가장 중요한 兵站基地로 선택케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근대적 공장의 노동능률의 비교에 의하면 朝鮮에서도 小學教育을 받은 따라서 국어를 해득하는 노동자가 국어를 해득치 못하는 <58> 노동자에 비해서 2할 내지 3할의 능률이 높다 한다. 그런데 總督府의 발표에 의하면 現在 朝鮮의 小學教育을 받은 産業豫備軍의 수가 70만명에 달하는데 昭和 12년도 以降 21년도에 이르는 第2次 教育普及計劃其間에는 小學校의 수용능력을 168만명으로 簡易學校의 수용능력을 15만4천명으로 확대증가할 작정이라 한다. 이러한 교육 보급의 경향은 朝鮮의 工業化와 兵站基地로서의 朝鮮의 再編成의 過程에 따르는 역사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면 않된다. 참으로 朝鮮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반가운 현상에 情熱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者 그 누가 있으랴.

셋째로 다시 朝鮮의 兵站基地化 즉 工業化의 과정은 『農業朝鮮』에 대한 『工業朝鮮』의 비중을 더욱 더욱 무겁게 하여 나아간다. 朝鮮農業의 封建的 零細性은 세계를 휩쓴 農業恐慌의 여파와 합세되어 朝鮮의 농업及 농민생활의 참담* 貧窮化의 경향을 促成하는 동시에 總督政治로 하여금 특히 재정 及 치안 상의 문제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桎梏으로 유도하여 왔다. 이 桎梏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字垣總督은 이미 農村振興책과 아울러 農工併進政策을 朝鮮經濟指導의 原理로 삼아왔다. 다시 대륙정책의 현실적 진행은 이러한 農工併進의 경향에 一層 拍車를 가하여 重工業의 왕성한 계획과 아울러 농촌의 진흥, 農業의 商業的 經營 工業原料로서의 농업의 조성 등 一聯의 정책을 강화케하여 온 것이다. 米穀에만 編重하는 從來의 農業政策은 세계적 農業恐慌이 이미 一蹴해 버린지 오래다. 현재에는 양모, 면화, 亞麻, 훗부, 燃料알골用芋類 등 工業用原料의 농업생산이 極力獎勵 되어 원대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또 水産業 등의 방면을 보드래도 從來의 原始的 漁獲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加工方面에서의 적극적 진출을 보이고 있다.

要件대 農工併進의 이러한 정책은 전술한 바 農村過剩人口의 大量的 消化의 경향과 아울러 朝鮮의 농촌을 急遠한 「템포」로 振興, 繁榮케 할 것이라고 확신된다.

넷째로 兵站基地로서의 朝鮮에 요구되는 것이 輕工業이 아니고 重工業 내지 粗工業이란 것은 朝鮮人の 손에서 경영되는 中小商工業과 衝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後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助長하는 動機가 될 수 있다. 重工業이 전제가 되는 下請工業은 今後 朝鮮人 企業家의 손에서 一層 擴大될 전망을 가진다. 또 朝鮮 從來의 中小工業電球瑠王郎鐵器燐寸과고 무靴 등은 이러한 重工業 내지 粗工業의 지배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아무 관계없이 現在에 있어서 이미 內地品과 結杭하여 能히 <59> 優劣을 다투면서 世界市場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朝鮮의 兵站基地化는 帝國의 東亞制霸와 또 東亞西協同體의 구성에 있어서 朝鮮의 占하는 바 정치적 지위에 중대성을 加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南總督은 이미 尹致昊氏와의 회견에서 東洋人の 『동양건설의 핵심은 內鮮一體의 완벽에』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치안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되는 동시에 조선인의 정치적 불평 내지 불만을 一掃하고 朝鮮人으로서 하여금 日本帝國의 大陸政策에 100퍼-센트의 성의와 정열을 가지고 협동케 하기 위해서는 內地人과 동등한 국민적 의무를 다하게 한 후 內地人과 동등한 정치적 자격을 그들에게 賦與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현재 中央政界에서 東亞協同體의 문제와 아울러 朝鮮人參政權의 문제가 열열히 討議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을 要件대 大陸政策의 진행에 따라서 朝鮮에 課해진 兵站基地化의 要請은 우리 朝鮮人の 생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爲先 이만한 福利와 繁榮을 약속할 수 있다.

여기에 內鮮一體化의 중요한 계기- 즉, 朝鮮의 兵站基地化로부터 오는 한 개의 중요한 계기가 존재한다.

內鮮一體化의 이상의 계기가 帝國의 大陸政策의 요구에서 출발되고 있음에 反하여 第2의 계기는 大陸政策의 진행에 따라서 多大한 복리와, 번영을 기대하게 되는 조선민중의 자발적 의사로부터 출발한다. 제1의

계기가 상부로부터 즉 국가로부터 강행적 성질을 가지고 관철되고 있음에 반하여 제2의 계기는 下部로부터 즉 民衆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출발된다. 이리하여 이 두 계기의 합류에 있어서 우리는 內鮮一體의 具體化-참된 의미의 內鮮一體化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개의 民族으로서의 朝鮮人은 허다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朝鮮人에게도 남에 지지안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은 他余의 民族에 비해서 몹시 총명하고 영리한 점에 있다고 나는 본다. 事變勃發 이래 우리 朝鮮人은 全 民族을 들어서 제국의 국책에 충실하게 협조하여 왔다. 長鼓峰사건의 당시에도 위정자의 기우에 반해서 조선인은 일계불란 곳까지 제국의 측에서 충성을 다하여 근대적 문화국민으로서의 조직성을 보이였다. 금일의 조선인의 정치적 태세를 大正 8년 당시의 그것과 비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天壤과 같은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개의 주의자가 전향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民族으로서의(60) 朝鮮人이 충실한 轉向을 표시한 것이다. 오직 帝國의 大陸政策에 곳까지 협동하는 충실한 국민으로서만 개개의 朝鮮人의 행복과 繁榮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今日的 朝鮮人의 政治的 路線이란 이 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사실 이번 事變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직관적인 자각을 촉진한 것은 東亞의 정세에 대한 그들의 정확한 관찰 내지 비판이 원인이 아니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정에 있어서 『꿈뮈니스트』 혹은 『나쇼날리스트』의 여러 가지 執拗한 선전 내지 煽動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위가 一步一步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直覺하였다. 苹果의 實例를 들어 보자. 大邱, 黃州, 元山, 鎭南浦 등의 지역 일대는 苹果의 豐産地로 일흠이 높다. 그런데 苹果의 생산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3배 내지 4배가 올랐다. 이것은 물론 支那事變에 의해서 광대한 北支의 시장이 새로이 개척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苹果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他余의 모든 특산물도 北支와의 관계에 있어서 同様の 전망을 가진다. 苹果는 한 實例에 불과한다. 일반적으로 朝鮮農村과 事變의 발전과의 이러한 연관성은 농업의 상업적경영 농업경영의 기업화 농산물의 가공화 농업기술의 개량 농산물가격의 증진, 농민생활의 富裕化 등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여 朝鮮農民生活의 공전의 繁榮을 齎來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人口問題에 있어서도 一般民衆은 행복되고 있는 그들의 지위를 直觀하고 있다. 總戶數 200戶를 넘지 못하는 平南 龍岡地方의 一農村에서는 北支와 도시에서의 新移住者가 最延數 3, 년간에 15, 6명에 달하게 되었다. 農村過剩人口로서 飢餓線上을 헤메이고 있는 그들이 도시의 노동자로서는 日給 60錢 이상 내지 2圓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滿洲와 北支의 개척자로서는 달마다 약간의 송금까지도 하고 있는 現狀이다. 또 事變以來 朝鮮社會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過剩人口問題에 있어서도 從來의 矛盾과 桎梏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세계를 들어서 失業洪水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 朝鮮의 농촌에서는 지주의 집에서 『머슴』 구할 수 없다는 기이한 현상이 呈示되고 있다. 總督府에서는 이미 年年 1萬戶 限度의 貧農을 鮮滿拓殖會社의 손을 거쳐서 滿洲國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 1만戶의 滿洲移住만으로서도 朝鮮農村社會의 계급적 모순을 완화하는데 多大한 공헌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이에 가해서 北支에 軍需工業으로 흡수되는 대량적인 過剩人口를 생각할 때 우리는 從來 오래동안 農村社會를 괴롭혀온 人口問題에 있어서도 확실히 樂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61>

이리하여 朝鮮의 民衆은 이 人口問題의 方面에서도 各自의 지위가 大陸政策의 진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안정되고 향상되고 있는 것을 直覺하고 있다.

다시 輸出入關係에서 본다 할지라도 농촌의 特殊農産物 生産者와 함께 도시의 中小商工業者들도 事變의 進展과 北支의 안정에 따라 그들의 이해관계를 민첩하게 감각하고 있다. 새로이 개척되는 광대한 시장을 목표로 하는 中小商工業이 朝鮮人의 商工業者間에서도 이 戰時經濟體制下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勃興되고 있다. 今後 長期建設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中小商工業의 이러한 경향은 더욱 促成될 것이다.

이외에도 다시 세상의 주목을 끌고있는 繁榮의 경향은 今日的 왕성한 鑛山景氣에서도 볼 수 있다. 金, 銀,

銅, 鐵, 重石, 水鉛, 硫化鐵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 등 各樣의 금속을 무진장으로 포함하고 있는 鑛業朝鮮의 豐穰한 자연은 事變의 進展과 併行하여 또 그로부터 막대한 刺戟을 받으면서 處處에서 개발되어 다대한 수의 小市民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一般民衆은 大陸政策에 대한 全幅的 지지의 감정을 품게된다.

이를 요컨대 北支事變發勃이래 朝鮮民衆이 실로 全 民族을 들어서 帝國臣民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帝國의 大陸政策에 껏까지 협동하려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여 온 것은 실로 그들이 이 事變과의 관련에 있어서 일반적 福利와 繁榮의 길을 직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면 안된다. 漢口의 함락을 獎機로 하여 長期戰爭은 長期建設의 新階段으로 轉入하였다. 亞細의 亞 역사를 철저히 개조하는 이 長期建設의 巨步가 전진되면 될수록 朝鮮民衆에게 약속되는 행복과 繁榮의 길은 더욱 더욱 廣濶하게 개척될 것이라고 확신된다. 또 이에 따라서 帝國統治에 대한 民衆의 절대적 信望國民으로서의 精神的 自覺 日本主義의 民衆의 間에로의 침투 內鮮民族의 완전한 평등화 등 요컨대 內鮮一體의 구체화 과정이 一步一步 추진되어 나아갈 것이다.

今日の 朝鮮民衆은 벌써 內鮮一體로 熱烈히 要望하고 있다. 또 그들은 이 內鮮一體의 具體化의 과정에 있어서 帝國의 國策이 內鮮一體의 眞髓 內地民族과 朝鮮民族의 완전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평등화와 이 평등화를 基調로 하는 內鮮兩民族의 合流의 과정을 만족됨이 있게 추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62> 여기에 鮮內一體의 필연성의 第2의 계기-다시 말하면 下部로부터 民衆으로부터 솟아오르는 熱烈한 要望의 獎機가 있는 것이다.

皇室만을 중심을 推戴하고 皇室만을 존중하고 皇室과 人民의 間에서만 차별을 是認하는 新日本主義의 革新思想은 226事件 이래, 경제, 정치, 문화 등 各 분야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적 潮流를 형성하면서 明日의 帝國政權을 좌우하려한다.

우리가 內鮮一體의 진실한 실현을 또 東亞大理想의 완전한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國家權力에 있어서의 革新勢力의 增長의 필연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內鮮一體化의 필연성의 第3의 계기가 존재한다.

이상에 말한 바 鮮內一體 필연성의 3개의 계기는 各各 明日의 朝鮮을 향하여 서로 침투하고 서로 작용하면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위대한 역사적인 變革의 湖潮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潮流를 타고 全 民族을 總動員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민족으로서의 朝鮮人에게 內鮮一體에 대한 信念과 情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信念과 情熱이 없는 민족의 앞에는 오직 滅亡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우리는 爲先 帝國臣民으로서의 국민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적 임무 중에 最重要의 것은 國防兵役의 의무이다. 明年度로부터 실시되기로 결정된 滿洲國의 徵兵制는 우리들 朝鮮人에 대해서 막대한 衝動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今月의 革新勢力에 대해서 그의 대담하고 亞細亞의이고 革新的인 政治的 態勢에 喪心으로서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志願兵制度의 실시만으로서 우리는 물론 만족할 수 없다. 志願兵制度는 다시 義務兵制度에 까지 擴大強化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들의 국민적 성의가 天에 달하여 志願兵制度의 勅令이 나렸다. 다시 義務兵制度의 실시를 획득키 위해서 우리들의 100퍼-센트의 국민적 정열을 示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義務教育制의 실시도 머지 않은 장래로 약속되어있다. 이 義務教育의 실시는 徵兵制의 전제인 동시에 內地延長主義 전제가 아니면 안된다. <63>

진실한 의미의 內地延長主義만이 內鮮一體化의 정치적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內地民族과 동일한 국민적 의무를 다함에 의해서 획득되는 국민적 권리란 內地民族과 동등한 정치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內地の 모든 정치제도-普通選舉制府縣制 의무교육제 등이 內地와 동일한 정도로 朝鮮에도 擴大延長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기대한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있다. 나아가자 高麗의 자녀들아.

MaRrhons?! Marchons!

東亞新秩序와 革新

車載貞

武漢 3鎮과 廣東의 함락은 支那事變自體의 戰局的 발전에 新段階를 劃하였을뿐더러 東亞史發展의 방향에 新標幟가 되고 말았다. 1年有餘來의 事變은 이것을 계기로 비로소 그 相貌와 個性을 전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全世界의 面前에 나타내인 것이다.

抗敵 蔣介石政權은 이로써 그 抗戰의 최대 근거를 상실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國際外交的 근간을 빼앗기어 발서 일본의 事變 相對者로서는 지극히 무력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국제 금융자본의 傀儡 蔣介石政權의 무력화는 곧 支那를 지배해온 英米佛 등 歐米資本의 支那에 있어서의 敗北과 無力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歐米의 資本的 帝國主義의 極東支配의 최대 堅壘의 한아가 粉碎된 세음이니 歐米의 資本的 帝國主義가 1世紀來*構維待해온 바 東亞의 侵略體系는 이에 그 결정적 파국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써 事變은 그 본래의 목적의 본격적 軌道 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으니 今次 事變의 參與 대상과 목표는 支那民衆과 支那市場의 帝國主義的 獨점이 아니라 歐米資本의 支那侵略과 그것의 走狗인 抗日政權의 阻止排除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64> 東亞에 가장 합리적인 新秩序를 부여수립하는데 있겠음에 鑑하여 武漢攻略 後의 事變은 정부당국의 성명과 같이 正히 新단계에 발전하였다.

近衛內閣은 武漢攻略 後의 聲明에서 東亞新秩序의 수립을 말하였다.

事變 後의 東亞에는 如何한 樣相의 新秩序이건 從來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출현할 것은 어김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 新秩序에 관하는 한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막연한 한 개의 개념이다. 支那에서 歐米의 帝國主義가 무력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驅逐될 수 있다는 것과 抗日政權이 소멸하고 新政權이 수립된다는 것 中國의 赤色勢力을 驅逐하고 동시에 共민테룬의 赤色通路를 粉碎한다는 것 그리고 묵은 中國과 묵은 東洋을 結縛해는 一切의 外交關係가 예컨댄 9個國條約類의 新事態의 正세에 부합치 않는 것이 破棄되리라는 것 등등 이외 東亞의 日滿支3國은 정치적 경제적 及 社會문화적인 各部面에 扨하여 완전한 協同體的 單位에 결합되리라는 것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諸點이나 다못 이러한 상식적 諸點의 이론만으로는 東亞新秩序의 진정한 姿態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吾人이 알고저 하고 또 장래의 이 新秩序에 포괄될 全東亞의 民衆의 알고저 하는 點은 그 新秩序의 思想的 及 文化史的 基調이다.

東亞의 新秩序는 端的으로 말하면 東亞諸民族의 新生活秩序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新支那의 건설을 통하여 우리의 新生活秩序를 부여될 約束 下에 있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認識에 도달하는 과정은 東亞新秩序樹立의 능동적 擔當者이며 그 主體인 日本의 內部認識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所與의 東亞新事態와 그 建設의 능동적 主體 즉 客觀과 主觀-의 통일된 표현이 그 과정이 장차 나타날 東亞의 新秩序이기 때문이다.

東亞에 新秩序를 부여코지 하며 있는 日本民族은 그 自身自己의 내부적 新秩序를-것을 日本的으로 표현해서 革新을 요구하며 있다.

그리고 이 國內革新은 大陸의 新秩序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國際外交的 諸必要우에 노여져 있어 <65> 大陸新秩序와의 관련은 交互의이며 同時的이며 併行的인 諸面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東亞新秩序의 내면적 要素로서 日本의 國內革新은 大陸新秩序와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의 國內革新을 이해치 못하고 大陸의 新秩序를 認識하기는 殆히 불가능한 것이니 즉 日本의

國內革新의 思想基調는 곧 大陸秩序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東亞의 新秩序이거나 日本의 革新이거나 그것은 全面的이어서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 國際外交의 諸方面에 亘하여 高찰될 것이나 문제는 그것을 단적으로 요약할때 그것이 資本主義의나 反資本主義의이나이다.

물론 이밖에도 논의의 중점은 여러 곳에 노여질 수 있다. 民族主義와 國際主義, 日本主義와 東亞主義 東亞全體主義와 世界主義 등등의 우에 관점이 두어지는 것도 지극히 필요한 일이나 그러한 일면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관찰의 중점은 資本主義의인 與否이라고 생각한다. 資本的 諸國民社會의 變革過程은 于先 自己否定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필요로 함으로서이다.

그러나 反資本主義의 하드래도 거기에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으니 맑스적 共產主義 獨伊의 全體主義 (나는 팻시쯔사회를 反資本的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또는 革新的 日本主義社會 등등인 바 그러면 革新日本을 능동적 지도의 주체로 하는 東亞의 新秩序는 如何한 質態의 基調우에 입각할 것이며 또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되여지기를 吾人은 바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도에서 事變의 처리로서의 東亞新秩序의 日本的 東亞史的 世界史的 的의를 인식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今次의 事變은 日本革新의 일부이다. 資本主義 日本은 이 事變의 完결과 동시에 완전히 지양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資本主義 日本의 帝國主義的 발전으로서 東亞의 新秩序를 수립할 것은 世界史的 意義를 상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日本自身の 행복적 발전을 의미하지 못하고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을 의미한다. 日本의 資本主義的 勢力은 今次의 事變을 領導的으로 展開할 何等의 주체적 실력을 가지 못하니 實地에 있어서 今次 事變의 領導主體는 日本의 資本的 勢力이 아니다. 그러므로 今次의 事變이 그러한 資本主義的 帝國主義의 침략으로써 귀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66>

日本의 資本主義는 그 경제적 발전이 정돈되기 전에 그 체내에 오히려 왕성한 精力을 포장해 있으면서, 國內的 政治的 思想的 進路에서 완전히 「行詰ル」 하고 무력해졌다. 이 點은 日本만이 가지고 있는 特異性이니, 이것이 日本民族社會의 個性이며, 傳統이다. 이 特異性은 如何한 역사적 시대에서나 日本民族社會의 根柢가 되어있는 點이다. 즉 皇室과 國民과의 특수한 결합의 전통은 日本의 如何한 역사사회에서나 그 國家的 國民的 생활의 중심이며 中樞이다. 이 點을 도외시하고 日本을 인식하는 길은 없으니 문화의 革新, 明治維新, 今日의 革新 등, 모든 國家, 國民生活의 重大한 變革에 있어서 더구나 日本의 個性과 傳統은 모든 發動力의 연원을 그 중심을 皇室과 國民과의 특수한 관계에 求한다.

日本적인 傳統과 個性은 民主主義的 自由主義的, 個人的 資本主義的인 一切의 生活樣態에 反撥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皇道思想, 皇民思想은 근본적으로 資本主義的 社會秩序와는 相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日本主義는, 日本精神을 원래로 資本主義를 한다. 今日의 역사단계에 있어서 참으로 日本의 個性과 傳統과 日本의 文化的 優越性을 그리고 日本民族의 發展을 擁護하기 위하여는 日本은 필연적으로 自己革新의 起點을 資本主義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또 나아가서 資本主義를 부정한 日本民族의 國家의 興隆을 圖謀하기 위하여는 그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발전의 必然的 方向으로서 帝國主義 아닌 大陸的 東亞的 발전이 不可缺의 조건이다. 膨脹하는 日本民族은 그 經濟生活의 욕구와 아우타루키적 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대륙에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것을 수행하는데는 政治的으로 文化的으로 東亞諸民族의 協同結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諸點에서 日本의 革新은 東亞協同亞 東體 新秩序의 수립과 相關不可分의 관계에 노여있다. 그러나 東亞의 經綸은 資本主義 日本으로서도 가능한 일이나 그것에는 帝國主義의임을 요하고 對外的으로 帝國主義的임에는 國內적으로 資本主義임을 要함으로 그것은 國內의 反資本的 諸條件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는 소이는 前述함과 같다.

如上한 諸點이 大陸經營이 革新의 具體的 과정의 일부이며 東亞의 新秩序가 反資本的 基調우에 노여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所以이다.

그러므로 東亞의 新秩序는 征服秩序가 아니며 支配秩序가 아니라 諸民族共存共榮에 因한 協同秩序이며 指導秩序이다. 따라서 그 政治形態 經濟形態 文化形態도 資本的, 帝國主義的, 征服的이 安일 것은 물론이다. 즉 東亞新秩序內에 포괄되는 <67> 諸民族社會는 그 自主的 이익이 존중되고 個性 전통, 文化가 한 가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것이나 새로히 형성되는 東亞思想 東亞傳統 東亞文化에 발전적으로 통일된다는 한계안에서만 자주성이 인정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여기에 말하는 東亞思想이란 이제야 形成道程에 있는 新興 이데올로기이다. 지금 吾人이 개념의 無定見한 總합을 試하여 牽強附會의으로 맞추어 생산하는 수예품이 될 수 없다. 東亞諸民族의 實생활의 교착통일에서 생성발달하여 結晶되는 것임으로 그것은 장래의 범주이다. 다못 여기서 오인이 고려할 것은 東亞思想이나 東亞文化나 그 傳統이나란 것은 그 모두가 과거 또는 현재의 諸民族생활에 소재에 허터져 있는 是은 支那的 滿洲의 蒙古的 日本의인 등등의 文化적 是해를 복고적으로 緝어 모으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서양적인 것을 무조건으로 排斥하는 것으로서 東亞的 文化, 是상의 是조의 是조를 是어서는 안된다. 新東亞文化創造의 태도는 어데까지나 是보적이며, 是조적이어야할지니 是與의 是생활문화의 是일적 是晶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그 是체가 是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日本民族의 是화는 是연으로 新東亞문화의 是盤이 되리라는 것을 是상할 수 있으니 是일의 日本民族文化 是운데에는 是細亞의 是如何한 是족의 是것보담도 是부하게 是당하게 是리적으로 是거의 是細亞文化의 是 부분이 是일성(日本의이지만)을 是지고 是대적으로 是존되어있고 是護되어 있으며 是라있다는 是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是일본문화자신 또한 是新環境에 是放牧하여 是爾諸民族의 是것에서 더 是成育발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東亞思想의 是경우에 是있어서도 亦 是同一하니 是일의 日本精神이 日本民族社會를 是革新하는 是指導原理의 是지위를 是가지고 是있다 하드래도 是支那나 是其他 是民族에게 是그것이 是전면적으로 是 이해용납되기 是어렵고 더구나 是東亞協同民族生活의 是指導原理로서 是무조건 是통용될 수 是없는 是점인바 是것은 是今日の 日本精神, 또는 是日本主義는 是좀더 是근대화한 是보편적 是체계를 是具有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민족 是이외의 是民族으로서는 是것을 是지성을 是통하여 是攝取이해하기는 是불가능할만치 是전통적이고 是감정적이고 是血液的이다

그리고 東亞新秩序의 是세계사적 是의의는 是從來의 是世界主義에 是대하여 是새로운 是방향을 是보혀주는 是것이다. 是從來의 是世界主義가 是추상적인 是점은 是資本主義的인 是것이다. 是맑스主義的인 是것이나 是동일하나 是특히 是後者에 是있어서는 是구체적인 是것과 是다른 是外觀과 是체계를 是가지고 是있서 是往往히 是그 是추상성이 是掩蔽되어 是왔었는데 是東亞協同體는 是그것에 是대한 是重大訂正이며 是新世界主義에 是대하여 是구체적 是체계를 是부여하는 是것이며 是世界秩序를 是재건하는데 是결정적으로 是공헌하는 是것이다.

이상에 是본바에 是의하여 是東亞新秩序와 是日本の 是革新 是兩者間에는 是그러한 是내면적 是연관성과 是交互성이 是작용하고 是있음으로 是識認方法으로서 是兩者를 是분리하여 是관찰할 수 是없는 是것이다. 是그러므로 是文化史的으로 是빛나는 是東亞의 是新秩序는 是東亞諸民族의 是행복을 是약속하는 是東亞의 是新秩序는 是日本の 是國內革新의 是성과와 是相俟하여 是결정될 是문제이다. <68>

여운형 도쿄 제국호텔 기자회견 연설

저자: 여운형

내가 이번에 온 목적은 일본 당국자와 그 이 식자(識者)들을 만나 조선 독립운동의 진의를 말하고 일본 당국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지금 각원(閣員)들과 식자 제군들과 간격 없이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은 유쾌하고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서는 독립운동이 평생의 사업이다. 구주전란이 일어났을때 나와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로 대전에 참가치 못하고 동양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우두커니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장래가 신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자신했다. 그러므로 나는 표연(飄然)히 고국을 떠나 상해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작년 1918년 11월에 대전이 끝나고 상해의 각 사원에는 평화의 종소리가 울리었다. 우리는 신의 사명이 머리 위에 내린듯하였다. 그리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동지 김규식을 파리에 보내고 3월 1일에는 내지(內地)에서 독립운동이 돌발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 곧 대한민족이 전부 각성하였다. 주린 자는 먹을 것을 찾고,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인간 자연의 원리이다.

이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홀로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한인이 긍정하는 바이요, 한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이 허락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이제 세계는 약소민족 해방,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등 세계 개조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운동이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새벽에 어느 집에서 닭이 울면 이웃집 닭이 따라 우는 것은, 다른 닭이 운다고 우는 것이 아니고 때가 와서 우는 것이다. 때가 와서 생존권이 양심적으로 발작된 것이 조선의 독립운동이다. 결코 민족자결주의에 도취한 것이 아니다. 신은 오죽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려 한다. 과거의 약탈, 살육을 중지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세계를 개척하고 개조로 달려나가 평화적 천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우리의 선조는 칼과 총으로 서로 죽였으나 이후로는 서로 붙들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세계의 장벽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에 일본이 자유를 부르짖는 한인에게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한국 합병의 필요를 말했다.

첫째, '일본은 자기방위를 위하여 조선을 합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 차제(此際)에 무너진 이상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이 독립한후라야 동양이 참으로 단결할 수 있다. 실상 일본의 의도는 이익을 위했던 것이었을 뿐이다.

둘째, '조선은 독립을 유지할 실력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과연 병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한민족은 깨었다. 열화 같은 애국심이 이제 폭발하였다. 붉은 피와 생명으로써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면 조선에는 적이었다. 서쪽 이웃인 중화민국은 확실히 조선과 친선할 것이다.

일본이 솔선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는 날이면 조선은 마땅히 일본과 친선할 것이다. 우리의 건설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세의 요구다.

평화란 것은 형식적 단결로는 성취하지 못한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첩첩이구로 일중친선을 말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직 정신적 단결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동양인이 이런 경우에 서로 반목하는 것이 복된 일인가? 조선 독립문제가 해결되면 중국문제도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다. 일찍이 조선독립을 위하여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을 했다고 하는 일본이 그때의 성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을 어겼으니, '한,화' 두 민족이 일본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독립은 일본과 분리하는 듯하나 원한을 버리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진정한 합일(合一)이요, 동양 평화를 확보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의 기초이다. 우리는 꼭 전쟁을 하여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싸우지 않고는 인류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못 얻을 것인가?

일본인사들은 깊이 생각하라.

제 5 회

III. 냉전질서

한국전쟁의 비극



“한국사의 미래를 위한 한국전쟁사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꼭 60 년입니다. 전쟁의 영향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연구는 전쟁의 기원·발발·과정에 집중하였고, 국제정치사적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짚어보는 연구는 미약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대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를 만나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하. 영. 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평화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과 미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편저, 2006), 《변환의 세계정치》(공편, 2007), 《동아시아 공동체》(공편, 2008) 등이 있다.

2010 년은 한국전쟁 60 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성과와 한계는?

한국전쟁 연구사는 현대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1945 년 이후 시작된 세계 냉전질서는 1991 년 구소련 해체와 함께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21 세기의 세계질서는 주인공과 무대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복합의 시대를 겪고 있다.

국제 차원의 냉전사와 한국전쟁사 연구는 1960 년대 말까지 전통적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1970 년대부터 20 년 동안 수 정주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90 년대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고 구소련의 사료들이 대규모로 공개됨에 따라 개디스를 대표로 하는 수정이후주의적 접근이 전통적 접근과 수정주의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면서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000 년대 들어서서, 냉전 이후 해체된 여러 나라의 사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과 소련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의 냉전사를 보다 심화 연구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성격이 ‘내전이나 국제전이야, 내전적인 국제전이나 국제적인 내전이나’ 라는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2000 년대 들어 국내 한국전쟁사 연구는 계속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국제 냉전사 연구는 냉전의 이념적 경직성을 졸업하고 다국사료 분석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성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국내 한국전쟁 연구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갈등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충분히 졸업하지 못한 채 한국전쟁의 국제 체제 측면, 남북분단 측면, 그리고 국내 체제 측면의 3 면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념적 경직성에서 자유로운 한국전쟁사 신연구세대가 등장하여 한국전쟁의 3 면성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다국 사료들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사료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될 때, 국내 한국전쟁사연구가 비로서 세계학계를 주도할 것이다.

한국전쟁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 군사적 냉전의 명실상부한 출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5 년 미국과 소련은 같은 승전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곧 적대국으로 바뀌면서 1947 년 유럽에서 비군사적인 냉전을 시작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전 세계로 확대되며 군사적인 냉전으로 발전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남북한의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선택과 맞물리면서 세계적 규모의 폭력 전으로 커진 것이 한국전쟁이다.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도 동서 냉전의 양극화를 겪어야 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지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패전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전후 냉전체제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계냉전, 동아시아 냉전, 그리고 한반도 냉전의 3중구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중국, 러시아(구소련), 미국은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 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일본에게 한국전쟁은 어떤 사건이었나?

미국은 2 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을 공격했던 일본을 다시는 미국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의 군사·경제 기반을 해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으로 미국의 주적 개념이 소련으로 변하면서 이런 구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핵심적인 정치·군사·경제적 동맹국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오늘날 발전된 일본을 만든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의 하나였다.

동북아시아 혹은 세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냉전 질서의 상대인 소련에게 보내려는 경고 때문이었다. 소련이 세계질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 봉쇄까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비로소 한국전쟁이 왜 세계대전 규모에 버금가는 300 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탈 냉전과 함께 한국전쟁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대량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저절로 한국전쟁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안목의 거시적 원숙함만이 새로운 사료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21 세기 한국전쟁사는 한국사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한국전쟁사가 되어야 한다. '세계질서 속 한반도의 평화' 라는 관점에서 "왜 1950년대 초 한반도가 전쟁의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를 입체적 균형감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재구성한 한국전쟁사가 나와야 한다. 한반도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한국전쟁사 연구가 아니라, 미래사로서 한국사를 위한 '미래 예방적' 한국전쟁사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시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이해 갈등을 풀려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전쟁으로 커지지 않도록 세련되고 현명한 평화외교를 추진하는 국제 정치의 비전과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아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동시에 한국전쟁의 3 면성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의 민주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들과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 를 제안했다. 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은? 이와 관련 한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동아시아공동체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가 이해와 규범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라면 공동체는 정과 가슴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같음의 공감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근대이래 치유되지 않은 역사적 아픔으로, 공동체 이전에 국제사회 형성조차도 어려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의 현실 외교정책은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등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일국중심의 닫힌 민족주의 안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 은 실제 정책과 정치 구호 사이에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래 지난 150 년 동안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은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지금은 초보적 수준의 복합네트워크를 짜기 시작하는 수준이다. 이런 낮은 단계의 동아시아 네트워크에서조차 북한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를 점차 강화하고, 그 속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이룰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의 생겨날 때, 동아시아공동체는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최근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1 세기 동아시아질서중심국가로서의 자신감과 자기중심적 거만함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도국가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한편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상반기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던 일본은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국내문제 해결에 고전을 겪으면서 더이상 21 세기 동아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쇠퇴 논쟁을 겪고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 비전과 미래사의 설계를 동아시아 동반자들과 함께 짜기를 바라고 있다.

21 세기 동아시아의 미래는 새로운 복합 역사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1 세기 동아시아 평화의 새 건축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동아시아는 근대 이전 2000 년 동안 서구보다 평화로운 질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전통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역사적 고찰과 근대 유럽 국제질서와의 창조적 결합으로 21 세기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새롭게 이끌어 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담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4 대 공정과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대한 방어적 역사 논리 개발과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을, 더욱 긍정적으로 확장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뉴스레터 6 월호

<글_ 송승민 전문작가 사진_ 류영희 사진작가>

제 6 회

III. 냉전질서

미중 데탕트와 남북7.4공동성명의 명암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Christian F. Ostermann / James F. Person, eds.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Series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Christian F. Ostermann / James F. Person, ed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One Woodrow Wilson Plaza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3027
www.wilsoncenter.org

ISBN# 1-933549-71-8

Cover imag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 Lee Hurak (right) greets North Korean Second Vice-Premier Pak Seongcheol (left) during a meeting in South Korea on October 13, 1972

© 2011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ontents

Acknowledgements	V
Preface	VI
Executive Summary	VIII
Participants	X
Chronology	XVIII
Opening Remarks	1
Panel I: Inter-Korean Dialogue in the Era of Détente	5
Panel II: Inter-Korean Dialogue and U.S.-ROK Relations	23
Panel III: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DPRK's Relations with Allied Countries	47
Panel IV: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Two Koreas	77
Panel V: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Nations	105
Document Appendix	129
Index	263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stablished by Congress in 1968 and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is a living national memorial to President Wilson. The Center's mission is to commemorate the ideals and concerns of Woodrow Wilson by providing a link between the worlds of ideas and policy, while fostering research, study, discussion, and collaboration among a broad spectrum of individuals concerned with policy and scholarship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Supported by public and private funds, the Center is a nonpartisan institution engaged in the study of national and world affairs. It establishes and maintains a neutral forum for free, open, and informed dialogue. Conclusions or opinions expressed in Center publications and programs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speake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Center staff, fellows, trustees, advisory groups, or an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tha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Center.

The Center is the publisher of *The Wilson Quarterly* and home of Woodrow Wilson Center Press, *dialogue* radio and televis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enter's activities and publications, please visit us on the web at www.wilsoncenter.org.

Jane Harman, Director, President, and CEO

BOARD OF TRUSTEES

Joseph B. Gildenhorn, Chair
Sander R. Gerber, Vice Chair

Public Members:

Melody Barnes, designated appointee from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Hon. James H. Billington, Librarian of Congress; Hillary R. Clinton, Secretary, U.S. Department of State;
G. Wayne Clough, Secretary, Smithsonian Institution; Arne Duncan, Secretary, U.S. Department of Education; David Ferriero, 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 James Leach, Chairman,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Kathleen Sebelius, Secretar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rivate Citizen Members:

Timothy Broas, John Casteen, Charles Cobb, Jr., Thelma Duggin, Carlos M. Gutierrez, Susan Hutchison, Barry S. Jackson

Acknowledgements

This transcript is the second in a series of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s jointly convened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conference was held on 1-2 July 2010 in Washington.

The editors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 FOUND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ITED AIRLINES, and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for their generous financial support for both the conference and this publication.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eyewitnesses to this history – the veteran diplomatic and intelligence officials who traveled from Korea, Bulgaria, and all corners of the United States carrying a hefty 1,700-page collection of declassified archival documents. We are particularly grateful to the faculty and staff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cluding Ambassador Jounyung Sun, Prof. Jongdae Shin, Prof. Kihljae Ryoo, Dean Oullette, and Heeseon Min for their support in organizing the conference and for collecting newly declassified South Korean documents from the Diplomatic Arch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eoul). We would also like to thank Bernd Schaefer and Eliza Gheorghe for sharing many (East) German and Romanian documents. For their efforts, the editors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staff of the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including Kristina Terzieva and Piet Biersteker. Finally, for all of their hard work in assembling the massive collection of archival documents from around the world and in helping assemble this transcript and collection of documents, we would like to thank NKIDP interns Lauren Bae, Ria Chae, Hazel Han, Na Sil Heo, Wandu Hwang, Esther Im, Charles Kraus, Debbie Kye, Yong Kwon, Scott LaFoy, Robert Lauler, Chaeryung Lee, Taylor Sutton, and Will Treece.

Christian F. Ostermann
James F. Person



Preface

With this publication, the Wilson Center presents the findings and transcript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organized in July 2010 by the Centers’ History & Public Policy Progra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The conference is the second in an ongoing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on inter-Korean, U.S.-ROK, and DPRK-Socialist bloc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Begun in 2008 with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Seoul), the conference series brings together newly declassified documents, eyewitnesses, and scholars and engages them in discoveries and discussions of the “white spots” in our countries’ shared history.

The 2010 conference examined the fundamental shift that began to emerge in the major power alignments in East Asia in 1970. With relations between the USSR and China declining over the previous decade to the point of military skirmishes along their shared 2,700-mile border, Chinese leaders understood that they could not withstand the sustained enmity of two global powers and cautiously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Washington as the lesser of two threats. By 1971, the two Koreas likewise began to lessen the tensions that had beset the peninsula ever since the Korean War (1950-1953) and began an unprecedented series of face-to-face negotia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veteran officials from the U.S., Korea and Europe who were part of these historic events, the conference explored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at led to the historic North-South Joint Communiqué of July 4, 1972, through March 1974 when North Korea abandoned inter-Korean dialogue in order to seek a separate U.S.-DPRK treaty to replace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conference also studied the reactions of the two Koreas to the Sino-U.S. opening, the abduction of dissident-turned-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Dae-Jung, the “Korea question” in the United Nations, and a host of other issues affecting inter-Korean, U.S.-Korean, and Sino-DPRK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conference was yet another co-production of an extraordinarily successful and clos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one of Korea’s leading academic institutions headed by President Park Jae-Kyu. We are tremendously grateful to President Park and his colleagues for their expertise, institu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The conference would also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generous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led by President Kim Byung-kook.

The transcript of the discussions will in itself be a unique historical source for scholars and the public in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discussions focused on events dating back nearly four decades, their legacies confront American and Korean policymakers today. We hope that the proceedings will contribute to an informed dialogue on U.S.-Korean and inter-Korean relations, past and future.

Jane Harman
Director, President, and CEO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Executive Summary

In July 2010, the Woodrow Wilson Center's History & Public Policy Program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and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onvened their second in a series of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s at the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For the first and perhaps last time, a group of veteran diplomatic and intelligence official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communist bloc, all active in Korean affairs in the early 1970s, assembled with a small group of scholars in an effort to provide context to, and fill gaps in the available documentary record.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is the result of that historic conference and features extended and probing discussions on the rise and demis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South Korea's changi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position within the communist bloc during the era of détente.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features the transcript of the conference discussions and a selection of primary source documents. The proceedings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South Korean leaders were concerned that after the United States-China rapprochement in the early 1970s, Washington might also unilaterally seek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ese concerns factored prominently into Seoul's decision to engage Pyongyang directly.

After determining that the prosperity gap between the two Koreas was widening, in South Korea's favor, President Park Chung Hee suggested holding discussions on a rota-

tional basis in Seoul and Pyongyang, to mak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ware of the South's growing affluence;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entered into dialogue with Seoul believing that South Korea was ripe for revolution, and that, much like North Vietnam, the North would ultimately prevail over the South;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hief Lee Hurak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the decision to strengthen presidential authority in South Korea under the *Yushin* system – possibly more so than President Park Chung Hee.

Twenty-two documents, obtained from archives in South Korea, Hungary, Romania, (East) Germany, Bulgaria, Albania, and the United States accompany the conference transcript and provide additional context and evidence on this period in inter-Korean, U.S.-Korean, and DPRK-Socialist bloc relations. Among the most noteworthy documents in the collection are newly obtained and translated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foreign heads of state, including Romania's Nicolae Ceaușescu and Bulgaria's Todor Zhivkov. In his 1971 conversation with Ceaușescu, Kim Il Sung described his new policy of peaceful reunification, premised on the belief that South Korea was on the verge of revolution. In his 1973 conversation with Zhivkov, the North Korean leader expressed his frustrations with Chinese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Participants

EYEWITNESSES

DANIEL A. O'DONOHUE entered the U.S. Foreign Service in 1957 and spent much of his early career in Korean affairs. He was a political officer at the U.S. Embassy in Seoul from 1960 until 1964, handl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period 1964-66, Ambassador O'Donohue was assigned to the Korea desk in the State Department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From 1972 until 1974, he was political counselor in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Seoul, followed by two years as office director for Korean affairs in the State Department (1974-76). In 1968, Ambassador O'Donohue was a member of the Vance party sent to Seoul immediately after the Pueblo/Blue House incidents. Ambassador O'Donohue's other assignments included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81-83-dealing mainly with Southeast Asia); Ambassador to Burma (1983-87) and Thailand (1988-91), as well as principal deputy director of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1987-88).

KIM DASOOL was the person at the South Korean Red Cross in charge of the inter-Korean dialogues of the 1970s. He was the team supervisor when the North-South Red Cross Conference first took place at Panmunjeom in September of 1971. Wh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d Cross Conference wa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Seoul and Pyongyang, he served as an overseer of the conference as a whole as the "Head of the Office of the South-North Dialogue" and the "Inter-Korean Red Cross Conference Representative."

LEE DONGBOK is a former member of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Assembly (1996-2000) and a visiting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at Myongji University. Mr. Lee began his career as a political reporter

for *The Hankook Ilbo* (1958-1971), followed by a career of playing a key role in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in varying capacities. Dr. Lee served as a member of the North-South Red Cross Talks (1971-1972), spokesman for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1972-1982), Director-General for North-South Dialogue at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1980-1982), Special Assistant to the Prime Minister (1991-1992) and Special Assistant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1991-1993). Having participated in many of the past rounds of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s a key member of the Southern delegations, Mr. Lee was instrumental in producing a number of major inter-Korean agreements, including the *North-South Joint Communiqué of July 4, 1972*, and the *North-South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of which went into effect as of February 19, 1992.

GEORGI MITOV is a retired Bulgarian foreign ministry officer with thirty years of diplomatic experience. During his tenure, Mr. Mitov occupied a number of position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is assignments abroad included missions to Pyongyang, Islamabad, Odessa, and Seoul. Mr. Mitov was appointed Third, and later Second Secretary at the Bulgarian Embassy in Pyongyang during 1966-1969 and 1973-1975 respectively, and in 1990 opened the Bulgarian Embassy in Seoul, serving as a Charge d'Affaires. He holds a degree in history from Kim Il Sung University in Pyongyang and has attended the Diplomatic Academ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Moscow.

B. DONOVAN PICARD is a partner with Picard Kentz & Rowe. His areas of practice includ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and Dispute Resolution, and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After service in Vietnam (1967-69) and Japan (1969-71), Mr. Picard was assigned

to cover Korea in the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R) and began that assignment with several months assignment temporary duty assignment (TDY) in Seoul during the Pak/Kim Dae-jung election campaign. In 1972, Picard moved from INR to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with particular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He spent the summer of 1973 again on TDY in Seoul during the initial North-South Red Cross discussions and the U.N. General Assembly Korea debate. Mr. Picard has been in private practice since leaving the US Department of State.

WARD THOMPSON is a U.S. Marine Corp Vietnam veteran and holds degrees from Brown University and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His Foreign Service career specialty was the Nordic Countries, where he was political counselor at embassies in Helsinki and Copenhagen and consul general in Gothenburg. He also served at the U.S. Embassy in Seoul as political officer in 1972-75, following one year of Korean language training. He focused on ROK external relations, including the UN, on North-South contacts and on U.S. military concerns and, as a language officer, met with people throughout Korea to contribute to the Embassy's understanding of domestic developments. This experience served him well in his later assignment as Director of the State Department's Office of Human Rights Policy.

SCHOLARS

GREGG A. BRAZINSKY is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Professor Brazinsky is pursuing research on various projects, including a study of Sino-U.S. competition in the Third World. His publications include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Brazinsky also serves as co-director of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old War Group and as senior advisor to NKIDP.

JAMES HERSHBERG is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s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former director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from 1991-1996. His expertise is in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nuclear history. Hershberg received the 1994 Stuart Bernath Prize from the Society for Historian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His work has appeared in the following publications: th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Cold War History*, *Diplomatic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nd the *CWIHP Bulletin*. Hershberg is the author of *James B. Conant: Harvard to Hiroshima and the Making of the Nuclear Age*. He holds a Ph.D. from Tufts University, an M.A. from Columbia, and a B.A. from Harvard.

HONG SEUKRYULE is assistant professor in the history department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Seoul, and an advisor for the Republic of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rof. Hong holds a Ph.D. in Korean Histor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also spent time as a visiting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1999-2000). He specialize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nd specifically, U.S.-ROK and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Prof. Hong's publications include *The Unification Issue and Socio-political Tension in South Korea: 1953-1961* (Seoul University Press, 2001), as well as "Pueblo Incident in 1968 and U.S.-ROK-DPRK Triangular Relation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2001), and "US-DPRK Relations in the early 1970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04).

CHRISTINE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Edmund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of Georgetown University, where she teaches courses on modern Korean and East Asian history. Her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She is presently completing a manuscript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Joseon (1392-1910) monarchy in twentieth century Korea entitled *The King Is Dead*, and has forthcoming articles i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and *Collective Memory in Northeast Asia* (Palgrave-Macmillan). Her next project looks at cultural properties (*munbuwajae*) as an attribute of Koreanness. Kim received her Ph.D. from Harvard in 2004.

KATHARINE H.S. MOON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Wellesley College. Moon is the author of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1997; Korean edition by Sam-in Publishing Co., 2002) and other publications on the U.S.-Korea alliance and social movements in Korea and Asia (e.g., democratization, women's movements,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They are available in edited volumes and academic journals such as *Asian Survey* and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and Korean publications such as *Changjak-gwa Bipyong*, and *Dangdae Bipyong*. Currently, Moon is completing a book manuscript *Protesting America, Pursuing Democracy: Korean Civil Society in Alliance Politics* (forthcoming, GAI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oon received her Ph.D. from Princeton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s.

CHRISTIAN F. OSTERMANN is the director of European Studies and the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as well as director of the Center's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and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He is also co-editor, along with Christopher E. Goscha, of the recently published *Connecting Histories: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in Southeast Asia, 1945-1962* (2010). Before joining the Wilson Center in January 1997 as associate director of CWIHP, he work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a 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 and repository based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is a co-editor of *Cold War History* (London), and a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Security Archiv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also served as a lecturer in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professorial lecturer at Georgetown University. He has been a consultant on several historical documentaries. Prior to coming to Washington, he studied in Bonn, Cologne and Hamburg and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Commission for the History of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Bonn (Germany).

JAMES F. PERSON is coordinator of the Wilson Center's NKIDP and a program associate with the Wilson Center's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Person is currently completing a Ph.D. in history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riting a dissertation o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from 1953-1967. His publications include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WIHP Working Paper No. 52) and "New Evidence on North Korea in 1956" (CWIHP *Bulletin* 16).

RYOO KIL-JA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UNKS) in South Korea, and a former Woodrow Wilson Center public policy scholar. He is currently studying the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of the DPRK from 1965-1974. Now he is a member of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to the senior secretary of the President, and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OK government. Professor Ryoo is also the chair of the Committee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BERND SCHAEFER is a senior scholar with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and a former public policy scholar at that Center. He is completing a book *East Asian Communism and the Superpowers, 1968-1976* for publication in the Center's Cold War Series with Stanford University Press. He was a Visiting Professor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a Fellow at the Nobel Institute in Oslo, and a Research Fellow with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in Washington D.C. and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resden. He holds a Ph.D. from the University of Halle in Germany and an MPA from the Harvard Kennedy School. His publications include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CWIHP, Washington D.C. 2010);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WIHP, Washington D.C. 2004); *Ostpolitik, 1969-1974: Global and European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9; ed. with Carole Fink); and *The East German State and the Catholic Church, 1945-1989* (Berghahn Books, New York 2010).

SHIN JONG-DAE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and a former Woodrow Wilson Center public policy scholar. Prof. Shin's current research focuses on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70s. His numerous publications include *Principal Issues of South Korean Society and State Control* (co-author) (Yonsei University, 2005); and *Theory of Inter-Korean Relations* (co-author) (Hanul, 2005).

WILLIAM STUECK received his Ph.D. in history from Brown University in 1977. He has written widely on U.S.-Korean relations and the early Cold War. Among his books are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1995) and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2002). He is currently a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 of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Georgia.

SUN JOUNYUNG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and is also currently the vice-president and CEO of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Sun served as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uty foreign minister for trade, and South Korea'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Switzerland, and Czechoslovakia.

SAMUEL F. WELLS, JR. is a senior scholar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A specialist on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he has published widely on U.S. strategy and transatlantic relations. He was a co-editor and a contributor to *The Strategic Triangle: France, Germany, and the Shaping of the New Europe* (2006). His latest publication is with Sherrill B. Wells, "Germany's Choice of Shared Sovereignty in the European Union" in Richard Rosecrance, Ernest R. May, and Zara Steiner (eds.), *History and Neore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WOO SEONG-JI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from March 2003 to February 2005. He also worked as a Research Fellow for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August 2002 to August 2003. Dr. Woo received his Ph.D. from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His English articles include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mid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 the Détente Period: Changes in the Threat Perception, Regime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Korea Journal*, Summer 2009), "Triangle Research and Understanding Northeast Asian Politics" (*Asian Perspective*, Summer 2003), "South Korea's Search for a Unification Strategy" (*Orbis*, Summer 2003), and "Adversarial Engagement and Alliance Relations: Triangular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1988-94" (*Issues & Studies*, March 2001). His research interests are North Korean politics,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urrently his research focuses on the dynamics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processes in the early 1970s, 1990s, and 2000s.

YAFENG XIA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t Long Island University in New York, a guest professor at the Center fo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Studies,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in Shanghai, and Wilson Center Fellow. He is the author of *Negotiating with the Enemy: U.S.-China Talks during the Cold War, 1949-72* (2006). His articles have appeared in *Journal of Cold War Studies*, *Diplomacy & Statecraft*,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Diplomatic History*, *Cold War History*, among others. He was a public policy scholar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n 2010.

Chronology

1970

- 9 **July** / The Nixon administration officially announces the withdrawal of 20,000 U.S. troop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15 **August** / ROK President Park Chung Hee proposes a new unification policy beginning with a discussion of humanitarian issues “peaceful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 19 **December** /ROK President Park Chung Hee appoints Lee Hurak as the Director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1971

- 8-14 **April** / At the Fifth Session of the Fourth Supreme People's Assembly, DPRK Foreign Minister Heo Dam announces the DPRK's “Eight Points” on unification.
- 12 **August** / Choe Duseon, president of the South Korean Red Cross, proposes a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to discuss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families.
- 14 **August** /The North Korean Red Cross accepts Choe Duseon's proposal.

- 20 **September** /The first round of preliminary Red Cross negotiations bega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20 **November** /Jeong Hongjin of the KCIA met with Korean Workers' Party member Kim Deokhyeon, opening up a new lin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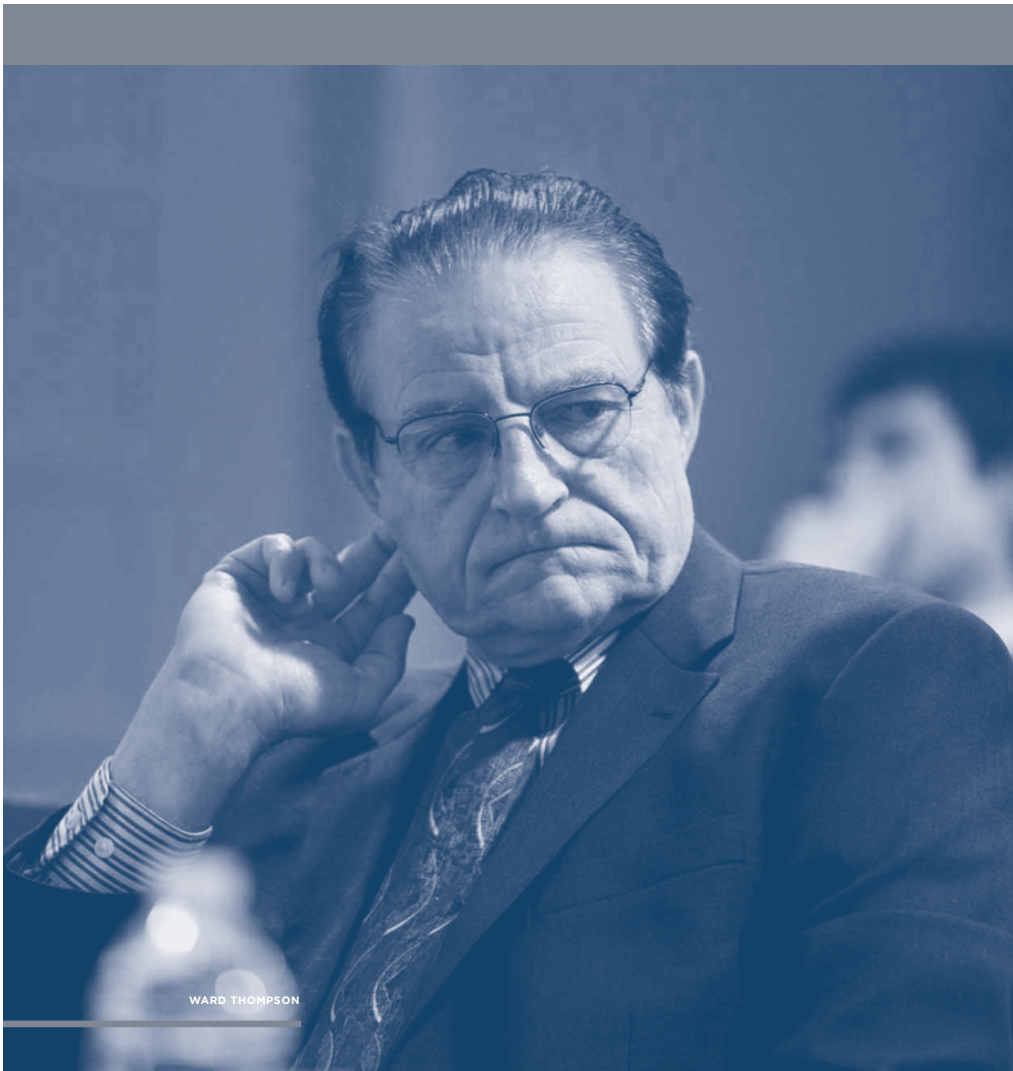
1972

- 10 **January** /Kim Il Sung proposes a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10-22 **March** /A series of preliminary conferences are held in Panmunjeo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to discuss high-level official visits.
- 2-5 **May** /KCIA Director Lee Hurak meets with Korean Workers' Party member Kim Deokhyn in Seoul to discuss unification.
- 21 **June** /Kim Il Sung reveals to *Washington Post* correspondent Selig S. Harrison that he is willing to sign a peace treaty with South Korea.
- 4 **July** /The DPRK and ROK issues a Joint Communiqué, paving the way for the formation of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co-chaired by Kim Yeongju and Lee Hurak.

- 30 **August** / First Plenary Red Cross Talks involving representativ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open in Pyongyang.
- 13 **September** / Second Plenary Red Cross Talks involving representativ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open in Seoul.
- 22-26 **October** /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attend the Third Plenary Red Cross Talks.
- 3 **November** / Lee Hurak meets with Kim Il Sung to discuss reunification and other issues.
- 13 **November** / North and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attend the Fourth Plenary Red Cross Talks in Seoul.
- 30 **November** / Meeting of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opens in Seoul.
- 27 **December** / A heavily rigged plebiscite approves ROK President Park Chung Hee's *Yushin* Constitution.
- 28 **December** / A new constitution is ratified in North Korea, making Kim Il Sung President of the DPRK.

1973

- 14-16 **March** / Second meeting of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is held in Pyongyang. North Korea again proposes a peace treaty with South Korea, but South Korea rejects the proposal in favor of building trust between the Koreas.
- 12-14 **June** / Third meeting of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is held in Seoul.
- 23 **June** / ROK President Park Chung Hee announces the Seven-P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DPRK President Kim Il Sung shortly announces his own Five-Point Policy for National Reunification.
- 8 **August** / Opposition candidate Kim Dae-jung is abducted by the KCIA in Tokyo.
- 28 **August** / North Korea suspends meetings of the North-South Coordinating Committee allegedly in response to Kim Dae-jung's kidnapping.
- 23 **October** / A DPRK gunboat and torpedo boat crosse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By the end of 1973, DPRK vessels cross the NLL on forty-three different occasions.
- 11 **December** / Three DPRK torpedo boats attempt to intimidate United Nations Command (UNC) vessels escorting a routine supply ship to Baengnyeong Island near the NLL. DPRK vessels continue to intrude upon the Northwest Islands over the next several days.



Opening Remarks

by Christian F. Ostermann and
Ambassador Sun Jounyung

SU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source of tension and instability since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The study of history and a re-examination of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may help us to resolve some of the problems that Korea is facing today and even to establish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Today, the Wilson Center is hosting the second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 am very happy to say that many of the key officials directly involved in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policies during the 1970s have assembled here today to offer their testimonies, to fill in some of the missing pieces of the jigsaw puzzle, and to provide greater clarity as to what happened during the era of inter-Korean dialogue and détente. I am very grateful to the veterans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is conference.

OSTERMANN: Thank you very much, Ambassador Sun. Several years ago, Ambassador Sun, if I recall correctly, argued that we should complement our focus on collecting, translating, and publishing documents on North Korea with oral history. The documents, of course, only tell you part of the story. In the case of Korea specifically, historical documents are limited in quantity.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we have a greater number of materials available because of more liberal declassification policies, there are still gaps and white pages in the historical record. It is through oral history, through interviews, and through critical oral history, however, that we can begin to fill in those gaps in the historical record.

Critical oral history is a particular form of oral history. Oral history is usually conducted by interview between one scholar and one veteran policymaker or eyewitness.

“This is very much a historical conference.

It’s also a historic conference.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is group will come together ever again. So today we have a very unique opportunity to reconstruct history, history that will most likely be lost if it’s not captured here today.”

ness. But for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s, we bring as many eyewitnesses from as many sides as possible together with expert scholars and documents. The focus of critical oral history is the eyewitness: the policy, intelligence, and diplomatic veterans from all sides of the event. Obviously we can’t have North Korean eyewitnesses here today, but our dream is that someday we also will have them at the table.

The eyewitnesses are of crucial importance to this exercise. Sometimes our eyewitnesses are afraid that they will be criticized if they attend these events because this is a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That is not what “critical” means in this context. This exercise is not about criticizing anybody. Critical in this case means having documents available; critical in the sense that we hope to really try to get back to the events now several decades past, put ourselves back in the shoes of those who had to live through those times, who had to make policy decisions at the time, and to try to understand the events through their eyes, through their recollections.

The documents are critical in that they will both stimulate memories among the eyewitnesses and also provide a check on recollections. This is a serious historical exercise. We will record and transcribe the discussion here and enlarge the historical record. And to make the transcript of this conference as valuable to future generations of historians as possible, it is important for the eyewitnesses to be as specific, as concrete as possible. The documents, I hope, will allow us to do just that.

And finally, we also have our scholars, our experts, scattered around the table here. Unlike at a normal scholarly conference, the scholars don’t take center stage. They are here largely to listen to the eyewitnesses and in-between pose some questions. The scholars, of course, know the gaps in the historical record and their questions will hopefully prompt, guide, and inspire us to talk about those gaps in the archival record.

This is very much a historical conference. It’s also a historic conference.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is group will come together ever again. So today we have a very unique opportunity to reconstruct history, history that will most likely be lost if it’s not captured here today, and so we very much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is event.

Let me just also say that to the veterans, to the eyewitnesses here today, what we hope you will be able to do is to really go back in time to the early 1970s and forget what you’ve learned about the events between then and now. We hope for

a lively conversation between the scholars and the veterans. Ideally even between the veterans without much input from the scholars. We are interested in really recapturing what it felt like, what your views were at the time, what decisions and actions were taken, fully realizing that at the time your knowledge of the future, and even your view of what was happening then, was incomplete, was only one piece of a larger puzzle.

We are not interested in a lot of prepared statements. Nobody here, not the scholars, not the eyewitnesses, we hope, will give long monologues. We really want to wrestle with a number of issues that have been so far unresolved in history. In order to focus our attention on some of these gaps, we will have two scholars at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We call them provocateurs who will pos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 would like to address during this conference. The eyewitnesses should not feel limited to just those questions, but any insightful information on the subject would be very helpful.

Let me in closing thank and acknowledge a number of institutions and people who worked really hard to make this event happen. Let me first thank the Korea Foundation, which has long supported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Let me also acknowledge the support from the Wilson Center’s leadership in the lead-up to this conference. Let me thank again our partners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for what has become a really wonderful friendship and partnership over the years. The fact that we all are coming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day, I think, is due to the fact that we have really developed this amazing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Last but not least, let me thank my staff for the heroic effort in putting together this conference. At this end, first and foremost, James Person, who coordinates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but also Kristina Terzieva and Timothy McDonnell, and then a host of interns, including Scott LaFoy, Will Treece, Yong Kwon, and Wandu Huang. I would also like to thank Dean Oulet and Min Heeseon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ank you all for your efforts. Finally, I’d like to thank the interpreters for the translations they will provide us over the next day and a half. Thank you.



AMBASSADOR DANIEL O'DONOHUE

Panel I

Inter-Korean Dialogue in the Era of Détente

Chair: *Christian Ostermann*

Provocateurs: *Bernd Schaefer, Hong Seukryule*

SCHAEFER: During the first panel, we are supposed to talk about “Inter-Korean Dialogue in the Era of Détente.” When we talk about the early 1970s, of course, the major global current was détente: talk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on the other hand, after 1971, the rapproch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other major communist powers in Asia besides North Korea had a major impact on détente. Obviously, the Vietnam War made the United States more conducive to talks with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was less interested in talking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void an escalation in Vietnam. And then, of course, China had a major impact on détente for two reasons. First of all, China was perceived by the Soviet Union after 1969 increasingly as a major threat to Soviet interests, which made the Soviet Union more interested in talking to the U.S. and to contain China. China, which started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in 1971, also facilitated détente in a certain way.

Now in this global context, the two Korean states seem to be on the receiving end, and this is what we want to talk about. So I will try to lay out about five major issues we will want to talk about throughout the entire conference, but especially during this first panel. First, were the two Korean states,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re reactive when it came to détente in the early 1970s? Did the Koreans react to outside currents, or were they proactive? Did the Koreans start some of these initiatives



ZHOU ENLAI AND RICHARD NIXON

on their own, independent of international events, or were the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vents?

The second major question deals with the inter-Korean talks. Were the actions both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ed to each other? Initiative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started more or less simultaneously in 1971, but the question is who started first. Did they react to each other or did they act mor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Were the initiatives from the Koreas related, or were they unrelated?

The third interesting question is what motivated North and South Korea? Why were they interested in starting inter-Korean dialogue? Were they sincerely interested in Korean unification at that time? What were the motives of the North Korean side? What were the motives of the South Korean side? Was it mostly economic or was it mostly political, or were there maybe ulterior motives on both sides?

The fourth question concerns the roles of the allies. Were the allies encouraging their respective Korean partner to engage in inter-Korean dialogue? Were they rather discouraging them? Were the allies skeptical or were they optimistic?

Finally, I think it would be very helpful if all the eyewitnesses and speakers would try to address the role of China, because I think this is a crucial player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for two reasons. China, of course, was at that time the most important ally of North Korea. They were extremely close. But China also started rapproch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also had a major effect on South Korea. So the question would be whether the role of China, and particularly the rapproch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d an impact on North Korea's decision to start to engage in inter-Korean dialogue and whether it had an impact also on South Korea's decision to actually conduct this dialogue.

I think the role of China comes together during the Nixon visit to Beijing in 1972. The questions to the South Korean side of course would be: were you very concerned that the West would strike a deal with China behind the Koreas' backs?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know that a North Korean delegation was in Beijing during the Nixon visit and hoped to have a chance to talk to the U.S. If not, the North Koreans were interested in having China act as a mediator for North Korean interests and negotiate on North Korea's behalf. So the role of China, the impact of China, and the impact of rapprochement, I think, would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LEE DONGBOK

be something which I would like all of the eyewitnesses, whether from Korea, Bulgaria, or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ank you.

HONG: Mr. Schaefer spoke rather broadly, so I would like to ask some more specific questions. First, when it comes to inter-Korean dialogue, were there any hardliners opposed to these talks? On August 12, 1972, the head of the Red Cross in South Korea, Mr. Choe Duseon, made a suggestion that there should be a meeting for the divid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uggestion provided the impetus for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Now, on August 6, six days prior to the announcement by the Red Cross, [Director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Lee Hurak met with [U.S.] Ambassador Philip Habib and informed him that South Korea will not have dialogue with North Korea. Any type of contact with North Korea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from South Korea.

At the meeting with the ambassador, Mr. Lee had told him that the Ministry of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d been consulted on the matter. But it is apparent that Mr. Lee had not consulted with the Ministry of Defense, because the Ministry of Defense was opposed to idea of talks. This was the understanding that the U.S. side had at the time. So my question is, during inter-Korean dialogue, what position or stance was taken by the leaders of the defense sector?

My second question is what happened in North Korea?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was also against the idea of dialogue. It appears from the documentation that Mr. Lee had spoken to Ambassador Habib, and that Ambassador Habib had indicated that there were hardliners as well as soft-liners in North Korea. Mr. Lee's comments gave the impression that that Kim Il Sung was a soft-liner and was under pressure from the hardliners in the military. So my

question is directed to the eyewitnesses, Lee Dongbok and Kim Dasool? How did you feel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t the time?

Another question I have is about the peace treaty. In March of 1974, North Korea suggested to the U.S. that there should be a peace treat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ut the question remains, prior to that, was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ver discussed? Was a peace treaty supposed to be signed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We know that there was an official venue in which the suggestion for a peace treaty was made in March of 1971, during the second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 peace treaty ever suggested prior to that? How did the eyewitnesses feel about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Did you ever hear that North Korea did indeed want a peace Treaty?

What w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action to North Korea's suggestion for a peace treaty? We have veteran diplomats on the U.S. side as well, and w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them is how the U.S. reacted to the peace treaty offer by North Korea in the March of 1974?

LEE: I will have the honor to respond first, and I will try to be as succinct as possible while responding to these questions. First, Mr. Schaefer, you asked whether the ROK and the DPRK were reactive or proactive at the time dialogue was initiated. I think my answer is that the ROK was more reactive whereas the DPRK was more proactive. Secondly, were inter-Korean talks interactive or unrelated? Was that your question? I think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d different objectives at the start of the dialogue in early 1970, so I assume that inter-Korean dialogue was unrelated.

STUECK: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two Korean states reacted to each other. Or were they two different streets, one going on in South Korea and one in North Korea and then meeting at some point, or whether one was starting and the other responding.

LEE: Yes, I understand your question. The two Koreas were singing two different tunes and dancing to two different tunes at the same time, so they were rather

unrelated rather than interactive. South Korea had a different objective than the North, so the initiatives were more unrelated than interactive. The two Koreas had different motives. South Korea had concerns about security because of the turn of events in the international theater, including the process of détente which had been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after Richard Nixon's Guam Doctrine. And the concern grew very conspicuously on the part of South Korea about what the security situation was going to be like as the U.S. détente policy was taking shape.

North Korea was more motivated by optimism because of what they saw in the context of the PRC's takeover of the mainland China, followed by the success of military operations in Indochina. The United States seemed to be losing. And while Kim Il Sung had come to power ahead of both China and North Vietnam, now China and Vietnam seemed to be moving faster than Korea. Kim felt rather restive because North Korea was lagging behind. At the same time, Kim was more optimistic because the United States was viewed as being on the losing end of things. Kim was upbeat and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for North Korea's benefit. Kim Il Sung thought that this dialogue [with the South] would help North Korea to pursue unification, while South Korea was concerned about security. That is how I viewed the situation.

And you know, the fourth question, if I understand it correctly, I think that at that time, South Korea was more ill at ease working with allies, particularly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obviously trying to retreat from Asia. By contrast, North Korea was quite upbeat because of China's rise and also because of the situation in Indochina and what looked to be a victory for North Vietnam. So South Korea had more problems with its allies, at least when compared with North Korea.

The role of China at that time was reserved and passive. For example, Kim Il Sung made a visit to China in April 1975 right in the wake of the fall of Phnom Penh to the [Cambodian] communist army. Kim Il Sung was very upbeat and tried to trumpet the Korean Peninsula as the area next in line for communist conquest. So Kim Il Sung made a very provocative remark at a dinner hosted by the Chinese State Council one day in April of 1975 in which he spoke about his preparedness to go to war if necessary and achieve unification. But the Chinese

“South Korea was more ill at ease working

with allies, particularly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obviously trying to retreat from Asia. By contrast, North Korea was quite upbeat because of China's rise and also because of the situation in Indochina and what looked to be a victory for North Vietnam.”

were very reluctant to allow that. The Chinese were obviously seen as trying to play down Kim Il Sung's plans. At that time, China was busier mend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n it was sympathetic to Kim Il Sung's wishes.

Related to Dr. Hong's points, I doubt if during the early 1970s, as South Korea bega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for inter-Korean dialogue, there was any such schism between hardliners and soft-liners in the government. I think that was when President Park's control over all of the government was very secure and I don't think there was any room for that kind of a schism or differences to develop. And Lee Hurak was quite seriously taking things to the president, so much so that the president was able to prevail upon all sectors of the government, so much so that I don't believe there was that kind of a schism. I read in the documents of [Ambassador William J.] Porter having listened to what Lee Hurak had to tell him, but I think Lee Hurak was trying to, I mean he was, as I recall, he was handling his communic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such a way that he tried to make sure that he would secure maximum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I remember him talking to Ambassador Porter and also [John H.] Richardson, who was the CIA station chief, and Lee Hurak was very careful in selecting his words and way of explaining things, but I don't think he was serious if he projected an imag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a state of division over how to handle North Korea. I really doubt that. And I doubt the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t the time was in a position to voice opposition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t tried to open up dialogue.

In the same vein, I have very strong doubts about whether North Korea was that much of a divided house. North Korea more so than South Korea because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was under the Party's control. And when you talk about Party control, it was the control exercised personally by the Great Leader, so I doubt if there was any room for any element in the military to hold that kind of a different view on South Korea.

About the peace treaty, North Korea began talking about it long before 1973. It was terminology which began to surface at the extension of the Geneva Conference in 1954. North Korea at times talked about it in the context of a North-South peace treaty, but most other times North Korea kept on talking about it in the context of U.S.-North Korea peace treaty. When they spoke of the peace treaty,

however, it was not actually the peace treaty itself. They always tried to talk about preconditions leading to the peace treaty, so much so that we were unable to discuss the peace treaty because North Koreans were always coming up with preconditions. It was more the preconditions than the peace treaty itself that they [the North Koreans] insisted on talking about. So there was actually no way for us to talk about the peace treaty.

SUN: That is very helpful. I would like to give Mr. Kim the opportunity to comment as well, but, Bill Stueck, you had an immediate follow-up question for Professor Lee.

STUECK: One of your comments really struck me and that was Kim Il Sung's visit to China in April of 1975. Did you know at the time that Kim Il Sung made this comment at a dinner and if so how did you know? I have been told by a Chinese scholar, who I trust totally, that he has seen a document from that trip on the Chinese side in which Kim Il Sung actually proposed to Mao Zedong and even solicited support for a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Did you know this at the time and if not how did you find out?

LEE: Somehow that portion of Kim Il Sung's remarks reached us almost immediately following his visit to China. I think it should have been through some third party context. And you are right, Kim Il Sung very specifically suggested that it was time for North Korea to pursue unification. But Zhou Enlai was very outspoken in trying to play him down, saying that this is something which you have to think very seriously about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ts troops in South Korea. So China was very negative in contrast to Kim Il Sung's upbeat mood.

OSTERMANN: Thank you, now we've already jumped ahead quite a bit. In this session I'd really like us to think back to the beginnings of inter-Korean dialogue and set the stage for the events as they unfold.



KIM IL SUNG AND MAO ZEDONG

“Kim Il Sung apologized for the January 21, 1968 incident.

This was the incident where the North Koreans actually attacked the Blue House, attempting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D. KIM: I will address the question from Professor Hong about hardliners first. First of all, I think there were hardliners and soft-liners in both North Korea and in South Korea. Now, the suggestion for the reunion of the divided families came during the Park regime. President Park had to think quite long and hard before he made the suggestion. I think the suggestion was made even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Park] had enough knowledge to know that there would be hardliners who would be against such a proposal. Let's talk about the people who make up the divided families. When you look into the composition of these people, you can see that most of these people are people who have migrated or were otherwise refugees from North Korea, so they do have their roots in North Korea and they held a lot of passion and hatred towards North Korea. You could say that these people are actually the hardliners themselves. So in my humble opinion, I think it was that there had been long and hard thoughts going into the decision to first suggest a reunion of the divided families. I think the resistance coming from the hardliners was anticipated ahead of time and was watered down by Park.

I also served in the Korean CIA and the biggest mission that we had at the time was to stop the infiltration of North Korean spies. Now, even within the KCIA we had different opinions. For example, I was personally in favor of dialogue. However, there were people who were serving in other sections, such as the Counter Intelligence Section. These people were hardliners and they were against the idea of having talks.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the hardliners in South Korea did not exist only within the military, but they were also within the population, including the people who were refugees and migrants from North Korea. And of course there were hardliners in North Korea as well.

Director Lee [Hurak] had visited Pyongyang in May of 1972 and at the time he had met with Kim Il Sung. During the meeting, Kim Il Sung apologized for the January 21, 1968 incident. This was the incident where the North Koreans actually attacked the Blue House, attempting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Kim Il Sung's apology came with the explanation that there were certain leftist forces within North Korea who caused this incident to occur and that it was not his own intention. Of course, we didn't buy that at all. We didn't think that an attack on South Korea like that could have been carried out without the approval of Kim Il Sung. However, the very fact that he [Kim] was able to bring about this type of ex-

cuse shows that there was a certain conflict within North Korea, at least between those who were for a stronger military and those for a stronger economy.

Now when President Park initiated the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first official mention of such was on August 15, 1970. There was a presidential declaration in which he stated that we will start a dialogue with North Korea beginning with humanitarian issues first. Prior to the declaration, there had been on-going talks, and I think that the president had decided that, in light of the hardliner position against talks, it would be better to start with humanitarian issues first.

OSTERMANN: Professor Kim has a question, but could you just for the record let us know when you served at the KCIA?

D. KIM: Yes, I joined the KCIA when the KCIA was formed in 1961, and I served in it until 1979.

C. KIM: I'm wondering if I could ask you to elaborate on the humanitarian issue that was included in the 1970 declaration. You mentioned, for example, that the focus on divided families was specifically targeted to undermine the hardliner approach. Could you explain how exactly that occurred? Was the focus on divided families an attempt to perhaps win popular support? Was there a need to marshal up popular support for that initiative outside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ere were other issues which had been considered besides the divided families. You mentioned that indeed this was a very strategic issue on the part of Park for political reasons. Were there other issues that had been considered but ultimately fell out of favor?

D. KIM: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e divided family talks came first in our Red Cross attempts. The first one is really because there were the domestic hardliners who did not want to hold any talks at all between the Koreans. This was one way of sidestepping the hardliner position. The second part would be the Nixon Doctrine and the rapproch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 was concerned at the time that perhaps Korea would become isolated as the U.S. became closer to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trying to find a theme for inter-Korean dialogue,

it was important no one could actually refuse the proposed theme. It had to be something that the U.S. could not refuse, that the hardliners within South Korea could not refuse, and that North Korea could not refuse either. So the theme was reunions for the divided families.”

**“South Korea’s
decision**

to go forward
with the offer for
dialogue in 1971
had very much to
do with a reduced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Paris
truce talks.”

China. I think this was actually the precise reason why the inter-Korean dialogue began, because South Korea wanted to show the U.S. that it was able to talk directly with North Korea.

The third factor considered by Park was that, when South Korea suggested that inter-Korean dialogue take place, it was important that North Korea could not refuse. We felt that the theme that would be most suitable was the divided families. As détente was being carried out through the Nixon Doctrine, it was important for Korea to find ways to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felt that once there was a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there would not be any such guarantee for peace. So it was important that Korea, on its own, find a way to have an assurance of security.

So at the time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trying to find a theme for inter-Korean dialogue, it was important no one could actually refuse the proposed theme. It had to be something that the U.S. could not refuse, that the hardliners within South Korea could not refuse, and that North Korea could not refuse either. So the theme was reunions for the divided families. That’s how we decided on that. That’s how I believe that came about. This was not for popularity or popular reasons. That would be a mistaken understanding.

OSTERMANN: Thank you very much. Very helpful. Bill Stueck and Professor Lee both have follow-up questions.

STUECK: First, I think I know the answer to both of these questions, but just for reassurance. Number one, would you say that Park’s moving forward with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was tactical in terms of hi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at is to say, it was not based on any idea that reunification was going to occur soon. And secondly, did he assume that all American troops were likely to withdraw from South Korea, say from within the decade of the 1970s?

LEE: I think I should say that South Korea’s decision to go forward with the offer for dialogue in 1971 had very much to do with a reduced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Paris truce talks.¹ On the basis of what had transpired in the Paris Peace Talks, South Korea began feeling very ill at ease about the security

commit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d to South Korea. Then there was President Nixon’s Guam Doctrine, followed by Dr. Kissinger’s secret visit to Beijing, and followed by President Nixon’s trip to China. Now, many official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became very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some kind of political deal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bout Korea, struck across our shoulders.

So what were we supposed to counter this with? That brought about the need for the South Koreans to think about opening up an independent sector in terms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when the government began thinking about dialogue with North Korea, it was not actually the humanitarian talks through the Red Cross. It was more talks about the political context. And as these needs arose in the minds of peopl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rth Korea was also moving, you know, with some overtures of dialogue as early as November and December 1970. We began hearing about some North Korean elements based in Tokyo trying to approach South Koreans, among them Mr. Jang Giyeong, who used to be deputy prime minister and economic minister in President Park’s government and a former publisher of the *Hankook Ilbo*, one of the leading newspapers in South Korea. In his capacity as an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member, Jang had chances to expose himself to North Koreans at the time of the Winter Olympics. In the winter of 1970, Jang Giyeong came to the KCIA in Seoul and reported to Mr. Lee Hurak that he had been approached by North Koreans in Tokyo, suggesting that he accept Kim Il Sung’s invitation to visit Pyongyang. Jang Giyeong asked Director Lee Hurak what he was supposed to do, and people in Seoul began wondering about whether North Korea was really trying to find a conduit toward South Korea.

In 1971, as Mr. Kim observed, people in South Korea, particularly within the KCIA, began measuring different options for dialogue, but in the context that there had to be as little political risk as possible. So they came up with this idea of humanitarian talks, believing that it was going to be the least politically risky whether it was accepted by the North Koreans or not. And then in June, in the summer of that year, Prince Norodom Sihanouk [of Cambodia] paid a visit to Pyongyang and Kim Il Sung hosted a mass rally to welcome him. At the rally, Kim Il Sung spoke very extensively about the new developments between Washington

“In 1971 people in South Korea, particularly within the KCIA, began measuring different options for dialogue, but in the context that there had to be as little political risk as possible. So they came up with this idea of humanitarian talks, believing that it was going to be the least politically risky.”

and Beijing, in the context of viewing Washington as surrendering to Beijing. And at that time, Kim Il Sung inserted in his two-hour long speech that he was willing to sit down with all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which was the ruling party of South Korea. North Korea had been limited to sitting down with the South Korean regime, but his mentioning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was picked up by us, people in South Korea, whereas in the case of South Korea most of the major overtures in North Korea were reserved for the president to be spoken in certain commemorative speeches like one on August 15.² August 15 was approaching and because of Kim Il Sung’s remark at that rally, South Korea felt the need to preempt because of the opinion that North Koreans might speak of something on the occasion of the August 15 commemoration, so South Korea chose August 12, three days prior to August 15 to ask the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Choe Duseon to come up with the Red Cross proposal.

So when South Korea proposed Red Cross talks, it was proposed as a stepping stone leading to political dialogue with North Korea, which was later followed-up by the North-South Korean Committee meetings. That is what I think I can tell you.

D. KIM: When the U.S. policy in Asia changed from the Truman Doctrine to the Nixon Doctrine, there were certain changes that were perceived by Asia. The first thing that had occurred was when the U.S. had rapprochement with China and the U.S. actually severed its relationship with Taiwan. And then, with the beginning of Nixon Doctrine, there was a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size of 60,000 strong to 40,000. So 20,000 troops had been withdrawn. And also, when it came to the Vietnam War, the termination talks, the talks were held with the Liberation Front of the Viet Cong. At the time, North Korea was attempting to bring about unification by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South Korea, North Korea had planted certain movements, including the “Liberation Front,” “Liberation through Revolution,” and “People’s Revolution” groups. So these groups were trying to subvert South Korea by force.

So what concer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most at the time was that when North Korea had attempted to unify the Peninsula through the “Liberal Revolution War,” or through the “Liberation Front,” the Korean government was

concerned that these infiltrating groups could be recognized as legitimate, groups that could be an object for discussion or talks with the U.S. This was what concerned South Korea the most at the time; that these guerilla groups could be recognized potentially by the U.S. So the biggest concern, I would say, was when the U.S. entered into détente with China, and eventually if the U.S. were to normaliz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hen it was a definite possibility that the U.S. government could also enter into détente with North Korea and perhaps even normalize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at was a concern.

What I have told you, I can be sure of because I actually witnessed this discussion taking place between the staff and the president. This was during the time when I was serving as a desk officer at the KCIA. I had gone to the Blue House to make a report and I saw them, the staff and the president [Park Chung Hee], holding this talk. So from the Korean government’s perspective, a continued preservation of the regime was very important—that there is a direct communication route with North Korea, because by letting the Nixon Doctrine run wildly in Asia, it was actually hurting the chance of permanent peace, as the government saw i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 second Mr. Lee Dongbok’s thoughts that the discussion held between the Red Cross was really for political and military resolutions to the issues that we were fac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a way for u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ha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STERMANN: Bill Stueck again and then Dr. Hong and Ryoo Kihljae, three questions all immediately on the issues that we just discussed.

STUECK: I am impressed by the level of mistrust in Seoul of the United States. My sense from my research on the American side is that in fact there was serious consideration given in the United States to a withdrawal of all American troops in the early 1970s, looking forward, not immediately, but gradually, down to a point where there were only American Air Forces in Korea, which of course included atomic weapons and enough American troops to guard the bases. Were you aware of that as a possibility and if so how did you perceive it?

“Beginning in the 1960s, President Park had his slogan ‘Economy First, Unification Second,’ so the economy came first in his regime. But once the Nixon Doctrine was announced, it was necessary that South Korea change its slogan and its approach.”

LEE: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n the context of a variety of contingency planning, was conducting considerations of those troop withdrawal possibilities, that was something which was known to many people in the South. However, during that timefr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very outspoken and opposed to the reduction of 20,000 troops out of the 60,000 troops. I don’t think they were going as far as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to have seen the bulk of U.S. troops withdrawn from South Korea. But that leads to the crisis in the U.S.-Korean relationship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 at which time President Carter was committed to the troop withdrawal which led to such a critical ph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s early as the early 1970s, it was more in the context of what Mr. Kim observed, that in the Peace Talks, the Viet Cong was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s a legitimate counterpart in the negotiations. Although I had not considered this, I agree with Mr. Kim’s suggestion that insid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 were concerns that such underground ghost parties, phantom parties, phantom organizations like the “Unification Revolutionary Party” or other underground groups, might be, in due course,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s potential counterparts in negotiations. So Mr. Kim is now suggesting that insid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 was the kind of need perceived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by way of a possible opening-up a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HONG: Mr. Kim,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further questions. If I understand you correctly, you were saying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 dialogue had taken place because: one, South Korea was trying to preven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rom dictating the destiny of South Korea by their own choices or choosing, and second, this was one way for South Korea to preempt the U.S. from having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Is that correct?

D. KIM: I don’t believe prevention was the purpose because, beginning in the 1960s, we had a five-year economic plan that went into effect, and the economic plans into the 1970s were very successful. So in the 1970s I would say that South Korea finally had reached a point where South Korea was on par with North Korea as far as economic standing was concerned. And in order for South Korea

to actually achieve that status and come to that stage, it was vital that there was security and military protection coming from the U.S., so it was a precondition that there should be U.S. security provided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 economically prosperous. If security was somehow shaky, then this would mean that South Korea had to find a way to survive on its own.

If you recall, beginning in the 1960s, President Park had his slogan “Economy First, Unification Second,” so the economy came first in his regime. But once the Nixon Doctrine was announced, it was necessary that South Korea change its slogan and its approach. So the new approach, I would say in a sum, was that there would be first a dialogue and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n other things to come after that. So what the Nixon Doctrine brought to and required of Korea and Asia was that there had to be independence and self-survival, basically meaning that the U.S. was no longer willing to be the police of the world and that each country was on its own. So for Korea, we had to find a way to be self-dependent.

So as to your question Professor Hong, it’s not that South Korea was trying to prevent the U.S. from having contact with North Korea, this was not something we were trying to do, although I admit it would have been good if that had occurred, but we knew that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either, so what we were trying to do was to have a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where we could talk directly with one another. I hope that was sufficient.

RYOO: I would like Mr. Kim and Mr. Lee to confirm certain facts that actually seem to be a bit contradictory in their testimonies. Who really initiated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From Mr. Kim’s testimony, I understand that it was South Korea that initiated the dialogue and that this was part of a grand strategy, that the South Koreans had that first there should be economy and then there should be a unification and that strategy had somehow changed to a certain degree and that this was requiring an initiation of dialogue by South Korea. From Mr. Lee’s testimony, however, I hear that the initiation may have been coming from the other side, in that South Korea was more of a reactive force rather than a proactive force and that the talks were initiated from certain contacts that were made in Tokyo during the winter of 1970. And so what really happened? Who was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dialogue?



PAK SEONGGEHOL AND LEE HURAK



KIM DALSOOL

LEE: I will be very short. The initiatives at that time were from both sides for different reasons. North Korea had proactive reasons whereas South Korea had reactive reasons, so in a larger context the initiatives came from both sides almost at the same time. When we reduce it to a smaller context, when we confine it to the initiation of Red Cross talks,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South Korea initiated it when Choe Duseon made the proposal, to which North Korea reacted over the radio several days later afterwards. However, when North Korea responded, it was not in the form of either accepting or rejecting this South Korean offer. North Korea produced its own offer and said that it was sending an emissary to Panmunjeom, at which time South Korea decided to send an emissary likewise to Panmunjeom and found that North Korea was not necessarily directly responding to Choe Duseon's proposal. They produced their own proposal and they began meeting in Panmunjeom based on this different proposal. That is how the preliminary rounds of the Red Cross talks began taking place.

OSTERMANN: Very good. Jim Hershberg, an immediate follow-up on that?

HERSHBERG: Yes, just one very small clarification. If I understand you correctly, you were saying that the process was a purely Korean-Korean dynamic with no important external influence from third parties or mediators or anything of the like.

LEE: With no mediation at all. Well, it had international sort of coding in the context that both Koreas to a large extent were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urroundings. So that was the kind of international influence,

but I don't think there was any outside parties either intervening or offering any good offices.

HERSHBERG: Purely context.

LEE: Purely inter-Korean context, yes.

OSTERMANN: Thank you very much. Dr. Kim,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add on this particular issue?

D. KIM: Actually, for me I don't think it's really all that important as to who initiated the talks; was it the South first or was it the North first? But what I can say is that both South and North felt a need that there had to be talks between the two. This was necessitated by what had happened outside of the Koreas. This was because the U.S. and China were entering into a rapprochement. It was felt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also somehow come to terms with one another.

OSTERMANN: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is was a very exciting and productive session. In the next session we will focus on the U.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I think our American colleagues will come into greater focus in that session. Obviously we will also hear later from Mr. Mitov on his view from Pyongyang and from Sofia. With that though let me thank all of you for a very good first start into this meeting, thanking in particular Mr. Kim and Dr. Lee for their contributions and patience with the probing by the scholars, but this is exactly what we like to do, give an opportunity to have a follow-up question and really have time to respond to some of these more subtle issues.

"I don't think it's really

all that important as to who initiated the talks; was it the South first or was it the North first?

But what I can say is that both South and North felt a need that there had to be talks between the two."



Panel II

Inter-Korean Dialogue and U.S.-ROK Relations

Chair: *William Stueck*

Provocateurs: *Gregg Brazinsky, Woo Seong-ji*

BILL STUECK: That first session was wonderful. Our provocateurs for this panel are Gregg Brazinsky and Woo Seong-ji. Let me encourage both of you to respond to the first session in outlining your questions.

BRAZINSKY: I want to pick up with something that was mentioned during the last session. Mr. Kim, I believe, had mentioned that he had heard a Blue House discussion between Park Chung Hee and some of his aides in which there had been expressed a concern that the United States was interested in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DPRK on its own. I wonder if you could talk in a little bit more detail about this discussion and the concerns that existed at the time. When exactly did this discussion take place? And what exactly were you afraid would be the course of American policy?

STUECK: If you want to respond to that directly, we'd be happy to have that.

D. KIM: As to the exact date when I was involved in this discussion, I do not recall. However, what I can tell you is that at the time the Director of the KCIA had been Kim Gyewon and I was serving as the Desk Officer for Asia. Director Lee Hurak came in after Kim Gyewon and the change took place around December 1970, so I think the meeting may have taken place around November 1970. Now, I had gone to the Blue House on this particular day because I had to give a briefing on

“President Park had asked the undersecretary repeatedly

abou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what would happen to South Korea after the normalization, because he wanted to know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U.S. would sever it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China.”

Jochongryeon, which is the alliance of North Koreans in Japan, and I was waiting to give my briefing but the president and his aides were talking and talking and the discussion was taking a long time. So I ended up actually listening in on the discussion. At the time, the undersecretar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Yun Seokheon, was giving a briefing to the president.

After the briefing, President Park had asked the undersecretary repeatedly abou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what would happen to South Korea after the normalization, because he wanted to know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U.S. would sever it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China. At the time I recall Mr. Yun had to explain that the situation for Taiwan and that of South Korea were different. I was supposed to give my briefing but my briefing kept on getting delayed because the discussion was taking longer and longer. I would say the discussion had actually gone on for hours and the president was really concerned about the détente taking plac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he was seriously considering the impact and possible consequences of such détente.

BRAZINSKY: I’m curious if I can ask the former American diplomats in the audience if they could talk about the context of American foreign policies surrounding this. What I find so interesting here is that he’s talking about this early period, a meeting during this early period in 1970-1971. Kissinger I believe first makes his secret trip to China in the fall of 1971 and then Nixon visits Shanghai in February of 1972. But it’s interesting that there’s this intense fear in South Korea about U.S.-DPRK normalization before the U.S. hadn’t really done anything official with China. So I’m curious if any of the participants on the American side might weigh in here a little bit in interactions with South Koreans. Were there any concerns expressed? About when did South Koreans start to express concerns or anxieties about the changing U.S. relationship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DONOHUE: I think that as our Korean interlocutors mentioned originally, the basic things driving concerns as we saw them on the Korean side, were the Nixon Doctrine and China. What did it mean for Korea? From our perspective, the whole period was one of reassurance, although in that period we withdrew one

division. So I think that I would say from our perspective at that point in time there was no concrete basis for a concern that we were going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at was from our perspective, it is something that they would have been concerned about.

Now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that was peripheral to that, which was the unification and the UN, and also internationally, where there was increasing difficulty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ourselves in maintaining the isolation of North Korea. Other countries wanted to move there. We for our part, and I say “we,” the U.S. government entities, did feel that the South should be more flexible. Both of us wanted to get out of the UN debate, so that aspect had in it this question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orth, but it was far more tactical rather than a substantive.

HERSHBERG: Just for the American participants, I’d be curious if you might comment even briefly on the question on the locus of generating U.S. policy. This is of course a very special period in U.S. foreign policy when we have Nixon and Kissinger operating in some cases behind the State Department’s back. Is the general feeling that policy is really being generated out of the embassy in Seoul, or that the White House is operating behind its back to a substantial measure when it comes to policy towards Seoul?

O’DONOHUE: In that context, the embassy played a larger role than most embassies. However, there were two aspects. One of course, the China aspect, in which at best we were only occasionally told what was going on. [Ambassador] Habib, more than most, would have been aware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Kissinger. And secondly, you had the whole military issue emanating from the Nixon Doctrine; that change was being driven, obviously, in Washington. Our job was not only to convey that, but to convey back the problems, weighing in on the kinds of things that would be considered. But very obviously, this was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setting the parameters.

PICARD: Let me just com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osition of a very junior officer in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in Washington during this period. The

**“ The one thing
that seems
to be constant**

was the very strong
U.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at simply was not
questioned. The
question really on our
minds was how do we
rea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se changes
that were taking
place could be helpful
and not harmful
to them.”

one thing that seems to be constant was the very strong U.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at simply was not questioned. The question really on our minds was how do we rea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se changes that were taking place could be helpful and not harmful to them and how this continuing strong relationship could best take its place in what was clearly an international scene that was shifting. So there was certainly no interest—in fact there was a clear policy that there would not be—any U.S.-North Korean direct talks, certainly none without South Korean approval and participation.

STUECK: Can we have our second provocateur? Dr. Woo.

WOO: My understanding is that,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dialogues were taking place, unification was also on the agenda. If there were indeed talks regarding unification, were there certain methods or formulas that were suggested? And if so, by whom were they suggested? And if there were any discussions that had taken place, at what depth was the topic discussed? If there had been progress in these discussions, what was the progress?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know how much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unification talks the U.S. had. As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progressed, was the speed of the progress too fast for the U.S., or perhaps was there a point when the U.S. felt that there was a loss of control? As to South Korea's initiative, when it came to talks with North Korea, there were some talks that perhaps South Korea was not as proactive and perhaps there was some prodding, maybe some encouragement from the U.S. before South Korea became more active. So if there was any type of persuading or encouragement provided by the U.S., what was it? I also have a question about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en we look at the economies of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early 1970s, we can see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was on the rise and for North Korea, perhaps you could say it was on the decline. So as South Korea was experiencing a boom in its economy,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South Korean officials felt somewhat more confident in approaching North Korea and perhaps the reverse could be said of North Koreans. But what really took place? Was it a factor that helped us

when we approached North Korea, when the economy of South Korea was doing so much better?

The following question is directed to Mr. Mitov. Mr. Mitov, if I may ask since you were in North Korea during that period when the economy of North Korea was facing more difficulties and was perhaps even in decline, did you hear from the North Korean officials or did you sense from their activities that perhaps they were a little bit nervous, maybe even quite concerned about what wa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as far as their economy was concerned?

And the last question goes to the diplomats and officials who had worked in the U.S. Embassy. How did you feel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far as the economy was concerned? Since the economies were developing at a different pace, was this a factor that was important enough for you to weigh or be thinking about?

LEE: Regarding whether at the time of the initial rounds of the North-South dialogue if there were serious discussions about the unification formula or unification per se, my reply is that there were no such serious discussions on unification per se, nor a unification formula because in the early 1970s, neither side had comprehensive unification policies. North Korea had kept on talking about a political negotiation conference in a variety of different expressions, but it was in 1980 at the time of the Sixth Party Congress where North Korea finally came up with the scheme for configuring a Korean Republic, which thereafter become North Korea's official unification formula. And South Korea responded to that unification formula at the time of the early years of President Chun Doo-hwan's presidency, in February 1982. I was involved in the drafting of that unification formula personally, the unification formula on democratic unification through national reconciliation, something like that, so that was in 1982.

So previous to these two developments, neither of the two Koreas had come up with any comprehensive unification policies, so there had been no room for the two sides to talk about unification per se. Instead, the North Koreans kept on being aggressive and proactive, talking about certain 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political negotiations and things like that, or certain conditions that North Korea imposed on South Korea allegedly for the purpose of creating condi-



PAK SEONGCHEOL AND PARK CHUNG HEE

"I vividly remember that in his conversation with Director Lee Hurak

and other South Korean members of the North-South Korean Committee in early November 1972, Kim Il Sung spoke very proudly of North Korea's economic progress, to the point that he was talking about his refusal to accept a proposal from Nikita Khrushchev for North Korea to join COMECON."

tions favorable for unification. So in the early 1970s, this dialogue did not spend much time on unification per se.

Secondly,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re was influence from the United States, whereas Sout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I think as I understood it,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United States was prodding South Korea to become more active in pursuing dialogue. I don't think that was the case. As Ambassador O'Donohue observed,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was more interested in avoiding diplomatic confrontations in the United Nations over the Korean question, things like that. But the United States was more busily engaged in the Chinese theater so much so that I don't think Washington was very interested in seeing the two Koreas talking between themselves. So it was very much an inter-Korean initiative rather than initiative having come from outside forces when the dialogue began in the early 1970s.

Third, this i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that you raised regarding the comparison of the national strengths of the two Koreas at the time when this dialogue began unfolding in the early 1970s. At that time, North Korea seriously believed that it was ahead of South Korea in terms of economic advancement. But North Korea had to realize the fact that South Korea's economy was actually ahead of North Korea's during the course of dialogue, as North Koreans came to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delegations went to North Korea. I vividly remember that in his conversation with Director Lee Hurak and other South Korean members of the North-South Korean Committee in early November 1972, Kim Il Sung spoke very proudly of North Korea's economic progress, to the point that he was talking about his refusal to accept a proposal from Nikita Khrushchev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953-1964] for North Korea to join COMECON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And Kim Il Sung told us that when Khrushchev made the proposal, he declined that proposal because there was such a discrepanc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capability and he was likening North Korea in terms of kindergarten as against the Soviet Union in a graduate university. So if he joined COMECON, then the discrepancy would expand and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COMECON would leave North Korea with a lot of empty holes, where the Russians would be digging all the natural resources in exchange for finished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WARD THOMPSON

products that the Soviet Union would be providing North Korea. So he declined to Khrushchev, by saying that we are going to remain kindergarten kids and you may go and you may advance as graduate students. That is the way we will feel safe. That was what Kim Il Sung told us. And in exchange, Lee Hurak was talking about Ulsan Industrial Complex and Pohang Steel Mill, and Kim Il Sung was unable to understand what Lee Hurak was telling him, so he was asking Kim Il, who was alongside, what was this Mr. Lee saying. So Kim Il was providing some explanations so much so that in the course of this exchange of visits, North Korean visitors to South Korea were literally astounded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velopment, so much so that when they were taken on an expressway and saw the traffic, they complained that South Koreans had amassed all the vehicles in order to impress them. So we told them that we did not have much trouble assembling all the cars, but we did have difficulty amassing all the buildings in Seoul. That was the joke that we cracked. And because of this observation of economic differences, that was one of the reasons why North Koreans began feeling negative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dialogue.

STUECK: Do you have a date on cracking that joke? I've heard that joke before.

LEE: We made that joke to the extent that it was picked up by the press and put into print by certain media.

O'DONOHUE: As Mr. Lee pointed out, the initiative was solely a South Korean one. In the period prior to that, the United States officials had an interest one in more flexibility because, as he notes, the UN question was becoming so difficult. Secondly, there was, you could say, a generalized feeling that everyone else is try-

**“North Korean
visitors to
South Korea**

were literally astounded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velopment, so much so that when they were taken on an expressway and saw the traffic, they complained that South Koreans had amassed all the vehicles in order to impress them. So we told them that we did not have much trouble assembling all the cars, but we did have difficulty amassing all the buildings in Seoul.”

ing détente, so shouldn't the South Koreans look at it? This was very secondary—the initiative on the part of the South was taken by President Park. Lee Hurak was his agent. Once the initial step was taken, they then were very careful to brief us. Lee Hurak would meet regularly, certainly within the context of any of the formal meetings, and brief the ambassador and others on the Red Cross talks. So we had a conscious South Korean effort to keep the Americans in step. From our perspective this fit everything else going on, and so we were very supportive. They really, particularly in that context, didn't need our advice. They were doing nothing that caused any problems in our relationship. The general American perspective was détente should break out everywhere.

In terms of unification we never saw that unification was a near-term possibility. I think the South Korean side was always very realistic and never misled us that they didn't see unification on the table. I think the Americans tended to have a more optimistic view with no basis really in terms of out of this might come some long-term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context, but not unification.

OSTERMANN: Just a quick follow-up. I still think there's a disconnect here in the room or in the narrative between the concerns by the president that Mr. Kim talked about and your perceptions at the time. I also want to push further on the issue that Professor Woo raised in terms of American concerns about losing control of the process at some point. If you look at the European dimension of this, there were, of course, in due course a number of concerns on the part of Kissinger about Willy Brandt and Ostpolitik and ulterior. So your sense was that this was not at all the case, certainly not in this early phase, with regard to Korea?

O'DONOHUE: I'm not completely sure about a disconnect between President Park, or South Korean concerns about normalization, and that if somebody looked at all of this while we never saw it as a major issue at the time, you could see that a pruden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identify this, however you want to say it, threat. So I think there was not any particular disconnect.

OSTERMANN: You were aware of those concerns?

O'DONOHUE: Not the specific ones he mentioned, bu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esident Park had very much on his mind the American relationship which was central in security terms, and that the situation in East Asia was in a dynamic period of change, but that was driven by the Nixon Doctrine, China, and the fact that we did withdraw a division. This was an era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see that over time the Americans, at least their ground presence, might disappear. And indeed, a couple of years later we actually recommended something close to that.

SCHAEFER: Another question for the American participants just to spin this a bit further. The DPRK considered the American presence in South Korea the main obstacle to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on Northern terms. If there was any way to get the Americans out of the South, one should pursue that by whatever means. Now, there was a huge elation amo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fter the Kissinger visit to Beijing, the first secret visit. Was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aware that North Korea and China were very close? Everything Kissinger, or any other American official, said about Korea was conveyed by the Chinese to the North Koreans, perhaps with a certain interpretation, a certain spin, which led the North Koreans particularly in the second half of 1971 to really believe that the U.S. at some point would almost completely withdraw from Korea. And were you aware that actually Kissinger made some statements to Zhou Enlai in this regard which really indicated that the West sooner or later would completely withdraw from Korea? Were you aware that the North Koreans had the impression from the Chinese that the U.S. withdrawal from Korea might be impending?

O'DONOHUE: The answer to that is that Kissinger always saw the troop presence as being something in the China context. I don't think he looked at it in terms of the Korean context particularly. But I think that in that period you did have a certain sense that the U.S. ground presence was going to be there for a finite period, and that wasn't tremendously controversial. One division had gone, another division might be going in a few years. I don't know of any American who ever conceived of a complete U.S. military withdrawal, and I can't imagine that because Korea was so important in a variety of ways, not the least Japan. But the

“I think the South Korean side

was always very realistic and never misled us that they didn't see unification on the table. I think the Americans tended to have a more optimistic view with no basis really in terms of out of this might come some long-term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context, but not unification.”

troop presence was an element in Kissinger's dialogues with the Chinese, I would say to that level a few of us know. I only knew it because of [Ambassador] Habib.

LEE: Well, let me tell you this observation: until the Guam Doctrine an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North Korea's traditional commitment to the U.S. troop withdrawal was to keep the U.S. out of South Korea, I mean a hard-line approach, attacking the U.S. in a harsh manner. But in the aftermath of the rapprochement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North Korea made a quick change by trying to pat the U.S. out of South Korea. North Korea came up with the idea of inter-Korean dialogue as a means to soothe Washington to the effect that the U.S. conceded favorably the idea of troop withdrawal. So for some time, North Korea was observed resorting to that approach, but it did not take long for North Korea to change again back to the harsher stance.

I'd like to add that it was more the peace process in Paris over the Vietnam War than the Guam Doctrine that made people in South Korea very restive and concerned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U.S. security commitment. Because it was in this peace process in Paris that, as Mr. Kim pointed out earlier, the Viet Cong were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s a legitimate counterpart in a dialogue. As Mr. Kim learned from the conversation he overheard at the Blue House, they were wonder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underground organizations like “Unification Revolutionary Party” being picked up by the United States as a legitimate counterpart for negotiation. So that was the kind of concern which was building up in the minds of many South Koreans at the time which led them to think about opening up a dialogue sort of things between the two Koreas.

PICARD: I do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American participants have omitted is the fact that this was a time when the Vietnam situation was one that would have caused our allies in the region a good deal of concern. Things clearly were not going well and talks were going on.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great stretch, though, beyond that to have the idea that the Americans would ever think of any of the groups in South Korea as appropriate parties to talk with. But certainly the atmosphere in general of U.S. weakness, the Vietnam situation had on everyone's mind would have been a reasonable factor for Koreans to have in mind.

THOMPSON: Yes, I certainly agree. I think that Dr. Woo asked about how we reviewed the economic differences, and I think from our perspective South Korea was already a tiger moving forward. From what we knew of the Korean populace, they were interested in securing what they had achieved economically and building. And you had these big signs about the export campaign and all that, rather than a lot of concern about security. The security was I think of great concern because the Koreans did not want to lose the economic gains and it would have been so nice to keep the security situation static so that the Koreans could work on their economic progress.

Dr. Lee mentioned Ulsan. I had the great fortune of going to Ulsan with our visiting Ambassador to Japan, Mr. [Robert] Ingersoll, and my connection was that the vice president of the shipyard down there was Danish with his crew and my wife and I spoke Danish, so Mr. Chung Ju-yung came to arrange the visit and we had a very nice visit down there. It was very impressive what was happening with using the steel from Pohang and building an empire which we still have today of course. So in short, I think that's how we regarded it, that the security concerns, as I think Dr. Lee said, were secondary to the economic concerns, and the idea that there would be so much discontent politically or security-wise didn't really strike us as central because it was all dependent on the economic situation.

LEE: That said, however at the time when we began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really at its peak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to decline only thereafter. At the outset North Korea appeared to really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way ahead of us, but in the course of the dialogue, they realized that that situation was already upside down, and that's one thing. And for another, although an official from the United States never came to South Korea with any influence with regard to inter-Korean dialogue, by the early 1970s there already were people like Selig Harrison [a *Washington Post* reporter] and Jerome Cohen [an American academic] who began performing the role of spokespersons for North Korea and coming to Washington with suggestions that the United States pressure South Korea to be more responsive to North Korea's peace offensives and things like that.

So in due course, these people began raising their voices to the extent that, by the time when President Carter was inaugurated president, Jerome Cohen was figuring in as an information person to an extent, right or wrong, he was the person behind Carter's withdrawal platform. So outside of the government, there were quite a few people who were literally exercising some measure of influence in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D. KIM: Earlier Professor Woo had raised questions regarding economic disparity,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 I would like to address that. There were certain seismic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inter-Korea dialogue mechanism. This was due to the following. We had initially held the talks in Panmunjeom and later we had decided to hold talks in the different cities of Seoul and Pyongyang, and that's when the shift started. The suggestion that we should hold talks in Seoul and Pyongyang came from us. This was the order that came down from President Park directly. The first preliminary meeting for the Red Cross was held on September 20 at Panmunjeom and the second preliminary meeting had occurred on September 29, also at Panmunjeom.

At the second preliminary meeting at Panmunjeom on September 29, we had suggested that we should hold talks on a rotational basi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here was something called Joint Break that was suggested by North Korea at Panmunjeom during this second preliminary meeting. So during this Joint Break we actually brought our goods from the respective sides, so for South Korea we brought radios and other consumer electronics that we had produced and from North Korea they brought silk and blankets and some rice wines. So when this Joint Break activity was taking place, President Park actually drove to Panmunjeom right outside of where the meetings were being held. I went to President Park with the gifts from North Korea and I had explained to him that these were the activities that were taking place and this is how much progress we were making. When I presented the president with the gifts, he actually thoroughly inspected the gifts. For example, as to the silk blanket, the president actually tore the blanket to see what's inside and also put light towards part of it and also smelled the blanket. And as to the wines, he opened the wines and tasted some of them for himself.

At the time the president had quite a few people with him and his entourage had included Chung Ju-yung of Hyundai Construction, and also the president of Sambu Construction, and the mayor of Seoul, and he had asked around to see how they felt and how these North Korean items compared with South Korean items. After inspecting the items, the group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 items produced in North Korea were inferior to those of South Korea, so the Republic of Korea was making better products we concluded. So President Park was very satisfied with the conclusion and he had mandated that it would be our priority to make sure that the future meetings would be held on a rotational basi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d he had mentioned at the time that water flows from higher ground to lower ground and in the process of flowing there might be some disturbance of the water, but the fact that it flows from high to low does not change.

So at the time there was the president of Hyundai Construction, and this was the time period when we did not have highways between Panmunjeom and Seoul, there were only country roads. So we decided that we would build a highway that runs all the way from Panmunjeom right into the heart of Seoul. We built a road first and as we had built a road between Panmunjeom and Seoul, North Korea also decided that they would build the same between Panmunjeom and Pyongyang. The construction took one year. And so the initial stage of the talks between the Red Cross took a little longer because of the road, but that's the preliminary meeting had resulted in the rotational visits.

So as we did rotational visi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 saw one another in economic terms, the focus shifted from military to economics. What we saw was that there were highways being built and there were high-rises being built also and both the Daedong River and Han River were being cleaned out and being reconditioned. So we were trying to show off to one another and this was an economic competition in a sense, and I think that's where the disparities started becoming much clearer. I think that's how we came to this point that the economic disparity started back then and now it's much clearer.

Shin: This question will be directed to U.S. diplomats. In 1971, North Korea tried to deliver a message to the U.S. through Romania. Did you know that this had taken place? And a follow-up question on that would be, what message was it and

[...] As we saw one another in economic terms, the focus shifted from military to economics. [...] we were trying to show off to one another and this was an economic competition in a sense, and I think that's where the disparities started becoming much clearer. [...]"

“In the 1970s, North Korea was trying to employ such countries as Romania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convey the North Korean message to Washington, saying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running in favor of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favorably the idea of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

what was the U.S.'s reaction if there was one? In 1972, perhaps in April or May,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went to Seoul and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South-North Korean Joint Communiqué and then at the time KCIA Director Lee Hurak responded that our situation in South Korea was fairly complicated, and also our meetings were being held in the dark and the U.S. was not in the know so we would prefer that we do not let the U.S. know. So the questions are really directed at Mr. Lee and Mr. Kim from Korea. Now at some point the Korean government talks with the U.S. CIA and in particular with Mr. [John] Richardson, who was the director in Korea [1971-1973], at the time, and there seems to have been a certain close working relationship that had developed between the two. So what were your impressions, Mr. Lee and Mr. Kim, as far as the North Korean agents are concerned? Did they really think that South Korea was not consulting the U.S. or how did they feel about the relationship that South Korea had with the U.S. as far as the Inter-Korean dialogue was concerned?

LEE: I will respond to that regarding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I was involved in that portion of the dialogue of the time, and I don't know where you obtained the information from the meeting between Lee Hurak and Pak Seongcheol. Lee Hurak said exactly that. It was May 29 through June 3 when Pak Seongcheol visited Seoul secretly on behalf of [Kim Il Sung's brother] Kim Yeongju who could not make it to Seoul in spite of the invitation from the Southern side, because Kim Il Sung at that time was already beginning to give a hard time to Kim Yeongju in favor of Kim Jong Il. In the meeting which took place in Seoul, Lee Hurak kept saying that South Korea was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Obviousl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ous charge that South Korea was a crony of the United States, Lee Hurak kept telling the North Koreans that Park Chung He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independent of the United States. So beyond that, it was merely a kind of rhetoric. And so I don't think he told Pak Seongcheol that he was keeping this dialogue a secret from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that that was the way he said that, although he kept on saying that we are independent, we do not rely upon the United States, things like that.

In the 1970s, North Korea was trying to employ such countries as Romania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convey the North Korean message to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Washington, saying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running in favor of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sider favorably the idea of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things like that. Thes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taken advantage of as the conduits of such messages which North Korea wanted to continue to convey to Washington, DC.

KIM: I was involved mostly with inter-Korean dialogue and so I do not really know too much about U.S.-Korean relations at the time.

O'DONOHUE: Until I read the telegrams, I had not noticed the Romanian effort, but I think as Mr. Lee summed it up, over time in a variety of ways North Korea has tried seriously or less seriously to establish a direct link to the United States to the exclusion of South Korea. And in reading that, it looked to me like that was just another one of the myriad approaches that were made.

HONG: As far as the U.S. government was concerned, after having reviewed the documents, I can tell that the U.S. government also wanted a channel, a dialogue to be established with North Korea. I think this started sometime towards the end of the 1960s. This happened on August 27, 1973, in China. North Korean diplomats visited the U.S. Liaison Office in China. Contact between the diplomats is very important and a sensitive topic, so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White House had approved of the contact as well as the Blue House. North Korea had expended quite a bit of effort in establishing communication with the U.S. in various ways, so my question would be, what did you think in the U.S. of the reason, impetus or motivation, as to why North Korea was trying to so hard to establish a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the U.S.? And what did the U.S. government think they were trying to communicate?

O'DONOHUE: First of all, our view had been that North Korea, as part of its basic policy, was constantly working to establish a direct channel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South Koreans, and that was a constant theme, up until even now, that we saw as their major effort. In that period for a lot of reasons, we were changing our UN policies, and we were trying to bring them in for a variety of tactical reasons that you would want to talk to them. But in essence, none of these



SIGNING CEREMONY FOR JULY 4 DECLARATION

really ever amounted to much. I think there was a later period when there were more serious efforts that again didn't amount to anything, but were more serious than the one you described. But essentially, our view was that we would not be caught at a negotiating table without the South in that period. And on the other hand as part of this whole dynamic in which you had the UN, and the South and the North were talking, these things meant there was probably a more relaxed view, and it wasn't a period in which we would be aggressively turning off North Korean contacts and policy. We just had no interest, our policy was supportive of the South and I think over the years President Park probably was mildly surprised at how resolute we were in support.

LEE: A very short comment. I think North Korea made no bones about the fact that, when they talked about the direct dialogu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the objective was two-fold, a peace treaty between the two sides in addition to troop withdrawal. And on these two themes, I had been of the underst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had continued to hold fast to the position that the issue of a peace treaty was something between the two Koreans as against troop withdrawal is someth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 because of these two declared positions, there was no room for direct conta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DONOHUE: We also believed that it was part of the constant North Korean effort to marginalize the South. In other words, deal with the Americans, they really run the country; the South doesn't count. So we saw that as another element in what they were proposing.

PERSON: You mentioned that the U.S. would not be caught at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South Korea.

O'DONOHUE: At that time, yes.

PERSON: Was this a lesson learned from the direct talks held over the return of the crew of the U.S.S. Pueblo?

O'DONOHUE: No. Pueblo negotiations were done up in Panmunjeom as a military exercise to get the troops back. That didn't have that connotation. That was a period of intense strain because of the Blue House incident, in which President Park, as he often did, took a situation and used it to press for greater U.S. support. At the time of the Pueblo, we had immense concerns. At the time of the Blue House, our first reaction, unfortunately, had been to urge no response. Well, that the South would accept, but we forgot to express our concerns about President Park's survival. So coming from that, he had the American side on the defensive. Out of that, strategically, it was a watershed in that the United States, after that process, adopted a policy of modernization of the ROK's forces. Before that you had essentially a World War II static force. Because of that, and the North Korean tensions over the previous years, we really moved to a much more active program in support of strengthening this out.

LEE: By the time of the Pueblo incident, South Korea was very seriously pushing to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 but Washington was trying to restrain South Korea. So that, I think, was bearing upon the way Washington was reacting to Pueblo incident. So much so that Washington kept the Pueblo incident as an issue within the context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was the way I recall that.

O'DONOHUE: The only thing I would slightly differ on is that the South Korean side took a very strong stance, but first of all, without our agreement, we didn't think they would take any military action, and secondly we thought to a degree that it was tactical to keep the pressure on us to respond to their needs.

THOMPSON: I just wanted to make a comment that in general there's a distinction between a technical contact and a policy contact, and there were occasions, I was involved in one of them, where if there happened to be a North Korean overture we would be interested in gaining some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side, but that didn't mean that we were inaugurating any kind of relationship. So quite often I would say that if there were one of these many approaches that Ambassador



HONG SEUKRYULE

O'Donohue mentioned, that yes, we literally did not turn our backs in every case, but there was no policy directive ther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that distinction.

I did have one instance at a subsequent post where in a public observance I did have a conversation with a North Korean about non-substantive issues and Washington was interested in my pursuing that just for intelligence purposes, but not to suggest to the other side that we were having a dialogue, so I'm sure that took place elsewhere.

RYOO: In light of the Nixon Doctrine, in the 1970s perhaps there was a shift in U.S. policy, but it's not really clear to us whether there was an intentional shift. But I think beginning towards the end of the 1960s, there was somewhat of a shift in the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far as the U.S.-North Korean relationship was concerned, and I think that may have been somehow reflected by the Nixon Doctrine and the follow-up events that had occurred. The Blue House raid and also the Pueblo incident of 1968 showed there were strategic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 Also, we can see from the documents, which we have in front of us, that the U.S. had reques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more flexible in its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We have the transcripts from the subcommittee at which time [Stuart] Symington was the Chair. This was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This is a transcript from September 13, 1970, and at the Subcommittee Meeting, the transcript shows that the U.S. had suggested that South Korea have talks with North Korea. And also in this Subcommittee hearing we could see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in the minds of the U.S., that it was actually South Korea rather than North Korea that would create some sort of a military conflict on the peninsula.

Now when it come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n dialogue that took place, there had been some talks and questions as to who initiated that dialogue, and in a bigger picture perhaps it's not as important who initiated such,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shed some light on the flow of events that had occurred and that led up to the actual dialogue taking place. The U.S. perhaps was not actively involved in the talks being held; however, I think the U.S. had provided a certain framework in which the talk had to be held and this would include the rapproch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he Nixon Doctrine. So there was a role that was definitely played by the U.S. in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shed more lights on.

So my question would be to the U.S. diplomats who had worked in the field. Not just what was shown on the surface as the result of certain talks that were held within, but I really want to hear about what took place internally, what went on and who were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what were the discussions about and what were your impressions of things to come about as you made these decisions?

O'DONOHUE: Well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period, say 1967 through 1969, that was a period in which the military tensions were at their highest at any poin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was not a period when the United States looked at détente. You had had numerous incidents across the DMZ. You had the Pueblo, the attack on President Park. In 1969 you had the U.S. reconnaissance plane EC-121 shot down. From 1968, the United States embarked on a major modernization program of the ROK armed forces, so this is a context we're talking about. As I had mentioned earlier, throughout this period, partially because of the UN and the tremendous diplomatic drain that was going on each year for what was eventually going to be a losing cause of isolating the North, and this general sense of détente, among officials there was a general sense that the South should participate in it. In the concrete sense, this showed up in discussions and planning for the UN sessions. However, in looking at it, and our Korean friends can talk it much more authoritatively, our view was that President Park saw East Asia as in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that posed real threats to South Korea. Because of the Nixon Doctrine, China, and South Vietnam, from our perception, President Park responded essentially to be sure he had control of this issue. It was hardly us telling him; it was rather he himself, the case throughout our relationship with him being sure that he was not boxed in or simply became a pawn in the process.

"In our various discussions in Seoul with Lee Hurak,

with President Park and others, it was really them telling us what they were doing. Nothing they were doing caused us any problems. From our point of view, it was very easy to be supportive."

“This was a Korean show from start to finish and they kept us informed as the cable traffic shows. We had very little in trying to guide it,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was we did not look at it in terms of Korean unification. What we thought was going on here was at best some humanitarian alleviation of the situation by the families and so forth.”

So as far as that’s concerned our role, as far as the South was concerned, was in a secondary sense very important; the United States had to support them and that was in our terms a given. In our various discussions in Seoul with Lee Hurak, with President Park and others, it was really them telling us what they were doing. Nothing they were doing caused us any problems. From our point of view, it was very easy to be supportive. In terms of possible outcomes, the South side was always very realistic with us about what they were doing and what was likely to be accomplished, i.e., except for a few of the humanitarian things, not much. We probably were slightly more optimistic with no basis in the sense that we saw out of it not unification, but maybe there would be some of these long-term links that over time would be useful. But in terms of sitting down and planning tactics, the South was running that show. We were completely supportive.

HERSHBERG: Just one very brief inquiry primarily to the Americans but also to the Korean side. The Ambassador just mentioned in passing South Vietnam. I’d just be curious if any of you had any comment on the broader relevance of the waning of the Vietnam War during this period. And the reason I raise it is that the impression had been given in some accounts that during the Johnso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ar in Vietnam gave Seoul a great deal of leverage on relations with Washington because they could always hint at withdrawing those troops which the Johnson Administration highly valued. As the U.S. role in Vietnam diminished during this period, does that lead to a lessening of South Korean leverage on Washington and in general, how important is the Vietnam War in the broader relationship? Is it peripheral or is it evolving from very important to far less important?

PICARD: Let me just return to the question before about the talks and the American role or concern or guidance that might have been given in this period of 1971 to 1973. I would certainly second what Ambassador O’Donohue said. This was a Korean show from start to finish and they kept us informed as the cable traffic shows. We had very little in trying to guide it,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was we did not look at it in terms of Korean unification. What we thought was going on here was at best some humanitarian alleviation of the situation by the

families and so forth. That conceivably would be a good thing if it could come out of it, otherwise it did not loom very large in the overall set of issues that the desk in Washington and the embassy were concerned about. There were a lot of other things going on during that period, everything from what later came to be called Koreagate, a concern about what the Korean CIA was doing in Washington, the Kim Dae-jung kidnapp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reafter. These were things that the U.S. government was focusing on and was concerned about. The North-South talks were interesting and encouraging and fit into the overall merging pattern of détente, but this wasn’t a central driving force in U.S.-Korean relations at the time.

On Vietnam I am probably speaking more out of ignorance than information, but while we certainly wanted the Korean troops to stay, it didn’t seem to me that it gave the Koreans a great deal of leverage.

O’DONOHUE: Well, there was leverage, but it was all economic. When we first negotiated with the Koreans in 1963 or 1964, or whenever it was, the Korean economic role in Vietnam was viewed as a very modest one. Over time it became one of the driving element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You had Korean companies that, I think one of them packed furniture, then went out and found out that they could compete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So it has the economic leverage, certainly, trying to get more each time was an aspect, and at the very end of course it was sort of keeping them there so that they didn’t get out prematurely from our point of view. But somehow or another, the Korean domestic situation in this whole period bubbled, and that had a significant role. But somehow or another the Korean forces in Vietnam didn’t ever seem to be part of our equation in how we dealt with the Park government outside of keeping them there.

LEE: Regarding the question raised by Professor Ryoo, I think that particular passage that Professor Ryoo quotes from the Symington Subcommittee record should be evaluated against the backdrop and also in the context of the time during which there were such major outbursts of military provocations from the North Korean side. I mean the commando raid against the Blue House and also the massive landing of North Korean commando troops in the fall of 1968, and the seizure



WILLIAM STUECK

“[...] The Vietnam situation figured very prominently in bearing upon South Korea’s response to North Korea, as well as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uth Korea was really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development [...]”

of the Pueblo, and also the downing of the EC-121 the following year. Because of th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trying to pursue a very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even preparing certain military capabilities to put to use in a retaliatory attack. So Washington was trying very hard to restrain the Park government, to dissuade the Park government from resorting to any drastic military actions. And that reference to encouraging South Korea to think about engaging in a direct dialogue to North Korea should be evaluated as part of the U.S. effort to restra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at particular timeframe.

Around that time, the Vietnam situation figured very prominently in bearing upon South Korea’s response to North Korea, as well as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uth Korea was really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development, particularly for one reason. At that time, South Korea was maintaining 50,000 troops in Vietnam, and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South Korea too had to create in the troop withdrawal process, in which case it had to involv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which were going to create a hell of a problem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ke accommodations for this troop withdrawal. The fact that Washington was proceeding without the sufficient amount of prior consultation was creating so much of a concern on the part of South Korea.

C. KIM: I wanted to just raise one question referring to the regional context that sort of dovetails with this conversation. In our discussion so far there’s been very little reference to Japan. I’m wondering based on some of the documents in the reader that allude to real fears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wake of the Nixon Doctrine of some of the security burdens being shifted to Japan, the fears that this would be recommend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at Japan would then assume a larger role in Asia Pacific. I’d like to ask whether this was a real concern, whether there were grounds for such fears, and to see if any on the Korean or American side could shed light on the way in which Japan’s role was perceived in this shifting geopolitical context.

O’DONOHUE: Again, this isn’t speaking in terms of any particular knowledge of anything. However, overall in that period, the Japanese tended to view the United

THE RISE AND FALL OF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SHIN JONGDAE

States as responsible for security. They didn’t want headaches connected with it. So it would have been very unrealistic on our part to have expected much. Japan already, in a sense, had allowed the UN command to exercise access in that, so there was no likelihood in that period of the Japanese playing a role. Now, what was interesting indeed in that period and before, when you talk to the Japanese about Korean security, from their perspective you would have thought you were talking about a peninsula off Antarctica. It was that was our responsibility. This changed dramatically, perhaps before, but certainly in the Carter period with the second division announcement. That really bothered them. They saw this as impacting their security. Essentially from that time, we showed a much more active interest. Now it was not troops or that sort of thing, which they couldn’t do, but in the sense that it highlighted that the American presence was not the given that they had thought, and it led to a much more active Japanese involvement in security dialogue.

PICARD: I was in the embassy in Tokyo for the two years or so before coming to work on Korean affairs, and I would just second the view that insofar as anyone who was following Japan at that time was concerned, the idea that anything having to do with Korea could be turned over to Japan was not in anybody’s thinking, and certainly was not in the Japanese. If you were following the Japanese view you couldn’t even have talked to them about this.

THOMPSON: You’ve seen in the documents that Washington wanted a study of what the possible reactions would be regarding a change in the UN command and they wanted to know what Japan’s reaction might be. I was in a discussion with our ambassador, and I’m pretty sure Ambassador O’Donohue and Ambassador Habib said that you know Japan might have some concern about eventual Korean unification because they might think that a united Korea could get the best of them.



AMBASSADOR DANIEL O'DONOHUE